



■ 연구보고서 2013-19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이현주 · 강상경 · 김수완 · 이선우 · 전지현

【책임연구자】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가난한 사람들의 일과 삶: 심리사회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공저)

【공동연구진】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수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선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지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19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발행일 2013년

저자 이현주 외

발행인 최병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122-705)

전화 대표전화: 02)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한디디자인

가격 7,000원

발간사 <<

과거 20여 년 동안 사회정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사회 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다. 주요한 선거 때마다 사회정책과 관련된 후보의 공약은 국민의 핵심적인 관심사가 되어 왔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식, 복지의식은 연구 주제로 보다 자주 선택되었다. 한편 근로복지 또는 근로빈곤층 대책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면서 근로에 대한 국민의식도 사회정책 영역에서 주목하게 되었다.

정책은 대개 국민의 의식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국민들의 선거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정치에서 국민의 의식이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 국민의 의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은 이상적이면서 현실적합성이 높은 정책을 기획하는데 기본이다. 본 연구는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복지확충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중심으로 논의를 한정하지 않고 사회정책과 관련된 의식의 영역을 근로에 대한 의식을 포함하여 넓게 확장하고 있으며 의식의 변화를 포괄하는 등 기존 연구의 시도를 망라하면서 그 이상으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의 영향도 폭넓게 고려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 뿐 아니라 사회정책에서 주요 집단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의식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을 보다 상세하게, 그리고 새로운 측면에서 조망하고 있다.

사회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자 뿐 아니라 사회정책 전문가에게도 본 연구가 의미가 있는 정보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도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정책과 관련된 논쟁이 거의 매일 진행 중이다. 본 연구가 국민의 의식을 제대로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는 연구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본 연구가 이후 보다 심층적인 유관 연구의 출발을 촉발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이현주 연구위원의 주관 하에 원내의 전지현 전문연구원, 그리고 원외의 강상경 서울대학교 교수, 김수완 강남대학교 교수, 이선우 인제대학교 교수의 참여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 대해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학계 연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적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힌다.

201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내용	15
제3절 연구방법	18
제2장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문제 구성	21
제1절 선행연구의 동향	23
제2절 사회정책에 대한 의식의 분류와 활용	28
제3절 복지의식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31
제4절 연구문제의 구성	34
제3장 사회정책 관련 의식의 특성과 지형	37
제1절 사회정책 관련 국민인식의 특징	40
제2절 사회정책 관련 국민인식의 구성	61
제3절 국민인식을 중심으로 한 잠재적 집단분석	69
제4장 복지의식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81
제1절 연구문제와 영향요인에 대한 검토	83
제2절 연구방법	88
제3절 영향요인 분석결과	93
제4절 소결: 결과의 요약과 해석	96

제5장 복지의식 변화의 궤적 및 영향요인 분석	99
제1절 복지의식 변화의 분석 의의	101
제2절 연구모형 및 질문	103
제3절 연구방법	106
제4절 분석결과	114
제5절 소결: 결과의 요약과 해석	130
제6장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의식 수준과 영향요인	135
제1절 노인·장애인 의식분석의 의의와 연구문제	137
제2절 연구방법	140
제3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42
제4절 노인의 복지의식 실태와 영향 요인 분석	158
제5절 장애인의 복지의식 실태와 영향 요인 분석	170
제6절 소결: 결과의 요약과 해석	183
제7장 근로에 대한 의식 국가비교	187
제1절 근로에 대한 의식의 의의와 연구 문제	189
제2절 연구방법	198
제3절 근로에 대한 의식 실태 비교	201
제4절 근로시간에 대한 영향요인 국가 비교	210
제5절 소결: 결과의 요약과 해석	221

제8장 결론	223
제1절 결과의 종합	225
제2절 정책적 함의	229
참고문헌	233

표 목차

〈표 1-1〉 복지인식 부가조사의 내용(8차 기준)	19
〈표 3-1〉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문항	41
〈표 3-2〉 한국사회의 계층구조에 대한 인식	43
〈표 3-3〉 바람직한 계층구조에 대한 인식	43
〈표 3-4〉 소득격차 및 정부책임에 대한 동의정도	44
〈표 3-5〉 빈곤 원인별 중요성 인식	45
〈표 3-6〉 연령대별 빈곤 원인에 대한 중요성 인식	46
〈표 3-7〉 학력별 빈곤 원인에 대한 중요성 인식	47
〈표 3-8〉 소득분위별 빈곤 원인에 대한 중요성 인식	48
〈표 3-9〉 정책영역별 정부지출 지지도	49
〈표 3-10〉 연령대별 정책영역별 정부지출 지지도	50
〈표 3-11〉 국가복지에 대한 동의 수준	51
〈표 3-12〉 연령대별 국가복지에 대한 동의 수준	52
〈표 3-13〉 학력별 국가복지에 대한 동의 수준	53
〈표 3-14〉 소득분위별 국가복지에 대한 동의 수준	54
〈표 3-15〉 성장과 분배에 대한 중요성 인식	55
〈표 3-16〉 연령대별/학력별 성장과 분배에 대한 중요성 인식	55
〈표 3-17〉 복지증세에 대한 지지	56
〈표 3-18〉 연령대별/학력별/소득분위별 복지증세에 대한 지지	56
〈표 3-19〉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57
〈표 3-20〉 복지영역별 운영 및 전달체계 주체에 대한 지지도	58
〈표 3-21〉 복지영역별 재정부담 주체에 대한 지지도	59
〈표 3-22〉 연령대별 재정부담 주체에 대한 지지도	60
〈표 3-23〉 요인분석에 활용한 변수 및 척도 설명	61
〈표 3-24〉 사회정책 관련 의식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64
〈표 3-25〉 요인군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65

〈표 3-26〉 신뢰도 분석 결과: 국가의 책임을 중심으로 분석	68
〈표 3-27〉 잠재집단분석에 활용한 요인 및 요인별 변수	71
〈표 3-28〉 잠재집단모형 적합도 비교	72
〈표 3-29〉 잠재집단별 조건부 응답확률 및 사례할당 비율	74
〈표 3-30〉 잠재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77
〈표 3-31〉 잠재집단별 복지의식 관련 요인 특성	80
〈표 4-1〉 종속변수-정부책임에 대한 인식-의 구성	89
〈표 4-2〉 독립변수의 구성과 처리	91
〈표 4-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92
〈표 4-4〉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에 대한 요인의 영향 분석 결과	94
〈표 5-1〉 기술통계: 연구참여자들의 특성	114
〈표 5-2〉 복지의식궤적의 연령대별 차이	117
〈표 5-3〉 복지의식궤적의 소득수준별 차이	118
〈표 5-4〉 복지의식궤적의 교육수준별 차이	119
〈표 5-5〉 조건부 모형: 복지의식궤적의 예측요인	121
〈표 5-6〉 복지의식궤적의 예측요인의 연령대 별 차이	125
〈표 5-7〉 복지의식궤적 예측요인의 소득수준별 차이	126
〈표 5-8〉 복지의식궤적의 예측요인의 교육수준 별 차이	128
〈표 6-1〉 노인과 비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143
〈표 6-2〉 노인과 비노인의 경제활동 특성 비교	145
〈표 6-3〉 노인과 비노인의 경제상태 비교	147
〈표 6-4〉 노인과 비노인의 복지수급 특성 비교	149
〈표 6-5〉 노인과 비노인의 주관적 인식 비교	150
〈표 6-6〉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152
〈표 6-7〉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제 관련 특성 비교	154
〈표 6-8〉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제상태 비교	155
〈표 6-9〉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복지수급 경험 비교	157
〈표 6-10〉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주관적 인식 비교	158

〈표 6-11〉 노인과 비노인의 문항 별 복지의식 비교	160
〈표 6-12〉 노인과 비노인의 평균 복지의식수준 차이	165
〈표 6-13〉 노인과 비노인의 복지증세 태도 비교	165
〈표 6-14〉 노인과 비노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회귀분석	167
〈표 6-15〉 노인과 비노인의 복지증세 지지에 대한 회귀분석	169
〈표 6-16〉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항 별 복지의식 비교	173
〈표 6-17〉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균 복지의식수준 차이	177
〈표 6-18〉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복지증세 태도 비교	177
〈표 6-19〉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회귀분석	180
〈표 6-20〉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복지증세에 대한 회귀분석	182
〈표 7-1〉 변수의 측정	200
〈표 7-2〉 국가별 기초통계 II : 평균값	203
〈표 7-3〉 국가별 기초통계 II	205
〈표 7-4〉 일에 대한 인식 비교 : 시간 자율성의 중요성	207
〈표 7-5〉 일에 대한 인식 비교 : 유급노동의 의미	207
〈표 7-6〉 일에 대한 인식 비교 : 유급노동의 의미	208
〈표 7-7〉 일에 대한 인식 비교 : 업무대체가능성	209
〈표 7-8〉 일-가족생활 갈등에 대한 인식 비교 : 직장일이 가정생활 방해하는 경험	210
〈표 7-9〉 다층모형 분석결과 (고정효과)	213
〈표 7-10〉 모형의 적합도	215
〈표 7-11〉 선호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요인의 영향: 경로분석 결과	217
〈표 7-12〉 성별의 직접간접 및 총효과 분해	220

그림 목차

[그림 3-1] 잠재집단별 친복지 범주의 조건부 응답확률	75
[그림 3-2] 잠재집단별 반복지 범주의 조건부 응답확률	76
[그림 5-1] 연구모형	104
[그림 5-2] 복지의식의 무조건부 모형	110
[그림 5-3] 무조건부 모형의 다중집단분석	111
[그림 5-4] 조건부 모형	112
[그림 5-5] 조건부 모형의 다중집단분석	113
[그림 5-6] 무조건부 모형의 분석결과	115
[그림 5-7] 복지의식궤적의 연령대별 차이	117
[그림 5-8] 복지의식궤적의 소득수준별 차이	118
[그림 5-9] 복지의식궤적의 교육수준별 차이	120
[그림 7-1] 시간제 근로 선호 비율 : 국가비교 기초통계	206
[그림 7-2] 연구모형 1 : 다층 모형	211
[그림 7-3] 연구모형 2 : 경로모형	214



Abstract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in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in Korea. This study is composed of five parts: analysis for the construct of the attitudes, analysis for the determinants, analysis for the change, analysis for the attitudes of the old people and the handicapped, analysis for the attitudes related to work.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lfare attitudes could be categorized 11 sub-attitudes and the people is grouped into three groups by welfare attitudes. Second, assets, income, social experience, and political ideology influence on welfare attitudes. Third, positive attitudes has decreased for the past six years. And the slope of the change depends on age, education and so on. Forth, welfare attitudes of the old people and the disabled is different from it of young people, the non-disabled. And determinants of the attitudes of them is different, too. Last, attitudes related to work in Korea is a little special because the people value on monetary reward in work. But the determinants of work hour preference could not be revealed in Korea.



요약 <<

본 연구는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을 연구의 주제로 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복지의식으로 다루어져왔던 의식의 범주를 확대하여 근로와 관련된 의식을 포괄하고 사회정책 관련 의식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당연, 그 이유는 향후 사회정책의 전개에 이 국민의식이 작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정책, 근로에 대한 국민의식이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그 국민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경쟁적이었던 입장 중 어느 한 입장에 기반을 두고 이를 검증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시도라기보다는 보다, 포괄적이고 탐색적인 분석을 지향한다. 기존 연구의 한계를 고려한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첫째,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의 구성 범주들과 그 의식범주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한다. 둘째, 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쟁점이 되었던 요인들의 조작화를 보완하고 도외시되었던 영향요인에 대하여 주목한다. 셋째, 사회정책이 빠르게 변화되는 점을 감안, 의식의 변화를 이해할 기회를 마련한다. 넷째, 노인과 장애인 등 주요 이해집단의 의식에 대하여 파악한다. 다섯째, 근로에 대한 의식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 본론은 위의 연구 목적을 연구문제로 구체화하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각 장은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이라는 공통 주제를 다루면서도 각기 다른 문제의식을 초점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성격을 갖는다. 본론의 대부분은 계량분석으로 진행되었다. 활용된 자료는

4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한국복지패널자료 중 복지인식 부가조사 자료와 ISSP의 원자료이다.

제3장에서는 사회정책 관련 국민의식의 지형과 함께 의식을 중심으로 볼 때 국민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소득격차와 관련된 정부책임에 대한 인식’, ‘빈곤층 지원에 대한 태도’, ‘빈곤원인에 대한 인식’, ‘정책영역별 정부의 지출 확대에 대한 지지’, ‘성장과 분배에 대한 태도’, ‘국가복지의 확대에 대한 인식’, ‘가족 부양에 대한 태도’, ‘복지증세에 대한 태도’를 포괄한 국민 의식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정책 관련 의식은 11개의 요인군으로 범주화되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12개 문항이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지 지 수준’이라는 내용으로 지수화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잠재적 집단분석 결과, 우리나라 성인이 복지 의식을 중심으로 3개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복지확대 반대집단>, <복지확대 지지집단>, 그리고 <잔여 복지지지집단>이 그 집단들이다. <잔여복지지지집단>은 대체로 연령이 높은 응답자가 많고 복지확대지지집단과 비교하여 재산과 소득이 높으며 근로연령대를 표적으로 하는 아동 보육과 교육비지원, 실업자 및 근로빈곤층 지원에 대하여 지지가 약한 특징을 보였다. 반면 <복지확대지지집단>은 근로능력자 지원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복지 영역에서 정부의 역할을 지지하고 있다. 이 집단은 대개 젊은 고용불안정 집단으로 아동을 양육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며 소득과 재산이 적은 집단으로 추정된다.

제4장에서는 복지의식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재탐색을 시도하였다. 계급, 계층, 이해관계와 주관적 인식 등과 함께 재산과 같은 새로운 요인의 영향을 탐색하였다. 종합적 분석으로 관련 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후 각 요인의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복지의식에 대한 계급의 영향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유사하였다. 반면 계층의 영향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해

관계의 영향도 강하게 나타났다. 소득과 재산이 많을수록 복지에 대하여 부정적이었으며 기존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재산의 영향이 더 강력하였다. 이해관계 요인 중 복지수급경험은 친복지적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잠재적 복지수혜자인 여성과 노인은 복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다. 교육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주관적 인식으로 투입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던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도 그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단, 정치적인 진보성의 수준은 복지에 대한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제5장에서는 복지의식의 변화 궤적을 분석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지지 수준은 평균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의식 궤적은 연령대별, 소득수준별, 교육수준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연령이 높을수록 지지가 낮았으나 그 하락의 속도가 느리게 나타났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복지의식이 다소 높았지만 빠르게 낮아지고 있었다. 통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계층변수들 중에서는 시장소득만 복지의식 궤적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고, 복지경험 변수들 중에서는 정부보조금 수령액만이 복지의식 궤적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연령대(60세 이상 vs. 미만), 교육수준, 소득수준별 복지의식에 대한 관련 요인의 영향은 상이하였다. 단, 성별에 따라서는 예측요인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6장에서는 사회정책의 주 대상 집단인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의식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은 비노인과 비교하여 복지에 대하여 덜 지지적이었고 구체적 지지 내용도 상이하였다. 노인은 비노인보다 건강보험 및 보건, 국민연금(노령연금), 노인지원에 대한 지출을 지지하고, 주거지원, 근로빈곤층지원, 대학무상교육, 무상보육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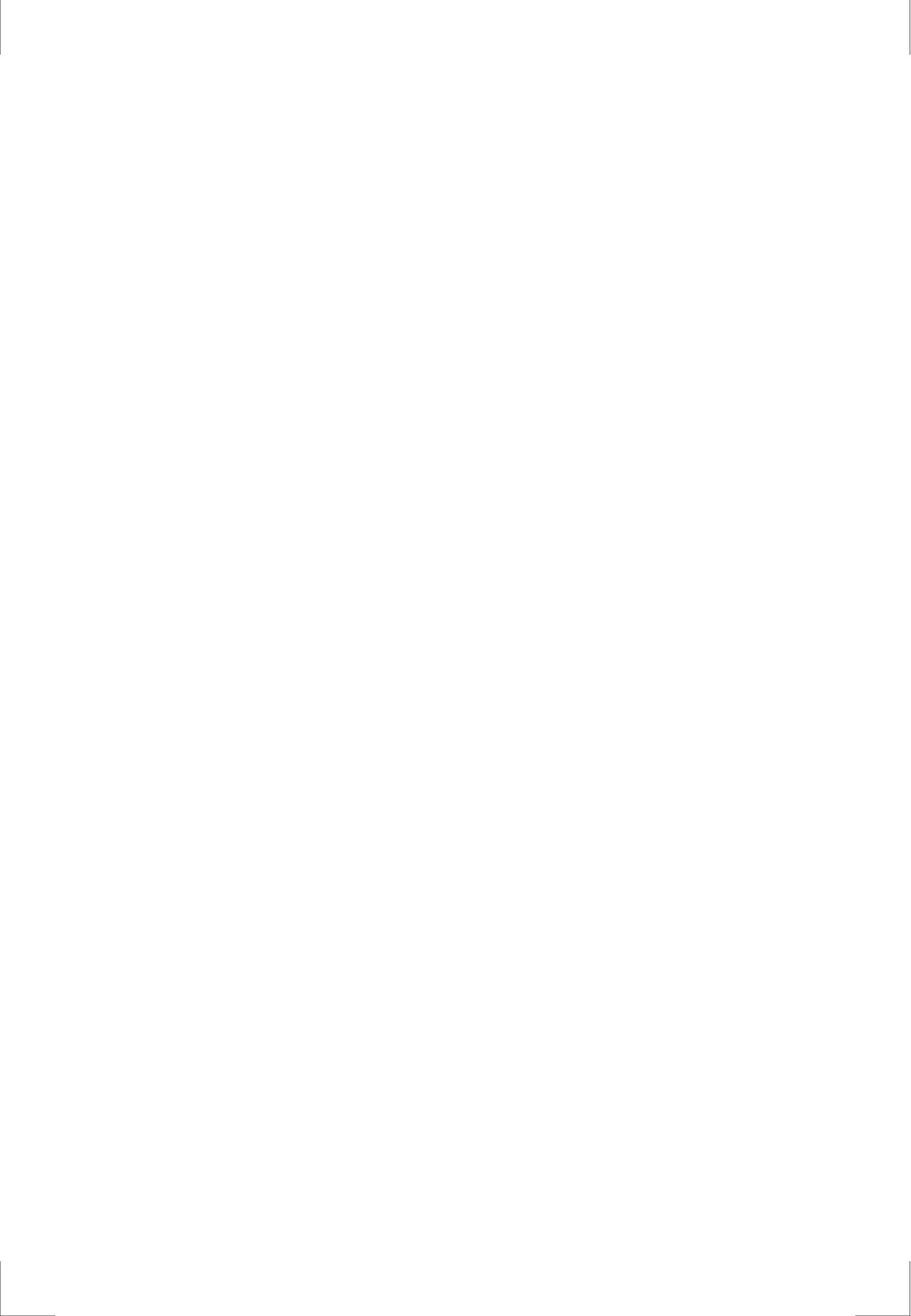
공은 덜 지지하였다.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노인의 복지의식은 친복지적이었으나 총자산은 증가할수록 반복지적이었다. 복지증세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경향은 유사하였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장애인주거지원, 빈곤층생활지원, 노인생활지원, 장애인생활지원에 대해 더 지지적이었으나 대학교육 무상지원에 대해 덜 지지적이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복지증세에 더 지지적이었고, 장애인은 교육연수가 짧을수록, 자산이 많을수록 복지에 부정적이었다. 지지하는 정책영역을 볼 때,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의식은 자기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었다. 복지증세에 대한 요인의 영향 분석에서 노인복지서비스와 장애인복지서비스 수급 경험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서비스 만족도가 낮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7장에서는 사회정책과 관련된 주요한 의식의 영역으로 근로에 대한 의식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의 근로에 대한 태도를 국제비교를 통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최근 사회정책의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분석을 초점화하였다. ISSP의 2005년 자료를 활용하여 OECD 국가 18개국 핵심 근로연령대 근로자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근로에 대한 의식을 보면 여타의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일을 금전적 보상과 연결하는 경향이 강하고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는 서로 방해받은 경험이 적다고 응답하여 일-가정 양립에 민감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층분석과 경로분석으로 선호하는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분석 국가 전체로 보면, 개인의 근로시간 '선호'가 계급적·구조적 요인보다 개인 취향에 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유급노동에 의미를 두는 정도가 약하고, 시간자율성을 중시하는 사실이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하였다. 숙련수준은 근로시간 선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실제 근로시간'

에는 개인의 근로시간 선호 뿐 아니라 계급의 영향도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숙련성이 낮고, 업무대체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제로 일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의 경우 위의 경향이 뚜렷하게 유의미하지 않아 근로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좀 숙고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의식을 지수화할 때, 신뢰도분석 등 필요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 집단에 따라서도 의식의 주요 범주가 상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정책과 관련된 의식이 매우 다양하며 각 내용이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정책적 해석이 필요하다. 복지의식을 정책설계에 반영할 때 의식의 내용 중 무엇을 고려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선택이 필요하다. 셋째, 복지에 대한 지지가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면, 그리고 고학력의 지지가 더 빠르게 하락하는 것과 복지수급자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제도의 합리적 설계와 사회적 공감 기회의 마련이 필요하다. 노인과 장애인을 비롯하여 인구집단별, 재산수준별, 그리고 소득수준별 복지의식이 상이하고 관련 요인의 영향도 달라서 복지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의 상황에서 본다면 복지수급의 확대가 미래 복지의 지지기반이 될 것만은 자명하다. 사회정책의 확충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복지확대가 미래의 든든한 지지 기반임이 분명하다.

*주요용어: 복지의식, 사회정책, 근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제2절 연구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본 연구는 사회정책, 그리고 최근 사회정책에서 핵심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근로와 관련된 국민의식을 연구의 주제로 하고 있다. 사회정책, 근로에 대한 국민의식이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그 국민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의식과 정책의 관계에 대한 입장은 다양하다. 연구자에 따라 의식이 정책을, 또는 정책이 의식을 규정한다고 전제하는 등 서로 다른 입장들이 있으며 일부 연구자는 사회정책의 발전 수준에 따라 양자의 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민의식이 사회정책의 발전에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복지의식을 다룬 많은 연구들이 그 연구의 의의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선거에 근거하는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의식은 각종 정책적 결정이나 사회 안정 및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 하지만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이 연구주제가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선진복지국가의 경우 1990년대 들어서면서 복지국가의 후퇴기에 국민의 의식이 어떠한지, 그 영향이 복지후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늦게 사회정책이 주요한 정치적·정책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나 태도도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물론 20여 년 전부터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지만 이러한 부류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최근이다. 혹자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작 즈음부터 복지 태도가 논쟁의 지점으로 끌어들여졌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더 첨예한 계기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무료급식이 정치 쟁점화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전반적으로 최근에는 국민의 사회정책에 대한 태도, 의식이 정치영역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정치권은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우리나라 복지정책, 사회정책의 향방에 더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을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를 넘어서면서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지정치가 본격화되는 사회적 환경과 유관한 변화라 하겠다. 본 연구는 기존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복지의식을 보다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그 특성을 규명하며, 논쟁에 쌓여있는 영향 요인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편 복지의식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에서 초점화되지 못하였던 복지의식의 변화, 사회정책에서 주요 집단인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의식, 그리고 근로에 대한 국민 의식을 논의하고자 한다. 얼마간의 연구가 축적된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분야에서 기존의 논의를 토대로 새로운 연구를 모색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복지의식에서 연구의 주제를 확장하여 전체적인 의식의 지형을 이해하고, 의식의 변화와 주요 집단의 의식규명으로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정책, 근로에 대한 국민의식¹⁾은 그 간 복지의식이나 태도로 명명되는 개념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국민의식이라는 개념도 복지의식과 같이 동일 사회 구성원들이 일정 수준

1) 의식이라는 개념은 태도와 구별되기도 한다. 의식은 사회현상에 대한 감정과 인상, 그리고 가치와 신념을 중심으로, 태도는 행동성향으로 사회적 관계적 성격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김영순 외, 2011 참조). 하지만 이 둘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국민의식을 조사하는 각종 설문에서 해당 문항을 이러한 기준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식과 태도를 아울러 의식이라 개념화하였다.

이상으로 집단 공유하는 의식이다. 그리고 그 경로는 다양하지만 사회적으로 학습이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복지의식이라는 개념으로 연구를 시작하기보다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라고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이유는 기존의 복지의식이라는 주제가 사회정책과 관련되는 더 많은 의식을 배제할 위험을 갖기 때문이다. 복지의식은 주로 친복지적인지를 가늠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논의되어왔으며 복지에 대한 정부 역할이 어떠하여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조작화되고 지수화되어 왔다. 즉, 복지의식이라는 개념의 고수가 자칫 빈곤의 원인에 대한 태도나 인식, 노동과 근로에 대한 태도나 인식, 불평등에 대한 태도나 인식 등 복지에서, 넓게 본다면 사회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여러 가지 의식, 인식, 태도를 간과하도록 하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일부에서는 기존의 복지의식이라는 개념과 유사하게 국민의식을 한정하여 정의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3장에서 사회정책에 대한 의식을 전체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국민의식의 특성을 논의하거나 또는 7장에서와 같이 근로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국민의식을 분석하는 부분에서는 단지 복지의식이라는 용어의 사용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국민의식을 다루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정책,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국민의 의식이나 태도를 논할 때 기존연구에서 복지의식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한 ‘정부 역할에 대한 의식’의 넘어서 좀 더 넓은 맥락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정책, 근로에 대한 국민의식이라는 개념아래, 근로·불평등이나 빈곤에 대한 태도, 복지책임의 주체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입장, 복지비용과 조세에 대한 태도 등 보다 넓은 의식의 하위 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주제를 확장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특정 이론에 한정하여 관련 요인의 영향을 분석한 점도

극복되어야 할 점이다. 대부분의 연구가 복지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면서도 관련이 있는 다른 요인들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 개별 연구의 주장을 견고하게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과거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은 빠르게 발전하여왔다. 당연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도 변화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국민의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하기 쉽지 않아 그 동안 국민의식의 변화를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관련된 설문조사가 표본이 다르거나 또는 설문의 상이하여 변화를 파악할 자료를 구성할만한 여건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동일한 대상의 의식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다행스럽게 국민의식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 한국복지패널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이 문제가 다소 완화되어 국민의식의 변화를 초보적 수준에서나마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자료는 표본의 수가 상대적으로 커서 전체 표본 중 노인과 장애인 등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도 가능하게 하였다. 사회정책에서 핵심적인 대상이자 이해집단인 이들 집단의 의식을 파악하는 것도 비로소 가능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면 첫째, 본 연구는 사회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우선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을 분석하여 한국 사회의 특이성을 밝히고자 한다. 국가의 역할이나 국민의 의무 등에 대한 국민의식 뿐 아니라 근로에 대한 국민 의식과 더불어 사회정책에 영향을 주는 국민의 인식을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관련요인의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확인과 함께 기존 연구에서 누락하였던 변인들을 포괄하여 요인들의 영향을 전반적으로 재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현 시점에서 이해할 뿐 아니라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국민의식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넷째, 사회정책에서 주

요 정책 대상이 되는 장애인과 노인을 중심으로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집단별로 초점화하여 파악함으로써 의식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내용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분석한 본 연구의 본론은 크게 다섯 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 제3장에서는 사회정책,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민의 의식을 규명한다.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 의식의 이해는 우선 국민의식을 구성하는 하위범주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그 의식의 하위 영역들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분석한다.

의식의 지형과 함께 의식을 중심으로 볼 때 국민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사회정책에 주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선거에서는 복지나 사회정책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국민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가 주 관심사가 되곤 한다. 그래서 본론의 첫 번째 부분에서 의식의 하위범주를 변수로 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구성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규명하였다. 잠재적 집단 분석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사회구성원이 의식을 중심으로 볼 때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파악하였다.

본론의 두 번째 부분 제4장에서는 복지의식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재탐색을 시도하였다. 계급, 계층, 이해관계와 주관적 인식 등 그동안의 연구들에서 다루었던 요인들의 영향을 재확인하고, 그 뿐 아니라 새로운 요인의 영향을 탐색하였다. 예를 들어 기존 연구에서 배제되어 온 재산, 신뢰와 같은 요인들이 복지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복지의식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계급결정론과 복지지위의 영향은 핵심적인 쟁점이 되어왔다. 계급을 넘어서는 사회적 균열구조의 확인은 주 쟁점 중

하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우리나라에서 계급이 복지의식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상대적으로 계층의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계층을 대변하는 변수는 주로 소득이었다. 소득은 우리사회에서 소비를 비롯한 일상의 수준이 의식에 더 크게 영향을 주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에서 자주 고려한 변수였다. 본 연구는 계층 변수를 재산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 자산의 경우 그간 쟁점이 되어온 계급과 계층의 영향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산이 계층을 대변하는 변수이기도 하지만 계급의 차이를 반영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신뢰를 요인으로 고려하는 것은 그간 물질적 이해에 집중한 관심사를 좀 더 넓혀서 사회적 의식의 영향을 고려하는 시도이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고려한 요인들의 포괄적인 투입을 시도하여 전체적으로 기존의 주요 요인들의 영향이 관련 요인들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론의 세 번째 부분, 제5장에서는 복지의식의 변화를 규명한다. 복지 의식의 변화 궤적을 분석하여 특정 성향의 의식을 가진 집단의 의식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료의 한계 등으로 기존 연구 중 의식의 변화를 분석한 사례는 드물다. 한국복지패널 자료가 실시한 국민의식 부가조사가 3년 단위로 3차에 걸쳐 진행하여 온 바, 동 자료를 활용하여 복지의식에 대한 종단적 분석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의식이 어떠한 궤적으로 변화되어 왔는지, 이러한 변화와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론의 네 번째 부분, 제6장에서는 사회정책의 주 대상 집단인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의식이 어떠한 특이성을 지니는지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노인과 장애인의 의식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연령과 장애여부가 독립변수로 투입된 사례는 적지 않아서 그 결과들이 노인과 장애인 집단의 복지의식을 짐작하도록 돕고 있는 수준이다. 관련 연구들을 보면 노인은 복지에 부정적 태도를 가지는 반면 장애인은 지지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복지수혜집단의 복지에 대한 의식은 긍정적이지만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노인과 장애인의 의식은 그 지지도가 낮아서 복지의식에서 항상 이슈가 되어왔던 의식의 이중성이 노인과 장애인과 같은 정책 대상의 경우,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갖도록 하기도 한다.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의식의 특성과 관련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여 관련된 문제의식들에 답을 찾자 하였다.

본론의 다섯 번째 부분, 제7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근로에 대한 태도를 국제비교를 통하여 규명하였다. 근로에 대한 태도는 사회정책의 향방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대표적인 예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강하고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수용이 약한 사회에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정책의 발달은 어렵다. 1997-8년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의 실업사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근로빈곤층을 포괄하는 공공부조의 도입을 가능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근로에 대한 인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식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의 근로에 대한 태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국가비교를 통하여 파악하고 그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국내 설문조사 자료의 경우 근로에 대한 의식을 묻는 설문내용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따라서 이 부분의 분석에서는 국제사회조사(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ISSP)의 근로에 대한 설문(work orientation module)을 활용하였다. 근로에 대한 태도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시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초점화하여 그 특성에 명확하게 접근하고자 하

였다.

앞서 소개한 본 연구의 본론과 함께 본 연구의 도입부, 제2장에서는 본 연구가 참고한 기존연구에 대하여 기술하고, 본 연구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함의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제8장, 결론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이라는 비교적 큰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다. 본 연구의 각장은 이 주제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연구 문제들을 초점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동 주제를 다루면서도 각장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구성 상 특성으로 인하여 제2장에서 기존 연구들에 대한 전반적 분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장에서 기존연구에 대한 분석과 분석방법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3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기존 연구의 경향과 과제를 검토하였으며 이 과정은 문헌검토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국내외의 연구를 수집하여 분석하면서 각 연구에서 주제로 한 의식이 무엇으로 구성되고 조작화되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비교하였으며 의식에 대한 각 요인의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근거로 하는 이론과 분석결과, 그리고 그 결과를 초래한 분석의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회정책, 복지에 국민의식 분석에서 기초로 하는 이론과 분석 방법에 대한 사전 검토로 본 연구의 분석틀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론의 대부분은 계량분석으로 진행되었다. 주로 활용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자료 중 복지인식 부가조사 자료와 ISSP의 원자료이다. 복지인

식에 대한 조사는 세 차례의 부가조사로 진행되었는데 2007년 2차 조사, 2010년 5차 조사, 그리고 2013년 8차 조사의 부가조사로 진행되었다. 8차 조사를 기준으로 복지인식 부가조사의 조사대상 및 조사기준시점을 보면 조사대상은 7차 복지패널 표본가구 중 지역별, 계층별 확률비례추출법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추출된 표본가구의 만 19세 이상 모든 가구원이며, 기준 응답시점은 조사일인 2013년 상반기 현재이다. 참고로 조사일은 2013년 1월~2013년 6월이다.

〈표 1-1〉 복지인식 부가조사의 내용(8차 기준)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I.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인식과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계층구조 및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 - 제도영역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에 대한 인식 - 복지영역별 운영 및 재정부담 주체에 대한 인식
II. 복지재원 및 대상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 수준 및 부담에 대한 인식 - 세금 사용 영역 및 방식에 대한 인식
III. 정치참여와 성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참여 정도 및 정치성향에 대한 인식

한국복지패널자료의 경우, 일부 분석은 8차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단년도 분석으로 진행되었는데 표본의 대표치와 요인의 영향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선택이 불가피하였다. 그 이유는 2차와 5차 부가조사 자료는 그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 의식의 변화궤적은 2,5,8차 부가조사 자료가 활용되었으나 8차를 제외한 2,5차 자료의 경우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분석에서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보다 구체적인 한계와 대안모색은 각 장에 자세하게 설명되었다.

근로에 대한 분석에서 필요한 자료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그만큼 근로를 중심으로 국민의 의식을 규명한 역사가 취약함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근로에 대한 인식의 분석에서는 ISSP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ISSP는 가장 상세한 문항으로 의식에 대하여 조사된 자료이기도 하면서 외국과의 비교도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지는 자료이다. 단, ISSP의 경우 조사가 진행되는 해마다 주제가 달라서 국민의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근로에 대하여 분석하면서 관련이 있는 다른 국민의식을 함께 고찰하는 것은 어렵다. ISSP는 1985년부터 분석이 가능한 자료로 약 50여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3년부터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어 활용이 가능한 조사 자료의 역사도 짧다는 한계가 있다. 동 자료는 약 10여개의 모듈(module)로 구성된 자료로서 각 모듈은 5년-8년 간격으로 반복하여 조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2005년의 일에 대한 지향 조사 자료(2005 Work Orientation Module)이다.

분석방법은 각 장의 분석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제3장에서는 요인분석과 단순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잠재적 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요인의 영향을 선형회귀분석을 활용하여 파악하였다. 제5장에서는 잠재성장모델을 사용하여 종단분석이 진행되었다. 제6장에서는 기술통계와 회귀분석 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되었고, 제7장에서는 매크로 자료를 병행 활용하면서 경로분석으로 국가 비교연구가 진행되었다.



제2장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문제 구성

제1절 선행연구의 동향

제2절 사회정책에 대한 의식의 분류와 활용

제3절 복지의식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제4절 연구문제의 구성



2

선행연구 검토와 << 연구문제 구성

제1절 선행연구의 동향

사회정책에 대한 의식을 연구의 주제로 한 연구들은 적지 않다. 국내 연구도 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해, 2000년대 후반 이후 매우 많은 연구들이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정책의 확충과 발달, 그리고 정치적 의제화와 무관하지 않은 경향일 것이다.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은 이러한 의식이나 태도의 특성을 밝히거나 또는 특성을 발현시키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복지의식에 대한 국내 연구를 구분하여 보자면 복지 인식의 전반적 특성을 분석하고 그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김영순·여유진, 2011; 최유석, 2011; 김신영, 2010; 이아름·김사현, 2010; 안상훈 2009; 주은선·백정미, 2007; 백정비·주은선·김은지, 2008; 이성균, 2002; 조돈문, 2001), 특정 정책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연구(권승, 2012; 김수완, 2011; 김사현, 2010), 특정 집단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김신영, 2008; 황선자, 2011)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에 대한 의식을 분석한 연구들은 가장 전형적으로 그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영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도 특성 분석에서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복지의식에 대한 분석은 대개 복지 확충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초점으로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복지 의식의 특징에 대한 기술은 대개 특정 시점에 한정하고 전 인구 대표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다.

본 연구는 사회정책에 대한 의식을 분석한 연구들이 특정한 의식에 국한하여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면서도 분석에서 초점으로 하는 의식이 다른 관련 의식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지, 그래서 주제로 하는 의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복지인식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대개의 연구들은 정부의 역할과 예산마련을 위한 증세의 감수 여부 등을 빼지 않는다. 예시된 의식의 범주가 사회정책의 발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변수들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이 선택의 근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인식을 중심 내용으로 한 이유들이 각 연구의 목적에서 설명되고 있지만 이러한 인식이 과연 연구 목적 달성에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 과정은 생략되었다. 반면 위에서 언급한 의식을 중심으로 복지인식을 구성하는 전략은 ‘불평등에 대한 태도’, ‘빈곤의 책임에 대한 이해’, ‘복지의 주체로서 개인과 가족의 책임 인정 수준’ 등 사회정책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의식의 범주들을 간과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에 대한 인식도 연구의 주제로서 선택된 사례가 매우 희박하다. 근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자료가 별로 없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근로에 대한 분석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근로에 대한 인식이 사회정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간과되었다고 비판받을 만하다.

국내의 경우 근로에 대한 태도, 일에 대한 의식, 의미부여 등에 대한 연구는 겨우 몇 편에 지나지 않는다(김지선·이훈, 2008; Kim, Kyong Dong·Hae Young, Lee., 1977; 이현주·안서현·박경희, 2009). 주로 자료의 특성으로 인하여 근로 태도, 일에 대한 인식 등 특정 범주의 태도에서 나타난 특징을 비교하여 그 태도의 상이성과 복지레짐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사회정책을 중심에 두고 연구가 진행되기 보다는 여가활용이나 경영 등이 연구의 목적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반면 해외의 경우 근로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사회정책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내는 연구들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중 국제적인 자료를 활용한 국가비교연구가 많다(Andolsek, D. M. and Stebe, J. , 2004; Hult, C. & Svallfors S., 2002).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되 매크로 자료를 공히 이용하면서 동일한 성격의 국가군에서 발견되는 관련요인을 규명하는 시도가 많다. 국내 연구 중 이현주 외(2009)의 연구가 이러한 연구유형에 속한다. 하지만 근로에 대한 태도를 각각도로 분석한 연구들의 축척이 턱없이 부족하다. 근로연계복지가 사회정책에서 유행처럼 언급되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국민의 근로에 대한 의식은 제대로 조망되지 못하여왔다.

사회정책에 대한 의식을 분석함에 있어서 그 분석 대상을 우리나라 성인 전체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고 대상의 세분화와 정교한 의식분석이 부족하였다는 점에도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사회정책과 관련된 정치 이슈가 등장할 때, 인구 각 집단들이 상이하게 반응하였던 경험이 있었지만 사회의 특정 집단의 의식에 대하여 집중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중요한 복지 대상 집단의 인식에 대한 분석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연구는 있으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매우 드물다. 노인복지서비스 수급 경험이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김사현(2012)의 연구가 노인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도이다. 그 밖에는 청소년과 노조원집단을 대상으로 의식을 분석한 연구가 두 편이 있을 뿐이다(김신영, 2008; 황선자, 2011). 이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집단에 따라 의식이 상이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

정 집단이나 특정 이슈에 대한 초점화가 보완되어야 한다. 어떤 집단의 의식을 분석할 것인가는 연구자의 문제인식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적어도 노인과 장애인 등 주요 정책 대상 집단의 의식은 향후 사회정책의 향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므로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 의식분석에서 활용이 가능한 자료들을 감안할 때 종단적 연구로 의식의 변화를 포착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음은 분명하다. 외국의 경우,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여 복지국가의 향방에 대하여 논하는 연구에 부여하는 의미가 크다. 복지인식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가 변화되는지를 핵심적 연구문제로 하여 복지국가 축소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복지의식이나 태도가 안정적이고, 심지어 복지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진다는 결론은 보여주기도 하였다(Svallfors, 2011).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회정책의 환경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의식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정책 관련 의식을 분석한 많은 연구들이 의식특성을 기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특성을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려 하였다. 국내 기존 연구에서도 궁극적인 쟁점은 우리나라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였다. 고려된 영향요인은 계급과 계층, 이해관계, 그리고 개인의 정치적 입장이나 주관적 인식 등 다양하였고, 연구에 따라 매우 폭넓게 분석되었다.

복지의식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 중 해외의 연구들은 이미 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는데(Taylor-Gooby, 1993; Evans, 1993; Bean & Papadakis, 1998 등) 유럽 등을 대상국으로 한 연구에서는 계급의 영향이 유지된다는 결과도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반면 국내의 연구는 계급의 영향이 발견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의 단서를 찾고자 하는 연구가 다수이다.

복지의식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국내 연구의 공통적 한계는 변수 투입에서 포괄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많은 연구들이 영향요인 중 일부를 선택적으로 투입하여 다른 관련 요인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관심을 둔 요인의 영향도 다른 요인의 통제가 없는 상태로 파악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일부는 연구자의 선택이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일부는 자료의 한계에서 비롯된 경향이다.

복지인식에 대한 이해에서 핵심적 쟁점 중 하나는 비일관성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의 대부분이 한국의 경우 비일관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김영순·여유진, 2011). 하지만 일부 연구(이성균, 2002)의 경우에는 비일관성이 소득하위계층과 같은 특정 집단을 합산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비일관성은 일관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즉, 이전의 다른 사회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결과들과 비교할 때,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과연 이러한 비일관성은 한국의 특성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본질적으로 논리는 같고 다른 맥락에서 빚어진 현상의 차이인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만약 비일관성이라는 한국의 의식적 특징이 한국이라는 사회의 사회정책에서 비롯된 것이고 상이성을 초래한 원론적 수준의 요인이 같다면 비일관성이 단지 비일관성일까 다시 한번 논의해볼만하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의식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면서 정교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능한 기존 연구에서 주요하게 거론하였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논쟁의 핵심에 남아 일관된 연구결과로 집약되지 못하는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투입하여 각 요인의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하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본 연구에서 핵심적인 주제로 하는 인식과 태도의 지형을 밝히는 것, 그리고 인식의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것과 관련하여 재정리해보고자 한다. 복지, 사회정

책과 관련된 인식을 구성하는 다양한 측면이 어떻게 구분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기에 앞서 선행연구들은 복지의식, 또는 이와 관련된 의식을 어떻게 정의하고 조작화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무엇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며 그 한계는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단적 분석, 특정 이해집단의 의식, 그리고 근로에 대한 의식을 분석한 연구는 그 사례가 희소하여 기존 연구 검토에서 집중 탐구하지 않았다.

제2절 사회정책에 대한 의식의 분류와 활용

기존의 연구들은 복지의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복지의식을 가치와 태도 및 복지책임과 실천의지의 측면에서 다양한 변수들의 조합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복지의식이라는 하나의 차원으로 종합 점수화하거나 혹은 각 차원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변수별/차원별로 분석을 시도하여왔다.

정부책임에 대한 인식, 국가책임 지지도를 복지의식으로 대체한 연구가 가장 많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져보자면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나 분배의 중요성에 대한 동의 등 일부 다른 차원의 인식을 추가하면서 복합적인 구성을 선택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복지에 대한 정부책임을 중심으로 복지의식을 구성하고 이와 더불어 재정부담의사나 복지주체에 대한 태도를 추가하거나(이성균, 2002), 또는 정책평가에 대한 인식을 추가하고(김사현, 2012), 또는 성장과 분배에 대한 중요성 부여(이훈희·김윤태·이원지, 2011) 등이 함께 고려되기도 하였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복지의식의 개념적 다차원성에 주목하여 복수의 측

정도구를 사용하여야 함을 제안하기도 하였다(우아영, 2000; 최균·류진석, 2000; 조돈문, 2001; 이성균, 2002; 류진석, 2004; 주은선·백정미, 2008). 비교적 복지인식을 다양한 차원이나 내용으로 구성하여 분석한 연구들은 평등에 대한 인식, 복지책임의 주체, 정부역할, 조세부담, 재정 확대 등을 종속변수로 구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복지인식의 여러 차원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각 인식의 범주가 서로 다른 차원임을 인정된 상태로 각 범주의 인식에 대한 요인들의 영향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복지인식이라는 개념을 보다 체계적인 과정으로 근거를 모색하며 조작화하고 산출하고자 한 연구들은 매우 드물다. 김신영(2010)과 모지환·김행열(2009) 등은 보다 정치한 방식으로 복지인식을 구성하는 신선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김신영(2010)은 일자리, 의료, 노인, 실업, 소득격차 완화, 주거 등에 대한 정부의 공적 책임을 묻는 여섯 개 문항을 요인 분석 후 합산하여 복지인식이라는 개념을 구성하였다. 6개 문항에 대한 주성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요인부하값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산술 합산한 변수를 종속변수인 복지인식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모지환·김행열(2009)의 연구도 이와 유사하게 지역별 정부지출 지지도에 대한 주성분 분석을 통하여 요인점수를 구하고 이를 반영하여 복지인식으로 구성하였다. 류만희·최영(2009)의 종속변수-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 구성 방식도 위의 두 사례와 유사하다. 주성분분석으로 복지인식을 구성하는 연구들도 대개 주성분 분석단계에서부터 투입하는 문항을 국가책임에 대한 인식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가책임에 대한 지지를 중심으로 복지인식을 구성하는 여타의 연구와 비슷한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무엇을 근거로 국가책임에 대한 인식으로 복지인식이라는 개념을 구성하게 되었는지에 답을 제공하기 쉽지 않다.

사회정책에 대한 의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한 의식을 포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생산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더라도 여러 차원의 의식을 나열할 수 있다. 첫째, 사회현황·제도 평가에 대한 의식이 있다. 평등에 대한 의식으로 소득 및 재산 불평등 정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빈곤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영역별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 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 사회적 가치 및 복지에 대한 태도도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성장과 분배 중 무엇을 주요한 지향으로 수용하는지, 복지와 근로의욕의 상쇄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지, 복지가 경제성장과 역관계라고 인식하는지, 그리고 보편적 복지제도의 수용수준은 어느 정도인지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세 번째, 국가의 복지공급에 대한 책임을 어느 수준으로 보는지도 대표적인 항목이다.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책임, 정책영역별 정부책임이나 재정확충에 대한 지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복지재정 확충 및 재정부담 주체에 대한 인식도 사회정책과 관련된 주요한 인식의 영역이다.

이렇게 다양한 차원의 내용이 사회정책과 유관한 의식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근로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면 그 관련 의식의 범위는 더 넓어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하위범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선택한 하위범주, 의식의 조작화가 사회정책에 대한 전체 의식에서 어떠한 위상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서로 다른 의식 개념을 사용하면서 우리나라의 의식을 상대적으로 비교 기술하기도 한다.

의식은 그 내용의 차이를 가질 뿐 아니라 의식의 하위 개념 중 무엇에 주목하는가에 따라 의식의 범주, 범위 등이 영향을 받는다. 김신영(2010)은 사회구성원리를 강조하는 경우 복지의식은 자유방임주의와 사회주의를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에서 구분되고, 복지책임주체를 강조하는

경우 복지의식은 개인책임과 국가책임을 양극단으로 하는 스펙트럼에서 분류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하면서 그 범주 선택의 영향을 암시한바 있다. 사회정책에 대한 의식은 김신영의 표현과 같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의식과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정책에 대한 태도 등 매우 넓은 범위로 구성된다. 어떠한 내용의 의식을 복지의식으로 보아야 하는가? 사회정책에 영향을 주는 의식을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어떠한 범주의 의식을 포괄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3절 복지의식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본 절에서는 복지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사회정책과 관련된 의식을 분석한 연구에서 다른 영향요인을 검토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사회정책 관련 의식이라고 범위를 확대하여도 거론할 연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복지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많고 다양하다. 그만큼 영향요인의 규명은 복지의식 연구에서 핵심적인 연구 주제였다. 과연 누가 왜 어떠한 복지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안다는 것은 복지에 대한 지지 집단을 찾고, 복지에 대한 지지의 기반을 넓히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일 것이다.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계급과 복지지위 등 이해관계의 영향은 특히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사였다. 가장 핵심 쟁점이었던 계급의 결정력에 대해서는 국내 연구결과들이 일관성이 있는 결과를 보여 주지도 않고 있고(김연순·여유진, 2011; 김수완, 2011; 주은선·백정미, 2007; 이성균, 2002, 조돈문, 2001),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계급의 영향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연구결과들도 영향요인의 규명에서 서로 다른 이

슈를 제기하여왔다. 계급의 영향이 거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어떠한 요인이 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설명이 가능해야 했다.

복지의식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 계급은 조작화단계에서 다소 불합리하게 처리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계급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과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난제로 남아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직종이나 종사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급변수를 구성하고 있다. 자료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변수의 전환에서도 연구자마다 구분하는 범주가 다양하다. 계급결정론과 대비되어 적지 않은 연구가 복지지위, 복지 이해관계를 주요 영향요인으로 지목하였다(김사현, 2012; 권승, 2012; 김사현, 2010; 모지환·김행열, 2009; 안상훈, 2009). 자기이해는 크게 인구학적 특징으로 복지수혜의 가능성이 높은 취약인구집단구분과 복지수급경험, 그리고 복지관련 직종에 종사하는지 여부 등으로 조작화되었다. 복지수혜가능성이 높은 노인, 여성, 특히 아동이 있는 여성과, 복지수급을 받는 사람, 그리고 복지 분야 종사자가 친복지적이라는 것이 복지이해를 강조하는 접근의 논지이다. 대체로 자기이해관계의 영향이 검증되었지만, 근대적 복지정책의 역사가 짧고 소수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잔여적 복지를 주로 운영하였던 우리나라에서 과연 잠재적 복지수혜의 영향을 외국과 동일하게 검증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아 있다. 복지이해와 관련된 또 다른 변수로 납세자여부도 고려된다. 납세부담이 가중될 집단이 복지확대에 부정적이라는 것이 이 접근의 핵심적 주장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소득 등 계층 변수나 고용주 등 계급 변수의 영향과 중복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계급의 영향과 경쟁적으로 고려된 다른 변수는 계층이다. 계급균열이

해체된 상황에서 일상의 소비에 결정적인 계층의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는 주장이 그 근거이다. 우리나라에서 계급결정론이 검증되지 못한 상황에서 계층은 일상의 독립성 유지와 복지증세의 부담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주요인이 되어왔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 계층을 대변하는 변수는 주로 소득으로 한정되어왔다. 계층을 구분하는 또 다른 주요 축인 재산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계급과 계층, 그리고 자기이해 외 여러 요인들이 복지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주목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신뢰와 같은 주관적 인식, 정치적 입장의 영향이 과연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관심을 가졌다. 사회적 신뢰감과 같은 개인의 신념이나 주관성이 복지인식에 영향을 준다고 본 연구로는 김신영(2010)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김신영은 계급결정론과 제도주의적 접근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사회심리학적 변수를 중요한 변수로 고려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정치적 입장을 요인으로 투입한 연구는 최유석(2011), 김신영(2010)의 연구가 있다. 정치적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복지의식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접근이다.

정치적 이념이나 주관적 인식 중 복지와 관련한 개념들은 태도로 태도를 설명하는 내생성 편의(endogeneity bias)가 발생할 수 있어 결정 요인의 분석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능한 수준에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기존 연구에서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논의된 변수에 한정하여 이 부류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노조참여여부도 정치적 활동 경험이나 계급적 인식을 고양하는 경험으로 중요하게 고려할만한 변수이다. 하지만 대개 설문조사자료에서 노조가입으로 응답한 비율이 매우 낮을 위험이 있어 분석에 주의하여야 한다.

복지의식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규명한 선행연구들에 대하여 정리해보자면 계급결정론의 적용이 어려운 한국의 복지의식에 다른 요인

들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기 이해는 과연 강력한 설명력을 갖는지, 계급과 대비하여 계층의 영향을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지를 관련 요인의 종합적 통제 이후 재확인하고자 한다. 뿐 아니라 주관적 인식이나 정치적 입장의 투입에서도 관련 요인의 영향이 유효한지, 새로 투입된 요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유효한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 요인들의 영향은 종단적 의식의 변화를 설명하는 변수로도 고려가 가능하지, 노인과 장애인과 같은 특정 집단에서도 그 영향이 유효한지 종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다만, 근로에 대한 의식 분석에서는, 집중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영향요인들이 다소 상이할 수 있어 요인의 범위를 통일하지 않았다.

제4절 연구문제의 구성

사회정책과 관련된 의식에 대한 국내 연구는 파편적으로 진행되어 온 경향이 없지 않다. 예를 들어 국가의 역할, 불평등에 대한 태도, 근로에 대한 의식은 상호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개별 분석에서 각기 별개로 선택되어 활용되었다. 사회정책과 관련된 의식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야만 한국 복지 의식의 정체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향요인에 대한 고려에서도 요인에 대하여 한정적인 조작화가 반복되거나 동일 요인의 반복적인 투입이 진행되어온 경향이 있고, 영향이 있다고 거론된 변수의 종합적 투입이 이루어지기보다 선별적 투입이 진행되어 온 경향도 있다. 이러한 분석은 관련 변인의 투입과 통제가 이루어져야 각 요인들의 정확한 영향을 논할 수 있다는 전제의 성립을 어렵게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쟁점이 되는 입장, 경쟁적인 논지에 대하여

어느 한 입장에 기반을 두고 이를 검증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시도라기 보다는 보다, 포괄적이고 탐색적인 분석을 지향한다. 기존 연구의 한계를 고려한 본 연구의 지향은 첫째, 우리나라 국민의식의 구성 범주들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의식범주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한다. 둘째, 그 동안 쟁점이 된 요인들의 조작화를 보완하고 도외시되었던 영향요인에 대하여 주목하는 분석을 시도한다. 셋째, 사회정책이 빠르게 변화되는 점을 감안, 의식의 변화에 대하여 이해할 기회를 마련한다. 넷째,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정책의 주요 이해집단의 의식에 대하여 파악한다. 다섯째, 근로에 대한 의식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근로에 대한 태도의 이해는 사회정책의 기획에서 중요한 전제가 된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의 문제 의식과 지향들은 본론의 각 장에서 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로 재구성되었다.





제3장 사회정책 관련 의식의 특성과 지형

제1절 사회정책 관련 국민인식의 특징

제2절 사회정책 관련 국민의식의 구성

제3절 국민의식을 중심으로 한 잠재적 집단분석



3

사회정책 관련 << 의식의 특성과 지형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사회정책 관련 국민의식은 포괄적이다. 우리나라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소득격차와 관련된 정부책임에 대한 인식, 빈곤층 지원에 대한 태도, 빈곤원인에 대한 인식, 정책영역별 정부의 지출 확대에 대한 지지, 성장과 분배에 대한 태도, 국가복지의 확대에 대한 인식, 가족 부양에 대한 태도, 복지증세에 대한 태도, 정부의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 복지영역별 운영 및 전달주체에 대한 인식, 복지영역별 재정부담 주체에 대한 인식 등이 본 연구가 관심을 두는 국민의식의 범위 안에 있다.

복지 또는 사회정책에 대한 의식은 위에서 나열한 것과 같이 다양한 하위개념들로 구성되지만 실제 경험적 연구들을 보자면 이러한 하위개념들 중 무엇에 주목하는가에 따라 사회정책에 대한 의식을 특정 측면을 중심으로 협의로 규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는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사회정책과 관련된 의식의 범위가 넓다고 보고 보다 포괄적으로 의식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 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사회정책에 대한 의식의 각 영역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에 대하여 소개한다. 둘째, 사회정책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범주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 후 범주화된 의식들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의식의 각 항목이 전체적으로 사회정책에 대한 의식을 구성하는데 있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 경향을 대변하는지를 파악하였다. 의식을 구성하는 개별 항목의 일관성을 파악하는 신뢰도 분석은 복지의식의 영향요인 분석에서 종속변수를 구성하기 위한 단계이기도

하다. 셋째, 사회정책에 대한 의식을 중심으로 우리사회 구성원을 집단 구분하여 본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자료 8차 조사의 부가조사 자료이다. 한국복지패널 8차 조사의 부가조사인 「복지의식 부가조사」는 이전의 부가 조사와 비교하여 대표성이 확보되었으며, 시차를 줄이고 최근의 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분석방법은 기술통계와 하위개념들 간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신뢰도 분석을 활용하였다. 더불어 사회정책에 대한 의식을 기초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단구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제1절 사회정책 관련 국민인식의 특징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회정책 관련 국민의식은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사회정책 관련 국민의식에 대한 심층 분석에 앞서 그 의식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그러나 단순 기술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정책 관련 국민의식의 특징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자 이후 분석결과의 해석에 기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표 3-1〉은 본 절의 기술 분석에 활용한 문항의 내용과 척도를 설명한 것이다. 크게 보면, 사회계층과 소득분배에 대한 인식, 빈곤의 원인별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책영역별 정부지출 및 국가의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 영역별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복지영역별 운영·전달 및 재정부담 주체에 대한 인식 등을 다루고자 한다. 척도는 문항마다 상이하지만 대개 1~4, 1~5, 또는 1~7점으로 서열화된 척도이다. 일부 문항은 범주로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다.

〈표 3-1〉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문항

구분	문항	척도
한국사회 계층구조 인식 (2문항)	현재의 한국사회에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유형	5개 유형
	향후 한국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유형	5개 유형
소득격차 및 정부책임에 대한 동의정도 (4문항)	우리나라는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	1~5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소득격차 줄이는 것은 정부 책임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빈곤 원인별 중요성 인식 (11문항)	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돈)관리 부족	1~4점
	개인적인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	
	개인적인 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	
	개인적인 책임감 및 자기규율의 부족(음주, 도박등)	
	개인적인 질환(질병)과 신체적 장애	
	개인적인 학력수준의 미흡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개인적인 불행과 불운(불우한 가족배경 등)	
정책영역별 정부지출 지지도 (14문항)	환경, 건강보험 및 보건, 국민연금(노령연금), 교육, 주거지원, 국방,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 빈곤층 생활지원, 노인 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문화와 예술, 정부행정업무	1~5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	1~5점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대부분 게으르다.	
	복지는 전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 제공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부모를 모실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최소한의 서비스로 축소시키고, 나머지는 각자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해서 해결해야한다.	
	대학교육까지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42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표 3-1〉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문항(계속)

구분	문항	척도
분배 중요성 인식(1문항)	성장과 분배 중 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4점
복지중세 지지도(1문항)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1~7점
복지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9문항)	아픈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1~5점
	노인들이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서비스 제공	
	질 높고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빈곤 예방 및 감소	
	실업에 대한 대응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것	
	모두 위생적이고 적절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교육		
영역별 운영 및 전달체계 주체에 대한 지지도 (7문항)	교육, 보건의료, 아동, 노인, 주거, 고용, 장애인	5개 주체
영역별 재정부담 주체에 대한 지지도(7문항)	교육, 보건의료, 아동, 노인, 주거, 고용, 장애인	4개 주체

1. 사회계층과 소득분배에 대한 인식

먼저, 우리사회 사회계층과 소득분배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2〉는 오늘날 한국사회가 어떤 종류의 사회에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로, ‘부자가 극소수이고 하층으로 갈수록 사람이 많아져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41.3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자가 약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중간층이 거의 없는 사회’와 ‘가난한 사람이 중간층보다 적고, 부자가 극소수인 사회’라 응답한 비율이 약 22%로 유사하다. 이에 반해 ‘부자가 많고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라고 응답한 비율은 4.2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경우 현재 우리사회가 부자가 소수이고 가난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3-2〉 한국사회의 계층구조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현재의 한국사회에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유형	빈도	백분율
부자가 약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중간층이 거의 없는 사회	930	22.07
부자가 극소수이고 하층으로 갈수록 사람 많아져 가난한 사람 많은 사회	1,741	41.31
가난한 사람이 중간층보다 적고, 부자가 극소수인 사회	929	22.04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	437	10.37
부자가 많고 하층으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	177	4.21

반면, 향후 한국사회가 어떠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가 73.11%로 매우 높게 나타나 중간층이 두터운 사회를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부자가 많고 하층으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가 17.79%로 90% 이상이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를 바람직한 사회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 바람직한 계층구조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향후 한국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유형	빈도	백분율
부자가 약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중간층이 거의 없는 사회	22	0.53
부자가 극소수이고 하층으로 갈수록 사람 많아져 가난한 사람 많은 사회	88	2.09
가난한 사람이 중간층보다 적고, 부자가 극소수인 사회	273	6.48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	3,081	73.11
부자가 많고 하층으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	750	17.79

44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표 3-4〉는 우리나라의 소득격차 실태 및 이와 관련한 정부책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것이다. 먼저 소득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평균값은 4.02점으로 소득격차가 크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소득격차를 비롯해 실업자 및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3.5점 이상으로 그 당위성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격차의 심각성 인식보다는 낮은 점수이다. 또한 실업자보다는 소득격차 및 빈곤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동의하는 수준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소득격차 및 정부책임에 대한 동의정도

(단위: 점)

각 항목에 대한 동의정도(5점 척도)	평균	표준편차
우리나라는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	4.2	0.6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	3.7	0.9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3.5	0.9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2.4	0.9

2. 빈곤 원인과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

다음은 우리사회 빈곤 원인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원인별로 그 원인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제시된 빈곤 원인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 두는 경향이 더 강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개인의 노력 부족(3.3점) 및 개인 책임감·자기규율의 부족(3.3점)과 개인적인 절약과 가계관리 부족(3.2점) 등에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즉, 개인의 타고난 능력보다는 노력 부족이 빈곤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욱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빈곤원인으로 사회적 여건을 좀 더 강조하는 항목들 중에서는 낮은 임금(3.2점)과 일자리 부족(3.1점)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높은 응답률이 나타났다.

〈표 3-5〉 빈곤 원인별 중요성 인식

(단위: 점)

빈곤 원인으로서 각 항목의 중요성 인식(4점 척도)	평균	표준편차
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돈)관리 부족	3.2	0.7
개인적인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	3.3	0.7
개인적인 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	2.6	0.8
개인적인 책임감 및 자기규율의 부족(음주, 도박등)	3.3	0.7
개인적인 질환(질병)과 신체적 장애	3.1	0.8
개인적인 학력수준의 미흡	2.7	0.8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	3.2	0.7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	2.8	0.8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	3.1	0.8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2.8	0.8
개인적인 불행과 불운(불우한 가족배경 등)	2.8	0.8

빈곤 원인별 중요성 인식을 연령대별, 학력별, 소득계층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연령대별 빈곤 원인의 중요성 인식을 분석한 결과를 〈표 3-6〉에서 살펴보면, 빈곤 원인에 있어 개인 책임을 강조한 문항들에서는 그 경향성이 뚜렷하지는 않으나²⁾ 대체로 30세 미만 혹은 30~40세 미만의 연령층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점수가 좀 더 낮게

2) 개인적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 항목에서는 70세 이상에서도 30세 미만과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개인의 능력 부족 항목에서는 50~60세 미만인, 개인적 책임감 및 자기규율 부족에서는 50~60세 미만과 70세 이상인, 개인적 질환과 신체적 장애에서도 50~60세 미만과 70세 이상에서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46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나타났다. 반면, 빈곤 원인을 사회적 책임으로 보는 문항들에서는 30세 미만, 30~40세 미만 혹은 40~50세 미만의 연령층에서 그 이상의 연령층에 비해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즉,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빈곤 원인을 개인 보다는 사회에 두는 경향이 좀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6〉 연령대별 빈곤 원인에 대한 중요성 인식

빈곤 원인으로서는 각 항목의 중요성 인식(4점 척도)	평균(단위: 점)					
	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70세 미만	70세 이상
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돈)관리 부족	3.1	3.2	3.3	3.2	3.3	3.2
개인적인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	3.2	3.3	3.3	3.3	3.3	3.2
개인적인 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	2.6	2.6	2.7	2.6	2.7	2.7
개인적인 책임감 및 자기규율의 부족(음주, 도박등)	3.3	3.4	3.4	3.3	3.4	3.3
개인적인 질환과 신체적 장애	3.1	3.1	3.2	3.1	3.2	3.1
개인적인 학력수준의 미흡	2.8	2.7	2.7	2.6	2.6	2.6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	3.3	3.3	3.2	3.1	3.0	3.0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	2.9	2.9	2.9	2.7	2.7	2.7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	3.2	3.1	3.0	3.0	3.0	3.0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2.8	2.8	2.8	2.7	2.6	2.6
개인적인 불행과 불운	2.8	2.8	2.8	2.9	2.8	2.8

〈표 3-7〉은 학력별로 빈곤 원인의 중요성 인식을 살펴본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학력이 낮은 집단의 경우 빈곤 원인을 개인 책임으로 보는 문항들에서 점수가 높고, 사회적 책임으로 보는 문항들에서 점수가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 빈곤 원인을 사회보다 개인에 두는 경향이 좀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7〉 학력별 빈곤 원인에 대한 중요성 인식

빈곤 원인으로서는 각 항목의 중요성 인식(4점 척도)	평균(단위: 점)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 (돈)관리 부족	3.2	3.3	3.2	3.2	3.1
개인적인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	3.3	3.3	3.3	3.3	3.2
개인적인 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	2.7	2.7	2.7	2.6	2.6
개인적인 책임감 및 자기규율의 부족(음주, 도박등)	3.4	3.3	3.4	3.3	3.3
개인적인 질환과 신체적 장애	3.2	3.1	3.1	3.1	3.1
개인적인 학력수준의 미흡	2.7	2.6	2.7	2.7	2.7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	3.0	3.1	3.2	3.3	3.2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	2.7	2.7	2.8	2.9	2.8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	3.1	3.0	3.0	3.2	3.1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 견과 차별	2.7	2.7	2.8	2.9	2.7
개인적인 불행과 불운	2.8	2.9	2.8	2.8	2.7

〈표 3-8〉은 소득계층별로 빈곤 원인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살펴본 결과로서, 앞서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빈곤 원인을 사회에 두는 항목들에 비해 개인에 두는 항목들에서 상대적으로 그 경향성이 덜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만, 개인적인 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 항목과 개인적인 질환 및 신체적 장애 항목에서는 공통적으로 1분위에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빈곤 원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 관련 항목들에서는 1분위에서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요약하면 빈곤한 계층이 빈곤원인으로 사회적 책임을 개인의 문제보다 더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48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표 3-8〉 소득분위별 빈곤 원인에 대한 중요성 인식

빈곤 원인으로서는 각 항목의 중요성 인식(4점 척도)	평균(단위: 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 (돈)관리 부족	3.2	3.2	3.2	3.2	3.2
개인적인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	3.3	3.3	3.3	3.3	3.3
개인적인 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	2.7	2.7	2.7	2.6	2.6
개인적인 책임감 및 자기규율의 부족(음주, 도박등)	3.3	3.4	3.3	3.3	3.4
개인적인 질환과 신체적 장애	3.2	3.1	3.1	3.1	3.1
개인적인 학력수준의 미흡	2.7	2.7	2.7	2.7	2.7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	3.1	3.1	3.2	3.2	3.1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	2.8	2.8	2.9	2.8	2.8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	3.0	3.1	3.1	3.1	3.1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 견과 차별	2.7	2.8	2.8	2.8	2.7
개인적인 불행과 불운	2.9	2.8	2.8	2.8	2.8

다음으로는 사회정책 영역별로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지지도를 묻는 문항이다. 전체적으로 정부행정업무 및 문화와 예술 영역을 제외하고는 정부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행정업무에 대한 정부지출 지지도가 2.5점으로 가장 낮고, 다음은 문화와 예술이 3.0 점, 주거지원 3.3점, 환경 3.4점, 국민연금 3.4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정부지출 지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영역은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로 3.9점이며, 그 다음은 장애인 생활지원 3.8점, 빈곤층 생활지원 3.7 점, 노인 생활지원과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이 각각 3.6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복지 영역에서는 주로 빈곤층 및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출 지지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9〉 정책영역별 정부지출 지지도

(단위: 점)

각 항목별 정부지출 지지도(5점 척도)	평균	표준편차
환경	3.4	0.8
건강보험 및 보건	3.5	0.8
국민연금(노령연금)	3.4	0.9
교육	3.5	0.9
주거지원	3.3	0.8
국방	3.5	0.9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	3.9	0.8
빈곤층 생활지원	3.7	0.8
노인 생활지원	3.6	0.7
장애인 생활지원	3.8	0.7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	3.6	0.8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실업급여)	3.5	0.8
문화와 예술	3.0	0.8
정부행정업무	2.5	0.9

정부지출 지지도를 연령대별로 구체화해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에서 지지도 수준이 높은 영역은 환경(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연령대 30~50세 미만 3.5점), 교육(30~40세 미만 3.6점, 30세 미만과 40~50세 미만 3.5점), 주거지원(30세 미만 3.6점, 30~40세 미만 3.4점),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40세 미만 3.7점),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30세 미만 3.7점), 문화와 예술(40세 미만 3.1점)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에서 지지도 수준이 높은 영역은 국민연금(70세 이상 3.7점, 50~70세 이상 3.5점), 국방(60세 이상 3.8점, 50~60세 미만 3.6점), 노인 생활지원(70세 이상 3.7점), 장애인 생활지원(60~70세 미만 3.9점)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정부 지출을 지지하는 정책 영역이 다소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표 3-10〉 연령대별 정책영역별 정부지출 지지도

각 항목별 정부지출 지지도(5점 척도)	평균(단위: 점)					
	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70세 미만	70세 이상
환경	3.4	3.5	3.5	3.3	3.4	3.4
건강보험 및 보건	3.6	3.5	3.4	3.6	3.5	3.6
국민연금(노령연금)	3.3	3.2	3.3	3.5	3.5	3.7
교육	3.5	3.6	3.5	3.4	3.4	3.5
주거지원	3.6	3.4	3.2	3.3	3.2	3.3
국방	3.3	3.2	3.4	3.6	3.8	3.8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	4.0	3.8	3.8	3.9	3.9	3.9
빈곤층 생활지원	3.7	3.7	3.6	3.7	3.6	3.7
노인 생활지원	3.6	3.6	3.6	3.6	3.6	3.7
장애인 생활지원	3.8	3.8	3.8	3.8	3.9	3.8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	3.7	3.7	3.4	3.5	3.6	3.6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3.7	3.4	3.4	3.5	3.5	3.4
문화와 예술	3.1	3.1	2.9	2.9	2.8	2.8
정부행정업무	2.6	2.4	2.4	2.4	2.4	2.6

〈표 3-11〉은 국가 복지와 관련된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가장 높은 동의수준을 보인 항목은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로 각각 3.5점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가 3.2점, ‘복지는 전 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가 3.1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외의 항목들은 낮은 지지수준을 보였는데, 특히 건강보험의 민영화가 2.1점으로 가장 낮고, 대학교육까지 무상제공이 2.4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나머지 경제성장을 위한 세금감소, 기초보장 수급 빈곤층의 계층, 근로능력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계 보장, 자녀의 부모부양 책임과 관련해서는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국가복지에 대한 동의 수준

(단위: 점)

각 항목별 동의정도(5점 척도)	평균	표준편차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	3.0	0.9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3.2	0.9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	3.5	0.9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대부분 게으르다.	3.0	1.0
복지는 전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3.1	1.1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저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3.0	1.1
부모를 모실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	3.0	1.0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최소한의 서비스로 축소시키고, 나머지는 각자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한다.	2.1	0.9
대학교육까지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4	1.1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3.5	1.0

다음은 국가복지와 관련된 인식을 연령대별, 학력별, 소득분위별로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3-12〉는 연령대별 분석결과이다. 앞서 지지수준이 가장 높았던 자녀양육 가족책임의 경우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지지수준이 높게 나타난 반면, 유치원 및 보육시설 무상제공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지지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복지 증세 및 빈곤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제공과 관련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한편, 전체적으로 중립적인 경향을 보였던 항목들 중 기초보장 수급 빈곤층은 게으르다는 문항이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어 연령이 높을수록 복지의 부작용에 대하여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을 위한 세금감소, 근로능력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계 보장, 자녀의 부모부양 책임 등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각 항목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반대의견을 보였던 건강보험의 민영화와 대학 무상교육은 연령이 높을수록 지지수준이 더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연령을 기준으로 볼 때 납세의

가능성이 높은 젊은 층은 세금증가를 반대, 근로능력연령층 대상 지원에 대하여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 연령이 높은 집단은 빈곤층 지원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석결과에서도 이해관계의 영향을 엿볼 수 있었다.

〈표 3-12〉 연령대별 국가복지에 대한 동의 수준

· 각 항목별 동의정도(5점 척도)	평균(단위: 점)					
	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70세 미만	70세 이상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	3.1	3.1	3.0	3.0	2.9	3.0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3.0	3.1	3.1	3.3	3.3	3.2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	3.3	3.5	3.6	3.5	3.7	3.7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대부분 게으르다.	2.8	2.7	2.9	3.1	3.3	3.2
복지는 전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2.9	2.8	3.0	3.3	3.4	3.5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생계를 보장	3.2	3.2	3.1	2.9	2.8	2.9
부모를 모실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	3.0	3.1	3.0	3.0	2.9	3.1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최소한의 서비스로 축소시키고, 나머지는 각자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한다.	2.2	2.1	2.1	2.0	2.0	2.1
대학교육까지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7	2.7	2.6	2.1	2.1	2.1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3.6	3.8	3.5	3.4	3.4	3.3

〈표 3-13〉은 국가복지에 대한 인식을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앞서 전체적인 지지수준이 가장 높았던 자녀양육에 대한 가족책임의 경우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지지도가 낮게 나타난 반면, 무상보육과 관련해서는

전문대 졸업 이상의 높은 학력수준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복지 증세 및 빈곤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제공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지지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전체적으로 중립적인 경향을 보였던 항목들 중 기초보장 수급 빈곤층은 게으르다는 문항과 자녀의 부모부양 책임 문항의 경우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낮은 지지수준을 보였으며, 그 외 경제성장을 위한 세금감소와 근로능력 빈곤층에 대한 생계보장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학력수준인 대학교 졸업 이상을 제외하고는 학력이 높을수록 지지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표 3-13〉 학력별 국가복지에 대한 동의 수준

각 항목별 동의정도(5점 척도)	평균(단위: 점)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	3.0	3.0	3.1	3.1	2.8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3.3	3.2	3.1	3.0	3.2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	3.7	3.7	3.5	3.4	3.4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대부분 게으르다.	3.3	3.2	3.0	2.7	2.7
복지는 전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3.5	3.3	3.1	3.0	2.9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2.8	2.8	3.1	3.2	3.1
부모를 모실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	3.1	3.1	3.0	3.0	2.9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최소한의 서비스로 축소시키고, 나머지는 각자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한다.	2.0	2.1	2.2	2.1	2.0
대학교육까지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2	2.2	2.6	2.7	2.3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3.5	3.4	3.5	3.7	3.6

〈표 3-14〉는 국가복지에 대한 인식과 관련 소득분위별로 분석한 결과이며, 연령대 및 학력수준별 분석결과와 비교해 그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전체적인 지지수준이 가장 높았던 자녀양육에 대한 가족책임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지도가 낮게 나타난 반면, 무상보육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선별적 복지제공과 관련해서는 1~2분위의 낮은 소득계층에서 지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지 증세는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3분위에서 전체 평균보다 낮은 지지도를 보였고, 반대로 경제 성장을 위한 감세는 3분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체적으로 반대의견을 보였던 건강보험의 민영화와 대학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1분위에서 그 반대수준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표 3-14〉 소득분위별 국가복지에 대한 동의 수준

각 항목별 동의정도(5점 척도)	평균(단위: 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	2.9	3.0	3.1	3.0	3.0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3.2	3.2	3.1	3.2	3.2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	3.7	3.7	3.5	3.5	3.4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대부분 게으르다.	3.1	3.1	3.0	2.8	3.0
복지는 전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3.4	3.3	3.0	3.0	3.0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2.9	3.1	3.0	3.0	3.0
부모를 모실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	3.0	3.1	3.1	3.0	2.9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최소한의 서비스로 축소시키고, 나머지는 각자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한다.	2.0	2.1	2.1	2.1	2.1
대학교육까지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2	2.5	2.5	2.5	2.3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3.3	3.5	3.6	3.6	3.5

3. 사회정책의 운영과 평가 관련 인식

〈표 3-15〉는 성장과 분배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분석 결과이다. 4점 척도로 1점은 성장만이 중요하다는 인식이며, 4점은 분배만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2.5점으로 성장과 분배 각각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5〉 성장과 분배에 대한 중요성 인식

(단위: 점)

분배 중요성 인식(4점 척도)	평균	표준편차
성장과 분배 중 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2.5	0.8

동 인식을 연령대별, 학력별로 살펴보면, 먼저 연령대별로 30~40세 미만의 경우 2.6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약간 높아 성장보다 분배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력별로는 인식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연령대별/학력별 성장과 분배에 대한 중요성 인식

(단위: 점)

성장과 분배 중 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4점 척도)		평균
연령대	30세 미만	2.5
	30~40세 미만	2.6
	40~50세 미만	2.5
	50~60세 미만	2.4
	60~70세 미만	2.4
	70세 이상	2.5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2.5
	중학교 졸업	2.4
	고등학교 졸업	2.5
	전문대 졸업	2.5
	대학교 졸업 이상	2.5

〈표 3-17〉은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한 증세를 지지하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복지증세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복지증세에 대한 지지

(단위: 점)

복지증세에 대한 지지도(7점 척도)	평균	표준편차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4.5	1.6

〈표 3-18〉은 복지증세와 관련 연령대별, 학력별, 소득분위별로 좀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로, 먼저 연령대별로는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복지증세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가장 높은 수준의 학력을 제외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지지도가 낮아지며, 소득분위별로도 가장 높은 소득분위를 제외하고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지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납세의무를 지니는 연령과 계층에서 증세를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단, 학력별로 보면 고등학교와 전문대 졸업자가 증세를 조금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연령대별/학력별/소득분위별 복지증세에 대한 지지

(단위: 점)

복지증세에 대한 지지도(7점 척도)		평균
연령대	30세 미만	4.1
	30~40세 미만	4.4
	40~50세 미만	4.5
	50~60세 미만	4.7
	60~70세 미만	4.9
	70세 이상	4.7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4.8
	중학교 졸업	4.7
	고등학교 졸업	4.4
	전문대 졸업	4.3
	대학교 졸업 이상	4.6
소득분위	1분위	4.8
	2분위	4.7
	3분위	4.5
	4분위	4.4
	5분위	4.5

〈표 3-19〉는 우리나라 정부가 각 정책 영역별로 얼마나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평가와 관련된 인식을 보여준다. 긍정적 평가를 보인 영역은 의료서비스가 3.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노인의 삶의 질 유지가 3.3점, 보육서비스가 3.1점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부정적 평가를 받은 영역은 실업에 대한 대응이 2.5점으로 가장 낮고, 다음이 빈곤 예방 및 감소가 2.6점, 학교 교육 2.8점, 장애인 편의 서비스 제공과 주거 지원이 2.9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노인, 아동, 질환자, 여성과 관련된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취약인구 집단을 표적으로 하지 않은, 비잔여적 정책영역에서 평가가 낮은 점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표 3-19〉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단위: 점)

각 정책영역별 긍정적 평가(5점 척도)	평균	표준편차
아픈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4	0.8
노인들이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3.3	0.9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서비스 제공	2.9	0.9
질 높고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1	0.8
빈곤 예방 및 감소	2.6	0.9
실업에 대한 대응	2.5	0.8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것	3.0	0.8
모두가 위생적이고 적절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9	0.8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교육	2.8	0.9

마지막으로, 각 분야별 복지서비스의 운영·전달 및 재정부담 주체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결과이다. 먼저 복지영역별로 어떤 주체가 운영하고 전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국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지만 영역별로 그 비중

은 차이를 보인다. 보건과 장애인복지 분야에 대해 국가책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특히 강하게 나타난 반면(각각 88.1%, 86.0%), 아동과 주거 분야는 가족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고(각각 24%, 25%), 고용 분야와 관련해서는 직장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였으며(23.5%), 노인 분야의 경우에는 비영리 민간기관을 바람직한 주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9.6%).

〈표 3-20〉 복지영역별 운영 및 전달체계 주체에 대한 지지도

(단위: %)

분야	국가	가족,친지	직장	영리 민간기관	비영리 민간기관
교육	78.2	12.3	1.3	3.2	5.0
보건의료	88.1	5.1	1.0	2.5	3.4
아동	61.9	24.0	1.9	4.6	7.6
노인	71.4	15.6	0.3	3.1	9.6
주거	66.9	25.0	1.8	3.7	2.6
고용	67.9	3.8	23.5	3.4	1.4
장애인	86.0	3.4	0.3	2.4	8.0

각 분야별 복지서비스의 재정적인 부담 주체와 관련한 분석결과를 보면, 운영 및 전달체계 주체에 대한 인식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영역에서 국가를 바람직한 재정부담 주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장애인복지와 보건의료에서 국가의 재정 부담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았다(각각 92.5%, 84.7%). 주거는 본인을 재정부담 주체로 보는 경향이 강하여(38.0%) 전반적으로 주거문제는 재산권에 대한 개인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이해된다. 교육에 대한 재정부담도 본인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였고(20.1%), 한편 노인과 아동은 가족과 친지의 책임인정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각각 12.4%, 12.7%). 고용도 국가가 바람직한 재정부담 주체라고 보는 비율이 높지만 다른 영역과 대비하여 직장의 재정적 부담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였다(27.0%).

〈표 3-21〉 복지영역별 재정부담 주체에 대한 지지도

(단위: %)

분야	국가	본인	가족친지	직장
교육	71.9	20.1	6.7	1.3
보건의료	84.7	10.3	3.0	2.0
아동	65.3	19.8	12.7	2.2
노인	78.4	9.1	12.4	0.1
주거	56.8	38.0	3.7	1.6
고용	65.2	6.8	1.0	27.0
장애인	92.5	2.5	4.3	0.7

좀 더 구체적으로 연령대별 재정부담 주체에 대한 지지도를 살펴보면, 먼저 국가를 바람직한 재정부담 주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장애인 분야의 경우 30세 미만을 제외하고는 연령이 높을수록 그 지지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본인을 재정부담 주체로 보는 경향이 강했던 주거 분야의 경우에는 40~50세에서 그 경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41.8%), 60~70세(40.0%) 및 50~60세(38.8%)에서도 평균(38.0%)보다 그 비율이 높았으며, 30세 미만(35.8%)과 70세 이상(28.8%)에서는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대신 30세 미만에서는 가족친지(5.8%) 및 직장(3.9%)을, 70세 이상에서는 국가(67.6%)를 바람직한 재정부담 주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마찬가지로 본인의 재정 부담에 대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교육 분야의 경우에는 30~40세 미만에서 그 비율이 13.3%로 특히 낮게 나타났고(평균 20.1%), 대신 국가에 대한 재정부담 지지도가 7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족친지의 재정 부담에 대한 지지도가 약 12%대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던 아동과 노인 분야를 살펴보면, 아동 분야의 경우 가족친지 책임에 대한 지지도가 평균에 비해 40~50세 미만(9.2%)과 30~40세 미만(10.4%)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노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40~50세 미만에서 9.4%로 가장 낮고, 60세 이상에서 약 11%로 낮게 나타났다. 아동과 노인 분야 공통적으로 가족친지에 대한 재정부담 지지도가 가장 낮

60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있던 40~50세의 경우 대신 본인 책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아동 분야 30~40세 미만과 노인 분야 60세 이상에서는 국가 책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직장의 재정 부담에 대한 지지도가 컸던 고용 분야의 경우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낮았고, 대신 국가 책임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22〉 연령대별 재정부담 주체에 대한 지지도

분야		평균(단위: %)					
		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70세 미만	70세 이상
교육	국가	71.4	79.8	71.2	71.0	66.2	66.7
	본인	21.2	13.3	21.6	19.4	24.0	25.3
	가족친지	5.9	5.3	5.2	9.3	8.5	7.2
	직장	1.6	1.6	2.0	0.4	1.3	0.8
보건의료	국가	85.4	85.7	83.4	85.4	86.0	82.5
	본인	10.5	8.9	10.7	10.2	10.0	12.6
	가족친지	2.6	2.8	2.7	3.2	3.3	3.8
	직장	1.6	2.6	3.2	1.3	0.7	1.2
아동	국가	62.6	71.1	62.9	63.9	65.7	66.2
	본인	21.1	17.3	23.8	17.7	17.7	20.0
	가족친지	14.0	10.4	9.2	16.5	15.8	12.6
	직장	2.3	1.2	4.1	2.0	0.8	1.3
노인	국가	73.4	79.0	77.4	80.0	80.5	81.6
	본인	8.4	8.3	13.0	6.8	8.5	7.8
	가족친지	18.2	12.5	9.4	13.3	11.0	10.5
	직장	0.0	0.3	0.2	0.0	0.0	0.1
주거	국가	54.6	58.1	53.2	56.7	54.7	67.6
	본인	35.8	37.9	41.8	38.8	40.0	28.8
	가족친지	5.8	3.0	3.1	3.5	4.5	3.3
	직장	3.9	1.0	1.9	1.0	0.8	0.3
고용	국가	61.6	62.1	66.0	66.7	67.7	69.7
	본인	7.3	8.2	6.2	5.8	6.8	6.1
	가족친지	1.9	0.8	0.8	1.0	0.9	0.6
	직장	29.3	28.9	27.0	26.5	24.6	23.7
장애인	국가	91.4	89.8	92.7	93.1	94.7	95.4
	본인	2.4	2.7	2.9	2.2	1.4	3.1
	가족친지	5.5	6.1	3.5	4.0	3.9	1.5
	직장	0.6	1.4	0.9	0.6	0.0	0.0

제2절 사회정책 관련 국민의식의 구성

1.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의 구성 이해: 요인분석

본 절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의 구성을 파악하고자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앞에서 사회정책 관련 인식으로 분석하였던 문항 중 일정한 방향으로 해석하기 어렵거나 또는 서열화가 불가능한 문항은 본 절의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소득격차 및 계층 구조에 대한 인식, 정책에 대한 평가, 복지운영주체와 재정 부담주체에 대한 의식을 묻는 문항들이 그 예이다. 이 문항들을 제거하고 나머지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군의 구성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탐색하였다.

〈표 3-23〉 요인분석에 활용한 변수 및 척도 설명

구분	측정변수	변수설명	리커트 척도
소득 격차 및 정부 책임에 대한 인식	격차	'우리나라는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에 대한 동의정도	-2점(매우 반대)~ 2점(매우 동의)
	격차정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에 대한 동의정도	-2점(매우 반대)~ 2점(매우 동의)
	실업자지원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에 대한 동의정도	-2점(매우 반대)~ 2점(매우 동의)
	빈곤지원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에 대한 동의정도	-2점(매우 동의)~ 2점(매우 반대)
빈곤 원인에 대한 인식	원인_절약	빈곤원인으로서 '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돈)관리 부족'의 중요성 인식	-2점(매우 중요)~ 2점(전혀 중요하지 않음)
	원인_노력	빈곤원인으로서 '개인적인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의 중요성 인식	-2점(매우 중요)~ 2점(전혀 중요하지 않음)
	원인_규율	빈곤원인으로서 '개인적인 책임감 및 자기규율 부족(음주, 도박 등)' 중요성 인식	-2점(매우 중요)~ 2점(전혀 중요하지 않음)
	원인_능력	빈곤원인으로서 '개인적인 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의 중요성 인식	-2점(매우 중요)~ 2점(전혀 중요하지 않음)
	원인_장애	빈곤원인으로서 '개인적인 질환(질병)과 신체적 장애'의 중요성 인식	-2점(매우 중요)~ 2점(전혀 중요하지 않음)

62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구분	측정변수	변수설명	리커트 척도
	원인_교육기회	빈곤원인으로서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의 중요성 인식	-2점(전혀 중요하지 않음)~2점(매우 중요)
	원인_일자리	빈곤원인으로서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의 중요성 인식	-2점(전혀 중요하지 않음)~2점(매우 중요)
	원인_임금	빈곤원인으로서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의 중요성 인식	-2점(전혀 중요하지 않음)~2점(매우 중요)
	원인_학력	빈곤원인으로서 '개인적인 학력수준의 미흡'의 중요성 인식	-2점(전혀 중요하지 않음)~2점(매우 중요)
	원인_차별	빈곤원인으로서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중요성 인식	-2점(전혀 중요하지 않음)~2점(매우 중요)
	원인_불운	빈곤원인으로서 '개인적인 불행과 불운(불우한 가족배경 등)의 중요성 인식	-2점(전혀 중요하지 않음)~2점(매우 중요)
정책 영역별 정부 지출에 대한 인식	아동_지출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 관련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의견	-2점(훨씬 덜 지출)~2점(훨씬 더 많이 지출)
	장애인_지출	'장애인 생활지원' 관련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의견	-2점(훨씬 덜 지출)~2점(훨씬 더 많이 지출)
	노인_지출	'노인 생활지원' 관련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의견	-2점(훨씬 덜 지출)~2점(훨씬 더 많이 지출)
	빈곤_지출	'빈곤층 생활지원' 관련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의견	-2점(훨씬 덜 지출)~2점(훨씬 더 많이 지출)
	연금_지출	'국민연금(노령연금)' 관련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의견	-2점(훨씬 덜 지출)~2점(훨씬 더 많이 지출)
	건강_지출	'건강보험 및 보건' 관련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의견	-2점(훨씬 덜 지출)~2점(훨씬 더 많이 지출)
	교육_지출	'교육' 관련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의견	-2점(훨씬 덜 지출)~2점(훨씬 더 많이 지출)
주거_지출	'주거지원' 관련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의견	-2점(훨씬 덜 지출)~2점(훨씬 더 많이 지출)	
성장과 분배 인식	성장_분배	성장과 분배에 대한 중요성 인식	-2점(성장이 중요)~2점(분배가 중요)
국가 복지에 대한 인식	경제세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에 대한 동의정도	-2점(매우 동의)~2점(매우 반대)
	복지세금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에 대한 동의정도	-2점(매우 반대)~2점(매우 동의)
	자녀가정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에 대한 동의정도	-2점(매우 동의)~2점(매우 반대)
	기초나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빈곤층	-2점(매우 동의)~

구분	측정변수	변수설명	리커트 척도
		은 대부분 게으르다'에 대한 동의정도	2점(매우 반대)
	빈곤선별	'복지는 전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에 대한 동의정도	-2점(매우 동의)~ 2점(매우 반대)
	근능지원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정도	-2점(매우 반대)~ 2점(매우 동의)
	부모가족	'부모를 모실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에 대한 동의정도	-2점(매우 동의)~ 2점(매우 반대)
	건보민간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최소한의 서비스로 축소시키고, 나머지는 각자 민간의료보험 이용 해결'에 대한 동의정도	-2점(매우 동의)~ 2점(매우 반대)
	대학무상	'대학교육까지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에 대한 동의정도	-2점(매우 반대)~ 2점(매우 동의)
	보육무상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무상으로 제공'에 대한 동의정도	-2점(매우 반대)~ 2점(매우 동의)
세금부담 인식	복지증세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에 대한 동의정도	-2점(매우 반대)~ 2점(매우 동의)

주: 친복지적 태도일수록 점수가 높아지도록 -2~2점으로 재점수화함.

단, 실업자에 대한 지출을 지지하는지를 묻는 문항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동 문항이 하나의 문항이지만 '실업대책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대한 지지를 동시에 묻고 있어서 응답의 신뢰성이 낮고 다른 문항과의 함께 분석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현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36개 전체 문항들에 대해 요인분석한 결과에서도 요인부하값(factor loading value)이 유일하게 0.4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여타 변수 제외 여부에 따라 '실업_지출'의 요인부하값의 변동 폭이 커서 혼란이 가중되었다. 일반적으로 요인이 해당변수를 설명해주는 정도를 의미하는 요인부하값은 그 절대값이 0.4 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고, 0.5를 넘으면 아주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업_지출' 문항을 제외하고 요인분석 한 결과 모두 11개 요인으로 묶임과 동시에, 요인부하값도 모두 0.4 이상으로 나타났다.

64 근로 및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표 3-24〉 사회복지정책 관련 의식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Component										
		1	2	3	4	5	6	7	8	9	10	11
원인 개인	원인_교육기회-	.743	-.093	.034	.015	-.012	.104	.012	.034	-.033	-.045	.003
	원인_일자리-	.702	.026	.018	.105	.042	.065	.024	.081	.169	-.028	-.092
	원인_임금-	.643	.005	.034	-.043	.042	.198	-.027	.071	.175	-.025	.015
	원인_학력-	.611	-.096	.078	-.055	.030	.013	.041	-.099	-.247	.103	.030
	원인_차별-	.609	-.096	.009	.108	-.134	.029	.159	-.002	.165	-.121	.052
	원인_불운-	.518	-.196	-.023	.171	-.001	-.208	.119	-.111	.048	.050	.023
원인 사회	원인_절약+	-.031	.745	.068	.045	.090	-.049	.000	-.021	-.041	.055	.137
	원인_노력+	-.014	.742	.021	.018	.060	-.052	.100	-.003	-.030	.079	.146
	원인_규율+	-.075	.720	.053	.027	-.050	.068	-.018	-.013	-.076	-.044	-.020
	원인_능력+	-.269	.488	-.082	.013	.108	.063	.002	.170	.129	.048	-.196
	원인_장애+	-.347	.448	-.120	.078	-.068	.116	.009	.077	.091	-.110	-.175
취약 지출	장애인_지출-	-.008	-.051	.794	.063	.057	.042	-.041	.007	.034	-.006	.044
	노인_지출-	.047	.041	.723	.302	.069	.091	.113	-.009	.078	-.066	-.009
	빈곤_지출-	.120	.093	.702	.224	.050	.073	.248	.124	.034	.015	.054
육구 지출	연금_지출-	-.009	.015	.182	.737	.111	-.077	.127	-.085	.047	-.007	-.084
	건강_지출-	.024	.063	.175	.705	.100	.010	.121	.098	.074	-.093	.004
	교육_지출-	.119	.029	.096	.590	.055	.345	-.079	.105	-.049	.066	.016
	주거_지출-	.127	.054	.132	.452	-.016	.253	.056	.036	-.049	.086	.196
조세 부담	복지세금-	.055	-.044	.103	.037	.817	.141	.090	-.022	.022	-.040	-.013
	복지증세-	-.004	.088	.149	.106	.797	.020	.061	-.048	.011	-.042	-.011
	경제세금+	-.060	.082	-.086	.090	.643	-.105	-.025	.204	-.054	.107	.080
아동 지원	보육무상-	.045	.016	.129	.096	.144	.726	.097	-.015	.096	-.027	-.060
	대학무상-	.153	.023	-.013	.069	-.174	.599	.310	-.209	.044	-.037	.143
	아동_지출-	.094	.004	.439	.259	.046	.501	-.090	.089	.067	-.029	-.105
경활 지원	근능지원-	.040	.031	.134	.109	.081	.144	.664	-.069	-.115	-.150	.086
	실업자지원-	.166	.013	.023	.141	.072	.028	.634	.037	.287	.006	-.051
최소 보장	건보민간+	-.042	-.019	-.007	.152	.084	-.156	-.214	.721	.024	-.069	.016
	빈곤지원+	.036	.055	.254	-.057	.054	-.016	.311	.575	.083	.099	-.150
	빈곤선별+	.027	.065	-.164	.048	-.051	.322	-.005	.423	.000	.111	.372
	기초나태+	.075	.141	.188	-.033	.019	.145	.399	.402	-.193	.188	.220
격차 해소	격차정부-	.203	.020	-.002	.044	-.040	.097	.284	-.004	.699	-.015	-.017
	격차-	.036	-.071	.147	-.002	.010	.045	-.136	.028	.688	.012	.155
가족 책임	자녀가정+	-.080	-.017	-.034	-.018	-.048	.106	.069	.026	-.101	.749	-.076
	부모가족+	.025	.077	-.014	.026	.068	-.151	-.171	.035	.106	.719	.039
분배 중요	성장_분배+	-.001	.071	.060	.023	.060	-.033	.059	-.012	.141	-.071	.801

요인분석결과, 11개의 요인군이 나타났는데, 빈곤원인을 사회에 두는 '원인_사회', 빈곤원인을 개인에 두는 '원인_개인', 노인, 장애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지지하는 '취약_지출', 연금이나 건강, 주거, 교육과 같은 기초 욕구를 충족하는 지원을 지지하는 '욕구_지출', 그리고 복지를 위한 증세를 지지하는 '조세부담', 보육과 교육 등 아동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이를 지지하는 '아동지원', 실업자와 근로능력자에 대한 정책 관련 지지를 의미하는 '경활지원', 그리고 최소한의 보장수준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최소보장',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격차해소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의미하는 '격차해소', 자녀와 부모에 대한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가족책임',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분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준을 대변하는 '분배중요'가 그 요인군이다.

〈표 3-25〉 요인군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원인_개인	원인_사회	취약_지출	욕구_지출	최소보장	가족책임	아동지원	경활지원	격차해소	분배중요	조세부담
원인_개인	1	-.320(**)	.039(*)	.081(**)	.159(**)	.073(**)	.031(*)	.024	-.030	.070(**)	.116(**)
원인_사회	-.320(**)	1	.143(**)	.170(**)	.045(**)	-.062(**)	.208(**)	.208(**)	.229(**)	.039(*)	.000
취약_지출	.039(*)	.143(**)	1	.442(**)	.207(**)	-.056(**)	.334(**)	.269(**)	.155(**)	.085(**)	.197(**)
욕구_지출	.081(**)	.170(**)	.442(**)	1	.180(**)	-.029	.349(**)	.250(**)	.130(**)	.052(**)	.205(**)
최소보장	.159(**)	.045(**)	.207(**)	.180(**)	1	.130(**)	.125(**)	.129(**)	.083(**)	.104(**)	.128(**)
가족책임	.073(**)	-.062(**)	-.056(**)	-.029	.130(**)	1	-.082(**)	-.113(**)	-.069(**)	-.016	.021
아동지원	.031(*)	.208(**)	.334(**)	.349(**)	.125(**)	-.082(**)	1	.286(**)	.195(**)	.063(**)	.045(**)
경활지원	.024	.208(**)	.269(**)	.250(**)	.129(**)	-.113(**)	.286(**)	1	.194(**)	.093(**)	.130(**)
격차해소	-.030	.229(**)	.155(**)	.130(**)	.083(**)	-.069(**)	.195(**)	.194(**)	1	.088(**)	.005
분배중요	.070(**)	.039(*)	.085(**)	.052(**)	.104(**)	-.016	.063(**)	.093(**)	.088(**)	1	.066(**)
조세부담	.116(**)	.000	.197(**)	.205(**)	.128(**)	.021	.045(**)	.130(**)	.005	.066(**)	1

요인분석결과로 구분된 요인군 11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각 요인군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요인군 간의 단순 상관관계는 낮다.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요인군들이다. 욕구충족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지지하는 입장과 취약인구에 대한 국가지원을 지지하는 입장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리고 아동과 관련된 정부 지원을 찬성하는 입장은 취약계층 지원을 지지하는 입장과 욕구충족을 위한 정부 책임을 지지하는 입장과 약하지만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상관관계가 낮은 것에는 각 요인군들에 영향을 주는 매개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것, 또는 인구집단별로 요인군에 대한 입장이 비 일관적인 것 등이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단순 상관관계로는 그 이유를 단정하기 어렵다. 적어도 ‘취약_지출’, ‘욕구_지출’, ‘아동지원’, 확대한다면 ‘경찰지원’이 상호 관련을 가져 하나의 요인으로 종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된다.

모든 요인들은 친 복지방향으로 척도의 방향을 통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요인군들 간의 관계는 부적이다. 대표적으로 ‘가족책임’은 여러 요인군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물론 그 상관관계의 수준은 매우 낮다. 부양에 대한 가족 책임을 지지하지 않은 집단의 상당수는 노인인데 노인들은 다른 복지, 특히 취약인구, 욕구충족을 위한 복지에 대해서는 지지적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빈곤 원인을 사회에 두는 입장과 빈곤 원인을 개인에 두는 입장도 한 개인에게서 일관성이 있는 상쇄관계의 의식이 아님을 암시하는 결과이다.

2.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의 구성 이해: 신뢰도 분석

사회정책과 관련된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개별 문항들이 전체적인 복지의식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

였다. 이 분석은 의식을 묻는 각 문항이 하나의 경향을 대변하는 정도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며, 한편 본 연구에서 활용할 종속변수 구성을 위한 분석이기도 하다. 결론은 ‘실업_지출’ 문항을 제외한 35개 문항 중 정부 책임 관련 문항들만 선별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실업_지출’ 문항을 제외하더라도 남아 있는 문항은 나머지 35개 문항이 하나의 경향을 대변하는 것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의 관련성을 갖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35개 문항을 크게 구분하면 복지인식 및 태도와 관련된 문항들이기는 하지만 현상 인식, 빈곤에 대한 태도, 정부 책임 등 다차원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동일차원의 종속변수로 구성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그 중 요인군으로 묶였을 뿐 아니라 요인군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에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안정적이며 설명이 가능한 관계로 나타난 요인군을 선택하였다. 선택된 문항 15개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책임과 유관한 내용의 문항들이어서 ‘정부책임’이라 묶어 지수화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이 변수들이 과연 하나의 지수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종속변수로서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26 참조).

정부책임 관련 15개 문항 중 조세부담 의사와 관련 있는 3개 문항을 제거하고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알파(Alpha)값이 .756으로 좀 더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모든 변수들의 경우 그 변수를 제거했을 때 계수 값이 더 낮아졌다. 결론적으로, 조세부담 관련 3개 문항을 제외한 정부책임 관련 12개 문항은 하나의 지수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이 문항들을 지수화한 값을 종속변수로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관련요인의 영향을 분석하는 이후 분석에서는 공통 종속변수로 정부책임 관련 12개 변수만 사용하지만, 본 장의 뒷부분 잠재적 집단 분석에

서는 명목화가 가능한 변수들이 모두 활용될 수 있다. 이유는 잠재적 집단분석에서는 다양한 차원의 변수군, 그리고 명목변수의 투입이 자유로우며 이러한 특징이 잠재적 집단분석의 강점이자 의의이기 때문이다.

〈표 3-26〉 신뢰도 분석 결과: 국가의 책임을 중심으로 분석

변수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해당항목 제거된 경우 Cronbach's Alpha	Cronbach's Alpha
실업자지원-	0.293	0.744	0.752
건강_지출-	0.445	0.731	
연금_지출-	0.401	0.734	
교육_지출-	0.402	0.734	
주거_지출-	0.343	0.739	
빈곤_지출-	0.526	0.725	
노인_지출-	0.523	0.726	
장애인_지출-	0.353	0.740	
아동_지출-	0.446	0.730	
경제세금+	0.114	0.761	
복지세금-	0.362	0.738	
근능지원-	0.321	0.743	
대학무상-	0.219	0.755	
보육무상-	0.379	0.736	
복지증세-	0.344	0.740	

제3절 국민의식을 중심으로 한 잠재적 집단분석

기존의 연구들은 대개 우리나라 국민의 복지의를 하나의 하위 개념을 사용하여 기술하거나 또는 그 개념의 평균을 집단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복지의식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의식의 내용도 집단의 구분과 비교도 사전 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하여 왔다. 본 절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의식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하면서 사회정책에 대한 의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단 구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잠재적 집단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의식의 각 차원의 다양한 변수를 투입하여 의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국민을 개방적으로 구분, 집단화할 것이다.

잠재적 집단 분석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지만 의식, 태도분석에서 자주 활용된다. 잠재적 집단 분석은 몇 개의 범주 변수 또는 서열 변수가 있는 경우 표본을 대표할 수 있는 몇 개의 집단 찾아내는 방법이다. 잠재적 집단분석은 우리나라 국민이 의식을 중심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파악하는데 여러 가지 강점을 갖는다. 이론이 아닌 실제 현실을 기반으로 집단을 구분할 수 있고, 의식의 여러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미가 있는 주요 집단들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사회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의식 변수를 활용하여 국민을 몇 개의 집단으로 구성해볼 수 있다. 이론적 전제가 아니라 현실에서부터 출발하여 개념적 구성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설명력과 영향은 더 강력해진다. 의식과 관련된 문항의 여러 선택지를 포괄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 지형을 비교적 단순하게 집단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잠재적 집단 분석은 일종의 요인분석으로 관찰(측정)변수들 간 관계를 유발하는 잠재적 공통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잠재적 집단 분석에서는 각 사례별 잠재변수의 범주(잠재계층)에 속할 확률을 도출하고 확률의 상

대적 크기에 기초해 계층분류를 한다. 잠재범주의 계층 수는 모형검증을 통해 도출된다.

1. 연구방법

본 절에서는 제8차 한국복지패널 복지인식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대상은 부가조사 응답자 4,185명 중 분석에 투입할 변수에 결측값이 있는 케이스를 제거하고 4,080명으로 한정하였다. 잠재적 집단분석을 위하여 M-plus version 6.12를 사용하였다. 잠재집단분석에서 활용한 지표는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11개 요인 중 정부의 역할 및 책임과 관련된 '취약_지출', '육구_지출', '아동지원', '경활지원', '격차해소', '조세부담' 등 6개 요인만 분석에 투입하였으며, 각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들의 평균치를 이용하였다. 단, 1점~5점의 평균값을 3점 척도로 전환하였으며, 친복지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높은 점수가 되도록 역점수화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지표와 범주를 한정 및 축소하는 것은 잠재집단분석에서 모형이 복잡하고 변수의 범주 수가 많아질 경우 분석결과 도출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도 분석결과를 해석하기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척도를 3점으로 전환한 이유는 '동의'와 '반대', 그리고 중간값인 '동의도 반대도 안함'이 질적으로 다른 응답이지만 1점 차이의 '매우 동의'와 '동의'는 것처럼 질적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도 동 구간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 지출에 대한 의견도 유사하여 '더 많이 지출'과 '덜 지출', 그리고 '현재수준으로 지출'이 질적으로 상이하지만 '훨씬 더 많이 지출'과 '좀 더 지출'은 질적 차이를 갖는 것이어서 척도를 전환하였다.

〈표 3-27〉 잠재집단분석에 활용한 요인 및 요인별 변수

요인	측정변수	변수설명	리커트 척도
취약_지출	장애인_지출	'장애인 생활지원' 관련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의견	1점(덜 지출)~3점(더 많이 지출)
	노인_지출	'노인 생활지원' 관련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의견	1점(덜 지출)~3점(더 많이 지출)
	빈곤_지출	'빈곤층 생활지원' 관련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의견	1점(덜 지출)~3점(더 많이 지출)
욕구_지출	연금_지출	'국민연금(노령연금)' 관련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의견	1점(덜 지출)~3점(더 많이 지출)
	건강_지출	'건강보험 및 보건' 관련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의견	1점(덜 지출)~3점(더 많이 지출)
	교육_지출	'교육' 관련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의견	1점(덜 지출)~3점(더 많이 지출)
	주거_지출	'주거지원' 관련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의견	1점(덜 지출)~3점(더 많이 지출)
아동지원	보육무상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무상으로 제공'에 대한 동의정도	1점(반대)~3점(동의)
	대학무상	'대학교육까지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에 대한 동의정도	1점(반대)~3점(동의)
	아동_지출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 관련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의견	1점(덜 지출)~3점(더 많이 지출)
경찰지원	근능지원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정도	1점(반대)~3점(동의)
	실업자지원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에 대한 동의정도	1점(반대)~3점(동의)
격차해소	격차정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에 대한 동의정도	1점(반대)~3점(동의)
	격차	'우리나라는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에 대한 동의정도	1점(반대)~3점(동의)
조세부담	복지세금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에 대한 동의정도	1점(반대)~3점(동의)
	복지증세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에 대한 동의정도	1점(반대)~3점(동의)
	경제세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에 대한 동의정도*	1점(동의)~5점(반대)

주: *) 해당 변수는 친복지적 태도일수록 점수가 높아지도록 역접수화 함.

2. 잠재집단의 수

잠재적 집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도비카이제곱(Likelihood Ratio Chi-Square)의 값이 커질수록 모형의 설명력이 떨어진다. 우도비카이제곱의 값과 자유도의 크기가 비슷한 모형이 적합하다고 권고한다. 엔트로피(Entropy) 지수는 개별 사례가 주어진 계층에 얼마나 잘 분류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적합지수로, 집단 수 구분의 질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값이다. 값의 범위는 0~1이며 1에 가까울수록 데이터의 분류가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와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a)는 표본의 크기나 추정 모수의 수 등 정보량 및 복잡성을 고려한 지수로서(모형의 간명성 강조), 그 절대값이 낮을수록 적합한 모델이다. VUONG-LO-MENDELL-RUBIN LRT와 LMR LRT 검증은 k개 잠재집단 모형과 k-1개 잠재집단 모형을 비교하는 방법으로서,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경우 k개 집단의 모형이 k-1개 모형보다 더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28〉 잠재집단모형 적합도 비교

모형	Likelihood Ratio Chi-Square			AIC	BIC	Entropy	VUONG-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			LO-MENDELL-RUBIN ADJUSTED LRT TEST	
	Value	df	p-value				H0 Loglikelihood Value	2 Times the Loglikelihood Difference	p-value	Value	p-value
1집단	1513.44	713	0.000	38548.20	38623.96	-	-	-	-	-	-
2집단	874.61	703	0.000	37432.90	37590.75	0.659	-19262.10	1141.29	0.000	1130.83	0.000
3집단	772.16	690	0.016	37287.59	37527.52	0.655	-18691.45	171.31	0.016	169.74	0.017
4집단	727.72	677	0.086	37235.29	37557.30	0.741	-18605.80	78.301	0.493	77.584	0.496
5집단	712.28	664	0.095	37196.09	37600.17	0.667	-18566.65	65.21	0.790	64.61	0.791

자료: 8차 한국복지패널 복지인식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결과를 보면 복지의식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사회 구성원은 3개 집단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유는 BIC이 변곡점이면서 VUONG-LO-MENDELL-RUBIN LRT와 LMR LRT의 유의도가 3개 집단 구분까지 유의하기 때문이다.

3. 잠재집단의 특성과 규모

우리나라 성인의 복지의식을 중심으로 구분할 때 3개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각 집단에 해당 사례들(응답자들)이 속할 확률을 기준으로 보면 제1집단은 전체 성인 중 22.7%, 제2집단은 17%, 그리고 제3집단은 60.3%에 이른다. 제1집단과 제3집단은 제2집단에 비하여 복지에 대한 지지가 높은 집단이다. 제1집단과 제3집단은 취약인구집단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지의 수준이 높고 욕구영역별 지원에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수준이 높아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조세부담에 대하여 수용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하지만 제1집단과 제3집단은 아동에 대한 지원과 실업자와 근로능력자에 대한 지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3집단은 1집단에 비하여 근로능력자와 실업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아동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지원에서 지지도가 높다. 아동에 대한 지원에 한정하여 보자면 아동의 보육이나 교육에 대한 정부책임을 지지하는 수준이 제1집단에서는 매우 낮아서 동의의 응답확률이 거의 0에 이른다. 하지만 3집단은 아동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하여 강한 지지를 보여서 동의한다는 응답확률이 거의 78%에 이른다. 정부가 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3개 집단이 대체로 지지적이다. 물론 이 경우도 집단 3과 가장 지지적이고 다음이 집단 1의 지지가 높으나 집단 2는 지지하는 수준이 비교적 낮다. 이러

한 특성의 차이를 감안하여 본다면 1집단은 ‘잔여적지원지집단’, 2집단을 ‘복지반대집단’, 3집단을 ‘복지확장지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29〉 잠재집단별 조건부 응답확률 및 사례할당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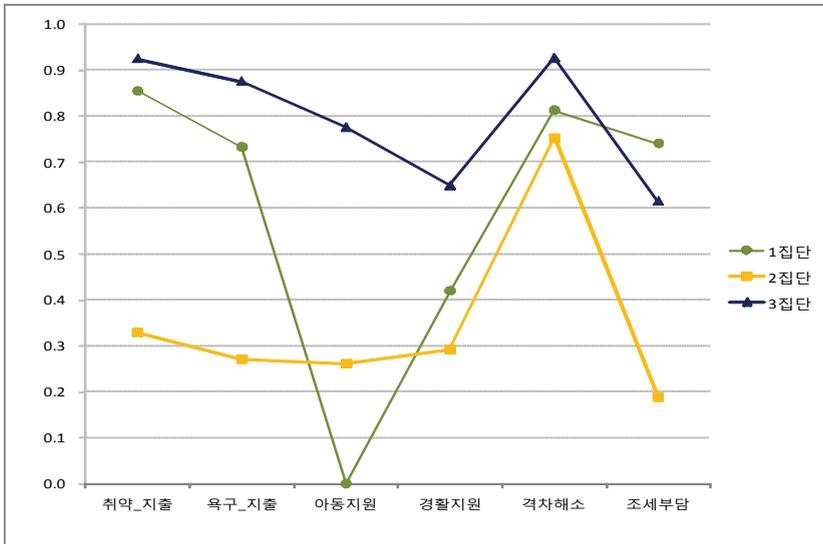
	1집단 (잔여적지원지집단)	2집단 (복지확장반대집단)	3집단 (복지확장지집단)
취약_지출			
덜 지출	0.0	30.0	1.1
현재 수준 지출	14.5	37.1	6.4
더 많이 지출	85.5	32.9	92.5
욕구_지출			
덜 지출	12.6	45.0	4.6
현재 수준 지출	14.1	28.0	7.8
더 많이 지출	73.3	27.1	87.6
아동지원			
반대	67.2	56.4	7.1
반대도 동의도 안함	32.8	17.4	15.3
동의	0.0	26.2	77.6
경찰지원			
반대	25.1	47.8	12.7
반대도 동의도 안함	32.8	23.0	22.4
동의	42.0	29.2	64.9
격차해소			
반대	3.2	7.2	1.3
반대도 동의도 안함	15.5	17.6	6.0
동의	81.3	75.2	92.7
조세부담			
반대	22.3	67.5	31.7
반대도 동의도 안함	3.7	13.6	6.8
동의	74.1	18.9	61.5
사례할당 비율	22.7	17.0	60.3

자료: 8차 한국복지패널 복지인식 부가조사 원자료.

다음의 그림을 보면 위에서 구분한 3개 집단의 특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우선 3개 집단이 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는 지점에서는 모두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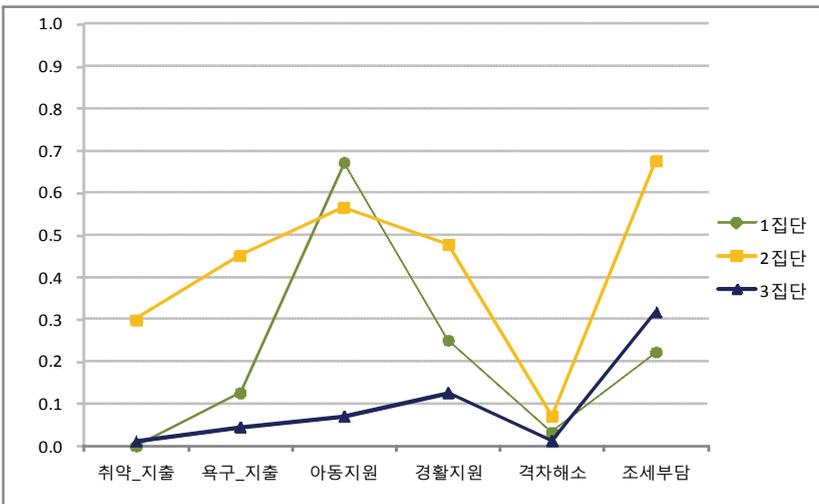
은 수준으로 지지하고 있다. 격차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넓게 확산되었고, 규범적 수준에서는 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2집단(복지확장반대집단)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복지를 지지하는 응답확률이 매우 낮았다. 1집단의 경우 대체로 복지에 지지도가 높지만 아동지원과 경제활동가능자 지원에서 정부책임에 대한 지지의 수준이 낮다. 3집단(복지확대지지집단)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정부의 책임을 지지하면서 친복지의 모습을 보인다. 특히 아동에 대한 지원과 경제활동과 관련된 근로능력자에 대한 지원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지의 수준이 높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결과는 조세부담에 대한 것으로 1집단의 조세부담에 대한 지지가 3집단보다 높다는 점이다. 1집단의 구성에서 응답자 중 조세부담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인구집단이 많은 것은 아닌지 하는 예상을 해본다. 예를 들어 조세부담의 가능성이 낮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노인들이라면 이러한 태도의 역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1] 잠재집단별 친복지 범주의 조건부 응답확률



반대의 응답확률로 그림을 재구성하면, 역시 아동지원에서 3개 집단의 차이가 극명하다. 1집단은 취약인구에 대한 지원이나 기초육구충족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응답확률이 낮지만 아동에 대한 지원에서는 반대확률이 매우 높다. 경제활동가능 집단 지원에 대해서도 역시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조세부담에 대한 반대는 낮다. 2집단은 거의 모든 복지영역에서 반대 확률이 높다. 반면 3집단은 아동지원과 경제활동 가능 집단 지원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정책영역에서 반대가 낮다.

[그림 3-2] 잠재집단별 반복지 범주의 조건부 응답확률



3개 집단은 과연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 집단의 특성을 비교하여보았다. 3개 집단의 특성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우선 연령에서 1집단의 평균연령이 높아 3집단보다 평균 3.5세 더 높다. 50세 이상을 보면 1집단은 51.0%에 이르며, 3집단의 50세 이상은 35.9%에 그쳐서 앞의 추정을 뒷받침한다. 반면 아동을 양육하며 근로활동을 할 연령인 30~40세 사이에서는 1집단의 경우 12.4%이지만 3집단은 그 2배에 가

까운 23.8%에 이른다. 3개 집단의 연령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가구 내 아동이 있는지를 보아도 3집단에서 아동가구원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학력에서는 집단 간 특별한 경향을 찾아보기 어렵다. 복지에 대한 지지가 낮은 2집단의 대졸이상 학력자가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종사상 지위를 보자면 1집단은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다른 두 집단보다 높고 임시직은 3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 자영업과 고용주의 비율은 2집단에서 다소 높다. 근로능력에서도 2집단에서 근로가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소득과 재산을 보면 복지반대집단인 2집단의 소득과 재산이 가장 높다. 그리고 3집단의 소득과 재산이 가장 낮다. 주거점유형태를 보면 월세의 비율이 보증부월세를 포함하여 3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종합하자면 1집단은 연령이 높은 응답자가 많고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도 높으며 소득과 재산이 적지 않았다. 3집단은 소득과 재산도 작고, 아동을 양육하며 근로연령이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젊은 층의 구성 비율이 높다. 2집단은 소득과 재산이 많고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학력이 높으며 고용이 안정된 인구의 비율이 높다.

〈표 3-30〉 잠재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세, 만원)

		1집단	2집단	3집단	전체	χ^2 또는 F^1
지역	대도시	48.4	49.0	43.9	45.8	19.089**
	중소도시	47.0	44.2	48.0	47.2	
	농어촌	4.6	6.9	8.1	7.0	
성	남성	47.8	43.5	46.8	46.5	3.038
	여성	52.2	56.5	53.2	53.5	
연령 ²⁾	30세 미만	13.0	14.8	16.7	15.5	27.765***
	30~40세 미만	12.4	20.4	23.8	20.4	
	40~50세 미만	23.7	25.4	23.6	23.9	
	50~60세 미만	25.7	19.6	16.7	19.4	
	60~70세 미만	13.6	11.3	9.3	10.7	
	70세 이상	11.7	8.5	9.9	10.1	
	평균연령	49.7	46.5	45.3	46.6	

78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1집단	2집단	3집단	전체	X ² 또는 F ¹⁾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3	11.5	15.4	15.0	17.652*
	중학교 졸업	10.7	9.8	8.4	9.2	
	고등학교 졸업	36.8	38.0	36.0	36.5	
	전문대 졸업	9.0	11.0	11.8	11.0	
	대학교 졸업 이상	27.3	29.7	28.4	28.3	
종사상 지위	상용직 임금근로자	24.6	33.4	31.8	30.3	51.669****
	임시직 임금근로자	13.7	15.8	16.1	15.4	
	일용직 임금근로자	7.5	3.9	5.5	5.7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0.7	0.3	0.7	0.6	
	고용주	2.5	2.6	1.5	1.9	
	자영자	10.3	10.4	9.2	9.7	
	무급가족종사자	2.3	3.7	3.3	3.1	
	실업자	1.9	1.5	1.2	1.4	
비경제활동인구	36.6	28.5	30.8	31.9		
근로 능력 정도 ³⁾	근로가능	91.6	94.6	92.1	92.4	11.093†
	단순근로가능	4.6	4.0	4.2	4.2	
	단순근로미약자	3.4	1.5	3.4	3.1	
	근로능력 없어 경제활동 안함	0.5	0.0	0.3	0.3	
아동 ⁴⁾	있음	30.7	37.4	43.6	39.4	52.216****
	없음	69.3	62.6	56.4	60.6	
소득 ²⁾	가구 시장소득 평균	5,492	6,072	5,134	5,368	10.860****
재산 ²⁾	가구 순재산 평균	32,290	34,895	23,848	27,656	38.844****
주거 점유 형태	자가	62.3	68.5	61.0	62.5	25.851**
	전세	18.8	15.3	15.7	16.4	
	보증부월세	13.6	11.0	16.4	14.9	
	월세(사글세)	0.6	0.4	0.8	0.7	
	기타	4.7	4.9	6.0	5.5	

주: 1) † p<0.10, * p<0.05, ** p<0.01, **** p<0.001

2) Dunnett T3 방식을 통한 사후검증 결과,

- 연령 차이: 1집단 > 2집단, 3집단

- 소득 차이: 2집단 > 3집단

- 재산 차이: 2집단, 1집단 > 3집단

3) 단순근로가능(집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정도), 단순근로미약자(집안 일만 가능),

근로능력 없음(집안 일도 불가능)

4) 가구내 만18세 미만 아동가구원 유무

3개 집단이 복지의식으로 재추출한 의식군 외 사회정책과 관련된 여타의 의식영역에서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지를 보면, 2집단은 빈곤의 원인으로 개인적 이유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 원인도 동의하는 수준이 높다. 또한 2집단은 복지에 대한 최소보장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3집단은 빈곤의 원인으로 사회적 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리고 복지를 가족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수준이 두 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다.

2집단은 친복지수준이 낮으므로 최소보장에 대한 동의가 높은 것이 일관성을 갖는 결과이지만 3집단의 경우 취약계층의 지원을 지지하면서 가족의 책임으로 두는데 동의하는 경향을 보여 주목할 만하다. 오히려 1집단에서 가족 책임에 대한 동의가 약하다. 거칠게 해석해 보자면 노인의 경우 노인의 복지에 대하여 가족의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사회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가족책임에 대한 인식은 아동을 양육하는 중년의 성원에게서 보다 더 강한 것이라 추정된다. 정책적으로 연관하여 해석해보자면 노인의 복지에서 가족의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기제들에 대하여 노인들의 수용이 낮을 것이라 추정된다. 분배의 중요성에 대한 동의에서도 3집단은 다른 두 집단과 비교하여 분배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역시 2집단은 성장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80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표 3-31〉 잠재집단별 복지인식 관련 요인 특성

(단위: %)

		1집단	2집단	3집단	전체
원인_개인*	중요함	90.3	93.7	89.3	90.2
	중요하지 않음	9.7	6.3	10.7	9.8
원인 사회	중요하지 않음	20.7	29.4	13.0	17.4
	중요함	79.3	70.6	87.0	82.6
취약_지출	덜 지출	0.0	33.4	1.1	5.8
	현재수준 지출	13.9	43.8	5.4	13.5
	더 많이 지출	86.1	22.8	93.5	80.8
목구_지출	덜 지출	11.7	49.9	4.5	13.3
	현재수준 지출	14.2	29.1	7.8	12.7
	더 많이 지출	74.1	21.1	87.8	74.1
최소보장*	동의	15.1	27.2	15.7	17.3
	반대도 동의도 아님	16.8	18.9	13.1	14.9
	반대	68.1	54.0	71.2	67.8
가족책임*	동의	45.9	47.2	52.2	49.9
	반대도 동의도 아님	27.9	29.2	30.4	29.6
	반대	26.1	23.6	17.4	20.6
아동지원	반대	79.2	59.3	0.4	29.1
	반대도 동의도 아님	20.9	18.0	19.6	19.7
	동의	0.0	22.7	80.0	51.2
경찰지원	반대	28.1	50.7	11.3	21.5
	반대도 동의도 아님	29.1	22.9	23.6	24.9
	동의	42.9	26.4	65.2	53.6
격차해소	반대	3.6	7.3	1.2	2.8
	반대도 동의도 아님	16.7	19.2	5.1	10.2
	동의	79.7	73.5	93.7	87.1
분배중요	성장이 중요	52.9	58.5	45.3	49.2
	분배가 중요	47.1	41.5	54.7	50.8
조세부담	반대	19.3	73.8	32.6	35.6
	반대도 동의도 아님	2.2	15.7	7.2	7.2
	동의	78.5	10.5	60.3	57.1

주: 1) *: 해당 요인의 변수들은 친복지적 태도일수록 점수가 높아지도록 역접수화 함.

2) 표의 요인들의 세부항목은 3장 2절을 참조

자료: 8차 한국복지패널 복지인식 부가조사 원자료.



제4장 복지의식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제1절 연구문제와 영향요인에 대한 검토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영향요인 분석결과

제4절 소결: 결과의 요약과 해석



4

복지의식에 대한 << 영향요인 분석

제1절 연구문제와 영향요인에 대한 검토

본 장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복지의식 결정 요인은 그 동안 기존 연구에서 쟁점이 되어왔던 내용이지만 그 조작화에서 새로운 고려를 하여 불만한 요인이거나 또는 그 동안 도외시 되었으나 반영이 필요한 요인을 보완하여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이러한 포괄적 접근은 복지의식이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 본다.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논의는 많은 연구들에서 이루어졌다. 가장 대표적인 논쟁은 계급의 영향이 유지되는가 또는 존재하는가와 관련된다. 계급은 복지의 확장, 복지국가에 대하여 상이한 태도를 갖도록 영향을 미치는데 자본가 계급은 복지 확대를 위한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복지가 시장에서의 노동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아 반복지적 태도를, 노동자는 연대를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제로 복지에 대하여 지지적인 입장을 가진다고 설명되어왔다. 하지만 후기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계급이 분화되고 계급보다 계층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이 더 중요하여졌다는 입장도 강해졌다. 이러한 논쟁에서 각 입장을 균건하게 하기 어려운 요소가 더하여지는데 이는 계급의 조작화가 모호하고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계급 구분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생산수단의 소유여부를 가지고 집단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대부분의 연구는 직종이나 종사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계급을 조작화하고 분석에 투입한다.

종사상지위를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등으로 세분화하거나, 직종을 기준으로 전문직·경영감독직 등 중간계급과 사무직·단순노무직 등 노동자계급으로 구분하기도 하며 직종을 기준으로 더 상세화하여 관리직 등 전문직, 중간사무직 등, 단순노무직을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스발포스(Svallfors, 2011)와 같이 숙련도와 직위를 중심으로 계급을 구분하여, 비숙련노동자(unskilled workers), 숙련노동자(skilled workers), 하위 사무직(lower-level non-manuals), 중간직위 사무직(middle-level non-manuals), 고위 사무직(higher-level non-manuals and the self-employed)을 집단화하기도 한다. 요나스(Jonas, 2003)는 직종으로 계급을 구분하면서 근로자(working class-unskilled and skilled workers), 서비스직계급(service class-lower and higher level controllers and administrators), 중간계급(intermediate class-routine non-manuals, self-employed with less than 10 employees)으로 집단화하기도 하였다. 이성균(2002)은 계급적 측면을 구조적 수준과 사회적 태도 및 행위 수준으로 구분하여, 노동시장에서의 객관적 지위(종사상지위+직종구분), 계급적 행위(노동문제 관련 시위 및 파업 참여경험), 계급구성원의 사회적 태도(사회불평등의식, 반개민주의지수)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계급을 구분하는 집단화 변수를 명확하게 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당장 계급의 핵심적 기준을 분명하게 적용하기 어렵고 고용주를 다른 집단과 구분함에 있어서도 고용주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견고한 분석이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계급을 구분하는 변수의 조작화에 다른 해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연구들의 분류를 참고하여 직종과 종사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급변수를 구성하되, 너무 낮은

빈도의 범주가 분석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였을 뿐이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발생빈도가 너무 낮아서 별도의 독립변수를 구성하여 투입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주는 자영자와 함께 묶어 더비 변수로 처리하였다.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는 여러 관련 요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가능한 수준에서 계급의 순수 영향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계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었던 요인 두 가지, 계층과 이해관계 요인들은 역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계층변수로 주로 투입되었던 소득과 함께 재산을 요소로 새로이 투입하여 계층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계급의 개념을 조작화하는 과정에서 직종과 종사상 지위 뿐 아니라 재산도 계급의 조작화에 반영될 수 있다. 막스(Marx)는 생산수단의 소유여부를 계급구분의 주요한 기준으로 하였다. 물론 막스의 생산수단의 소유여부가 단순하게 재산의 소유와 등치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재산의 소유가 계급 구분에서 전제되는 것임에는 분명하다. 베버(Weber)에게도 자산은 계급을 분류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었으며 재산의 계급성은 계급 구분에서 자주 반복되어 고려되었다. 자산의 소유가 갖는 의미는 중간계급의 설명을 거치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졌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계급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자산은 그 의미가 인정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축적은 자산계급에게 유리하고 노동계급에게는 불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요지다(Duménil & Lévy, 2001; 장귀연, 2013: 14-16에서 재인용). 신자유주의 축적체제가 노동소득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자산투자를 장려하여 자산소득으로 상쇄하도록 하고, 그 결과 자산계급이나 자산투자가 가능한 고소득자는 더 많은 소득기회를 얻게 되는 반면 저소득 노동자는 빈곤화되는 양극화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생산수단을 갖지 않고,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이지만 고소득을 올리고 있어 무산자라고 하기 어려운 관

리자나 전문가들을 별도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것은, 생산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자산은 아니지만 이들이 자산³⁾을 소유하고 있다는 차별성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계급은 동 계급이 유사한 의식을 갖는다는 점에서 주목되어 왔다. 한국에서의 계급적 인식이 재산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재산을 영향요인으로 추가하면서 일반적 변수 구분에 입각하여 계층을 대변하는 변수로 구분하였다. 이유는 재산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단순하게 생산수단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계급구분에서 재산이 갖는 의의에 대하여 합의된 결론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계층을 대변하는 변수로 주거 등 재산을 활용하는 경향은 상대적으로 강하다. 계층의 영향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득은 공적 지원 이전의 소득인 시장소득으로 선택하고 재산은 부채를 뺀 순재산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이해관계는 좁게는 복지지위론의 관점에서 이해관계 차이를 설명하며, 특히 복지수급경험, 더 나아가서는 복지수요를 내재하고 있는 잠재적 복지대상자를 고려할 수 있다. 안상훈(2009)은 복지지위를 공공부조 수급액, 가구유형 등에 따른 잠재적 복지수요자를 중심으로 구분한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 경상소득총액, 근로자/자영자/고용주를 기준으로 구분한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 그리고 공공부문 근로, 기부·자원봉사 경험자를 기준으로 구분한 복지제공자로서의 지위로 구성한 바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변수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것은 복지수급경험을 들 수 있다. 물론 국내외 연구들에서 이해관계를 넓게 확대하여 복지수혜 경험뿐 아니라 성별, 연령, 교육수준, 고용지위, 소득수준 등의 인구학적 요인 및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괄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수들은 취약성으로 인한 복지수급의 가능성, 잠재력을 대변하는 것으로 실제 경험과는 차

3) 물론 이 때 자산은 기술재나 조직재로 생산수단으로서의 자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복지수급의 경험이 일부 사회성원에게 제한적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수급여부를 이해관계 요인으로 투입하되, 잠재적인 복지 이해관계로 성별과 연령, 장애여부를 투입하였다. 여타의 요인들은 다른 범주, 예를 들어 계급이나 계층 변수와 중복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요인으로 고려치 않았다.

그동안 기존 연구에서 도외시 되었으나 복지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으로는 주관적 인식을 언급할 수 있다. 주관적 인식으로 포함한 변수들을 살펴보면 크게 정치적 성향을 포함하여 평등에 대한 태도, 공공의 확대에 대한 태도, 수급자에 대한 태도 등을 포괄하는 경향이 있다. 이 밖에도 사회적 신뢰의 수준이나 생활만족도 등이 요인으로 고려된다. 주관적 인식으로 언급되는 요인들은, 종속변수인 복지의식을 구성하는 차원이나 항목들과 중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태도를 이용하여 태도를 설명하면서 발생하는 편의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주관적 인식 요인 중 기존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선택한 정치적 입장과 신뢰를 독립변수로 포괄하였다.

주관적 인식에서 자주 언급되는 요인으로는 신뢰와 귀속의식이 있다. 김신영(2010)은 물질적 이해관계 외 사회적 의식의 영향을 강조하는 접근에서 사회신뢰에 대하여 주목한 바 있으며 제도에 대한 신뢰가 복지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주목한 연구들이 적지 않다(Hjerm & Schnabel, 2011). 이엠과 슈나벨(Hjerm & Schnabel, 2011)은 개인의 주관적 인식(예를 들어 소속감과 같은)이 객관적 요인보다 복지국가 수용에 더 크게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정책에 대하여 지지적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다. 신뢰가 없으면 개인의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게 된다. 개인의 현재 손해가 미래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믿음, 사회

복지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복지에 대하여 지지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김신영, 2010).

복지의식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관련 요인의 영향을 서로 통제된 상태의 분석은 많지 않다. 그 이유의 상당부분은 연구자의 문제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자료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고 추측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영향을 줄 것으로, 또는 영향을 준다고 논의되고 검증된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로 특정 변수의 영향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그 간 각 연구에서 쟁점이 되어왔던 요인들의 영향과, 자료의 한계로 분석에 투입하지 못하였던 요인의 영향을 포괄적으로 탐색하여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본 장의 분석에서는 한국복지패널 8차 조사의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8차 조사의 경우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본을 재추출하여 복지의식을 조사한 자료이다. 복지의식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가구의 경제적 상황과 개인의 인구학적 특징 등 다양한 정보를 포괄하고 있어 복지의식에 대한 각 요인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에 매우 큰 이점을 가진다. 특히 앞서 다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투입하기 어려웠던 재산에 대한 정보를 포괄하고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종속변수는 앞의 제3장의 분석에 근거하여 사회정책에 대한 의식 중 요인분석에서 유의미한 요인군으로 묶였을 뿐 아니라 각 문항의 신뢰도 분석 결과에서도 그 신뢰도가 높았던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얻어진 복지의식은 정부 책임에 대한 의식이 핵심 내용으

로 한다. 포함된 문항을 보면 대체로 정부의 지출과 역할에 관한 문항들이다. 이러한 문항 구성을 고려하여 종속변수는 '정부책임'에 대한 의식으로 명하였다.

〈표 4-1〉 종속변수-정부책임에 대한 의식-의 구성

	문항
실업자지원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건강_지출	건강보험 및 보건의에 대한 정부지출을 확대하여야 한다
연금_지출	국민연금(노령연금)에 대한 정부지출을 확대하여야 한다
교육_지출	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을 확대하여야 한다
주거_지출	주거지원에 대한 정부지출을 확대하여야 한다
빈곤_지출	빈곤층 생활지원에 대한 정부지출을 확대하여야 한다
노인_지출	노인 생활지원에 대한 정부지출을 확대하여야 한다
장애인_지출	장애인 생활지원에 대한 정부지출을 확대하여야 한다
아동_지출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에 대한 정부지출을 확대하여야 한다
근능지원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대학무상	대학교육까지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보육무상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는 계급(직종과 종사상지위의 재구성), 계층(소득과 재산), 이해관계(인구학적 특징과 복지수급여부), 교육, 주관적 인식(정치적 입장과 신뢰)이다. 독립변수의 영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계급변수에서 시작하여 단계별로 변수군을 투입하여 모델을 분화하였다. 이러한 모델의 분류는 기존의 연구들이 특정 모델을 주로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왔다는 점, 그래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변수투입을 확대하면서 확인하여 본다는 점도 고려된 시도이다. 예를 들어 계급의 영향을 확인하

려는 연구는 계급변수를 중심으로 하여 제한적인 요인의 투입으로 분석 모델을 구성하였다. 계층의 영향을 보고자 한 연구도 충분히 관련 요인의 영향을 고려하여 모델을 구성하기 보다는 제한적인 요인의 투입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시도는 관련 요인의 영향을 폭 넓게 고려하면서 각 요인의 영향을 가능한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모델을 여러 개로 구성하여 투입하는 요인의 수를 늘려나가도록 하였다. 첫 번째 모델은 복지의식 결정요인 연구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어 왔던 계급의 영향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모델에서는 계급과 계층의 영향을 함께 고찰하여 보고, 다음으로 세 번째 모델에서는 이해관계를 투입하였다. 그리고 교육과 주관적 인식요인을 투입하여 모델 4와 모델 5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한 분석모델은 총 5개로 아래와 같다. 각 모델은 추가 변수의 통제로 주요 변수들의 영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확인하도록 구성된 것이다.

모델 1: 정부의 복지책임 인식에 계급이 미치는 영향 분석

모델 2: 정부의 복지책임 인식에 계급과 계층이 미치는 영향 분석

모델 3: 정부의 복지책임 인식에 계급과 계층, 그리고 이해관계가 미치는 영향 분석

모델 4: 정부의 복지책임 인식에 계급, 계층, 이해관계, 그리고 교육이 미치는 영향 분석

모델 5: 정부의 복지책임 인식에 계급, 계층, 이해관계, 교육, 그리고 정치적 입장과 신뢰 등 주관적 인식이 미치는 영향 분석

〈표 4-2〉 독립변수의 구성과 처리

구분	변수		변수 처리 등 기타
계급	직종	관리자 등, 전문직, 군인	기준변수
		사무, 서비스, 판매직	
		숙련, 기능, 조립	
		단순노무	
	종사상 지위	상용직	기준변수
		임시, 일용직	
		자영과 고용주	
기타			
계층	소득	시장소득	소득액
	재산	순재산	순재산액, 총재산-부채
이해관계	성		기준변수 남성, 여성 1
	연령		만 연령
	혼인상태		기준변수 미혼, 기혼 1
	장애여부		기준변수 비장애, 장애 1
	복지수혜여부		기준변수 비수급, 수급 1
교육	교육연수		교육받은 연수(예 무학은 0, 대졸은 16)
주관적 인식	정치적 입장	정치적 성향	5. 매우 진보적, 4. 다소 진보적 3. 중도, 2. 다소 보수적, 1. 매우 보수적
	사회적 신뢰	사람들에 대한 신뢰 (7자 조사 자료)	기준변수 신뢰안함, 신뢰함 1 ¹⁾

주: 1) 사람들에 대한 신뢰의 경우 그 응답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만하다', '매우 조심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로 구분되었으며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구분하여 처리하였다.

분석에 투입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는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개인단위 분석이고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은 그 개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다.

〈표 4-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변수		백분율 또는 평균(표준편차)
계급	직종	관리자 등, 전문직, 군인	13.8
		사무, 서비스, 판매직	26.4
		숙련, 기능, 조립	15.7
		단순노무	10.8
	종사상 지위	상용직	30.1
		임시, 일용직	21.8
		자영과 고용주	11.8
		기타	36.3
계층	소득	시장소득	5342.3만원/년(4605.9)
	재산	순재산	27774.4만원(34037.7)
이해관계	성	남성	46.4
		여성	53.6
	연령		46.7(15.7)
	혼인상태	미혼	20.7
		기혼	79.3
	장애여부	비장애	93.3
		장애	6.7
	복지수혜여부	비수급	34.4
		수급	65.6
	교육	교육연수	
정치적 입장	정치적 성향	1. 매우 보수적	6.6
		2. 보수적	25.5
		3. 중도	38.1
		4. 다소 진보적	21.1
		5. 진보적	3.1
사회적 신뢰	사람들에 대한 신뢰 (7자 조사 자료)	신뢰함	46.2
		신뢰안함	43.8
정부책임에 대한 인식			5.0(5.5)

제3절 영향요인 분석결과

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계급변수만 투입한 모델 1의 경우 계급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2 도 .005로 매우 낮고 투입된 요인의 베타값들도 대개 유의미하지 않다. 단지 자영자와 고용주의 경우 상용직과 비교하여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자와 고용주를 상용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본계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자본계급의 영향이 약하지만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본계급이 상용직 대비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여타의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의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계급변수와 함께 계층변수도 투입한 모델 2의 결과를 보면 계층의 영향은 매우 강력하다. R^2 도 .032로 모델 1과 비교하여 그 설명력이 크게 높아졌고 소득과 재산의 영향은 유의미하며 매우 크다.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재산이 많을수록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하여 지지적이지 않다. 재산의 영향은 소득의 영향보다 커서 재산이 많은 사람은 복지에 대한 정부 책임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언급하였던 납세부담자들의 복지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일관성이 있는 결과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에서 재산의 영향을 규명하지 못하였는데 재산의 영향이 소득보다 더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계층변수를 계급변수와 함께 투입한 모델 2의 경우 모델 1에서 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던 직종과 종사상 지위 변수 중 일부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변화되었다. 소득과 재산이 동일하다면 관리자·전문직·군인 대비 숙련·기능·조립과 단순노무직의 경우 복지에 대한 정부책임 강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4〉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에 대한 요인의 영향 분석 결과

		모델 1 Beta	모델 2 Beta	모델 3 Beta	모델 4 Beta)	모델 5 Beta	
상수항		4.887***	7.476***	9.523***	10.753***	8.920***	
계급	직종	사무, 서비스, 판매직	.035	.014	.009	-.003	-.013
		숙련, 기능, 조립	-.007	-.043•	-.043	-.064*	-.074*
		단순노무	-.001	-.043•	-.015	-.032	-.030
	종사상 지위	임시, 일용직	.008	-.026	.014	.024	.011
		자영과 고용주	-.048*	.047*	-.007	-.007	-.004
		기타	-.028	-.035•	.006	.006	.009
계층	소득		-.052**	-.078**	-.064**	-.079**	
	재산		-.141***	-.109***	-.110***	-.112***	
이해 관계	성			-.080***	-.094***	-.096***	
	연령			-.153***	-.172***	-.149***	
	혼인상태			.017	.020	.027	
	장애여부			.002	-.002	.007	
	복지수혜여부			.122***	.126**	.139***	
교육					-.039	-.044	
정치적 성향						.116**	
신뢰						-.032	
R2		.005	.032	.065	.070	.092	

주: •: p<.1, *: p<.05, **: p<.01, ***: p<.001

이해관계 변수까지로 투입변수를 확대한 모델 3의 분석 결과를 보면 이해관계의 영향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²도 .065로 모델의 설명력이 크게 높아졌다. 이해관계 변수 중 혼인상태와 장애여부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과 연령, 그리고 복지수혜여부의 영향은 유의미하고 그 영향력의 수준도 높다. 연령이 높을수록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여성이 남성보다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하여 부정적이다. 여성과 노인이 복지 수혜의 주 대상이라고 할 때, 기존의 논리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과 여성이 복지확대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성과 노인이

사회정책으로부터 그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 역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복지수혜경험의 영향이 매우 강력하게 유의미하기 때문이다. 복지수혜의 경험은 복지에 대한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보편적 제도의 역사가 거의 없거나 짧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여성이라고 또는 노인이라고 해서 복지에 대한 정부 책임에 긍정적이기는 어렵다고 추정된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계층 변수와 함께 이해관계 변수까지 투입한 경우 계급 변수의 영향은 무의미해졌다는 것이다. 앞의 모델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계급변수 중 직종이나 종사상 지위의 영향은 여성과 노인이 집중된 직종과 종사상 지위의 영향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계급과 달리 계층의 영향은 모델 3에서도 매우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

교육의 영향을 함께 고려한 모델 4의 결과는 모델 3과 큰 차이가 없다. R^2 의 변화도 거의 없고 교육은 그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교육의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다른 입장을 보여 왔다. 매개변수로 중요하다고 하든지 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든지, 또는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관련 변수의 영향을, 그리고 그동안 배제되었던 재산의 영향을 고려한 상태에서 교육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모델 4에서 교육의 영향은 다른 변수의 영향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교육을 통제된 상태에서 직종 중 전문·관리직과 대비하여 숙련·기능·조립 직종 종사자의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약하지만 유의미한 것으로 살아났다. 숙련·기능·조립 직종 종사자의 영향은 모델 5에서도 약하지만 유의미하게 유지된다. 김희자(1999)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사무직 등으로 구성된 구중간계급보다 신중간계급이 복지의 사적 책임을 더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을 참고할 때, 숙련·기능·조립의 직종이 복지의 사적 책임을 강조하고 국가책임에 대하여 부정

적인 것으로 나타나 일관성이 엇보인다.

모델 5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신뢰의 수준을 추가하여 그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정치적 성향은 복지에 대한 정부 책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하여 지지적이었다. 김영란(1995), 그리고 김상·정원오(1995)는 그들의 연구에서 계급보다 이념이 복지태도의 차이를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주관적 인식 중 신뢰는 그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비교적 포괄적인 요인을 투입한 결과, 기존 연구와 상이한 몇 가지 결과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결과의 해석에는 더 많은 추가 분석을 필요로 한다. 대표적으로 복지수혜경험과 정치적 성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성과 노인이 복지에 대한 정부책임에 부정적 태도를 갖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좀 더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제4절 소결: 결과의 요약과 해석

본 연구의 영향요인 분석은 기존의 연구에서 거론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하였다. 가능한 관련 요인들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였을 경우 각 요인의 영향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요인들의 영향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계층의 영향 중 재산의 영향이 강력하다는 점과 복지이해에서 잠복된 이해보다는 실제 수급 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 등이 그러한 발견의 예이다.

우리나라에서 복지이식에 대한 계급의 영향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계층의 영

향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해관계의 영향도 강하게 나타났다. 소득과 재산이 많을수록 복지에 대하여 부정적이었으며 기존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재산의 영향이 더 강력하였다. 이해관계의 영향에는 의외의 경향이 확인되었다. 잠재적인 복지수혜자로 복지에 대하여 지지적일 것이라 가정한 여성과 노인의 복지에 대한 지지가 낮았다. 교육의 영향도 기존 연구와 달리 유의미하지 않았다. 주관적 인식으로 자주 투입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던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도 그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정치적인 진보성의 수준은 복지에 대한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결국 소득과 재산이 낮고, 남성이면서 젊은, 그리고 복지수혜의 경험이 있으며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회구성원이 복지에 대하여 지지적이다. 소득과 재산의 부정적 영향은 납제자로서의 이해관계로 해석될 여지를 갖고 있다. 납세부담에 대하여 우려하는 계층에 대하여 복지가 사회에 어떠한 긍정적 기여를 하는지 의미를 공유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노력이 중요하다.

소득과 재산의 영향을 이해하는 것과 별개로 왜 여성과 노인이 복지에 대하여 지지적이지 않은지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잠재적 복지수요, 잠재적 수혜자들의 복지에 대한 지지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컨대 실제 복지수급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생활상의 취약성이나 또는 위험만으로 복지를 수급할 가능성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아서 잠재적 수혜자의 복지에 대한 지지가 약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복지에 대한 기대가 높은 집단이지만 수혜의 경험이 없어서 복지에 대하여 더욱 부정적인 것인 등 여러 가지 가정이 가능할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정직한 분석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분석결과, 복지수급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복지에 대한 지지가 높다.

분석결과에 비추어 보자면 복지가 확충되어 복지 수급 경험이 확대되는 것이 미래 복지에 대한 지지기반을 넓히는 가장 분명한 과정이다. 해외 연구자 중 복지의 경로가 복지의식에 미친 영향을 강조한 연구들의 핵심 요지가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한다. 교육에 대한 분석 결과만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사회에서 공동체의 의미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복지의식 연구에서 자주 거론하였던 인식의 불안정성, 또는 인식의 비일관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분석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실정과 그로부터 초래된 의식의 특성이 암시된다. 일정한 경향성을 엿볼 수 있는 결과들을 단순하게 인식의 비일관성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계층의 영향, 잠재적 복지 수혜자의 무감, 그리고 정치적 성향의 작동을 고려한 사회정책의 기획이 필요하다.



제5장 복지의식 변화의 궤적 및 영향요인 분석

제1절 복지의식 변화의 분석 의의

제2절 연구모형 및 질문

제3절 연구방법

제4절 분석결과

제5절 소결: 결과의 요약과 해석



5

복지의식 변화의 궤적 및 <<영향요인 분석4)

제1절 복지의식 변화의 분석 의의

본 장에서는 복지의식을 포괄하는 패널자료인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의 복지의식수준 및 변화의 궤적을 추정하고자 한다. 둘째, 복지의식 궤적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고찰한다. 셋째, 복지의식 궤적의 예측요인이 무엇인지 고찰한다. 넷째, 복지의식 궤적의 예측요인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복지의식 수준, 변화, 및 관련요인들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복지이식궤적 및 예측요인들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준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향후 국민의 복지이식 관련된 실용적 개입의 전략구상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정 사회정책의 형성 및 시행에 따른 국민의 복지경험이 복지이식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투표를 통해서 정책형성에 영향을 주는 주체인 국민들의 복지이식은 한 나라의 복지정책 형성 및 발달에 영향을 준다. 최

4) 2013년에 복지이식 부가조사 연구대상을 새롭게 샘플링한 관계로 2007년과 2010년 참가자들 중에 탈락자가 많다. 2007부터 2차 3차까지 모두 참석한 377명, 2010년부터 3차까지 모두 참석한 590명, 2013년 연구 참가자 4,185명에 대한 분석을 모두 시행한 결과, 전체적인 변화추이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도 잠재성장 모형과 repeated measure ANOVA를 모두 시행한 결과, 두 결과가 크게 차이나지 않고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2013년 참여자를 기준으로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근 10여 년간 일련의 정치적 과정에서 “복지”가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면서 사회정책이 정치권은 물론 전 국민의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최근 국내에서도 사회정책 형성과 관련이 있는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한국의 복지의식이 어떠한다는 특성들에 대한 기술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복지의식에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인이 어떠한 것들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 한국의 복지의식에 대한 관심도 증가를 반영하듯이 2000년대 이전의 연구들에 비해(예. 김영란, 1995; 김희자, 1999; 안치민, 1995; 이인재, 1998; 이행봉, 1999 등) 2000년대 이후의 연구들이 수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강신욱 외, 2011; 김신영, 2010; 김영순·여유진, 2011; 김태일·최하정, 2011; 김희진·전희정, 2010; 노대명 외, 2011; 모지환·김행영, 2009; 신광영 외, 2003; 안상훈, 2009; 이성균, 2002; 이한나·이미라, 2010; 이훈화·김윤태·이원지, 2011; 주은선·백정미, 2007; 조돈문, 2001; 최유석, 2011 등).

연구의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도 1990년대에는 복지의식에 대한 탐색적이고 기술적인 연구가 대부분이었다(김영란, 1995; 김희자, 1999, 이인재, 1998 등). 이에 비해 2000년대 들어서 연구들은 이러한 복지의식 특성에 대한 기술과 더불어 대상자 특성에 따라서 복지의식의 차이가 있는지 또는 복지의식 관련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정책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고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전국 대표샘플이 아닌 편의샘플을 이용한 연구들이어서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또한 복지의식 및 사회정책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는 횡단자료를

이용한 횡단연구들이기 때문에, 기존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복지의식이 나 사회정책형성에 대한 장기적 발전방안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2006년부터 시작된 한국복지패널은 가구 및 개인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실태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2007년부터 3년마다 한 번씩 복지의식에 대한 부가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2013년 현재 2006년부터 총 8차 년도의 복지패널 데이터가 구축되었으며, 2007년부터 시작되어 3년 주기로 실시되는 복지의식 부가조사는 2013년 현재 3차 년도 데이터가 구축되었다. 본 절에서는 복지패널 복지의식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조사기간 동안의 복지의식 궤적을 추정하고 관련요인을 살펴본다.

제2절 연구모형 및 질문

사람들의 복지의식의 형성은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연령,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과 장애 경험이 있는지의 개인특성 변수들은 복지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복지의식 궤적의 관련요인을 살펴볼 때는 이러한 개인특성 변수들을 통제해 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포함하고, 나아가 다중집단분석을 통해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서 복지의식 궤적이나 예측요인이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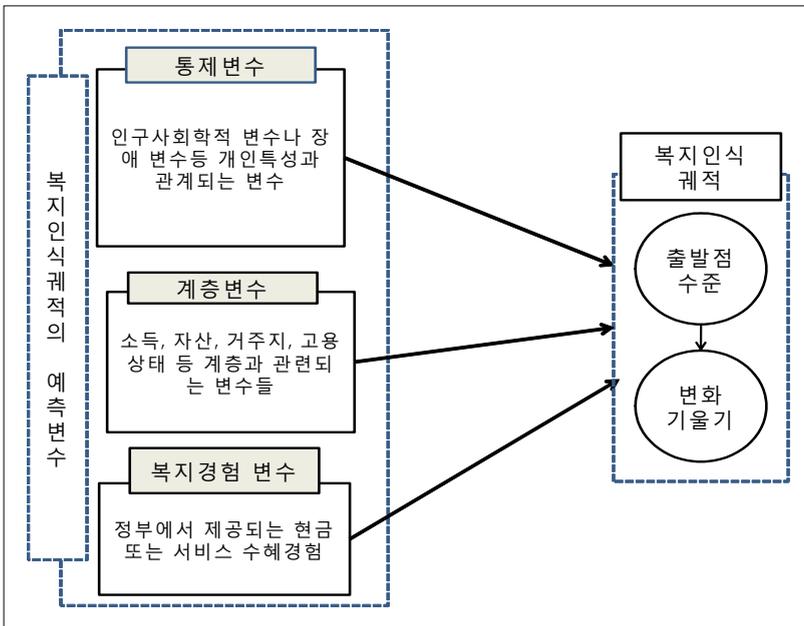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이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사는 지역이 어디이며,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는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이다. 따라서 소득수준, 자산, 거주지, 경제활동 참여 상태에 따라서 사람들의 계층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 소득, 자산, 거주지, 경제활동 참여 상태 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상이한 계층적 지위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복지의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나 급여를 이용 경험도 복지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층적 지위가 안정적인 때는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도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보조금, 기초보장 수급, 또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해 본 사람들의 복지의식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복지경험변수로 복지의식 궤적의 예측요인으로 포함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본 장에서는 [그림 5-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5-1] 연구모형



위의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형성된 복지패널 데이터와 복지의식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음의 네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우리나라 국민의 복지의식 궤적은 어떠한가?

- 1-1. 1차년도(2007년)의 우리나라 국민의 복지의식 수준은?
- 1-2.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복지의식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복지의식 궤적이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 2-1. 복지의식 궤적이 연령대별 차이가 있는가?
- 2-2. 복지의식 궤적이 성별 차이가 있는가?
- 2-3. 복지의식 궤적이 소득수준별 차이가 있는가?
- 2-4. 복지의식 궤적이 교육수준별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복지의식 궤적의 예측요인은 무엇인가?

- 3-1. 각각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계층변수, 복지경험 변수들과 복지의식 궤적의 개별적 관계는 어떠한가?
- 3-2.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계층변수와 복지경험 변수들은 복지의식 궤적과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 복지의식 궤적의 예측요인들이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 4-1. 복지의식 궤적의 예측요인들이 연령(세대) 별로 차이가 있는가?
- 4-2. 복지의식 궤적의 예측요인들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4-3. 복지의식 궤적의 예측요인들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4-4. 복지의식 궤적의 예측요인들이 교육수준 별로 차이가 있는가?

제3절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한국복지패널에서 복지의식 부가조사는 2007년에 1,694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2010년에는 총 2,13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2013년에 시행된 3차 복지의식 부가조사 데이터는 총 4,185명이 참석하였다. 2013년 복지의식 부가조사 연구대상자들을 새롭게 모집하는 과정에서 2007년과 2010년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서 표본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3년을 기준으로 복지의식 부가조사에 참석한 4,185명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한다. 복지패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패널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2. 변수

가. 종속변수: 복지의식

복지의식의 구체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의식의 개념적 정의를 특정사안에 대한 정부 책임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으로 정의한다. 한국복지패널의 복지의식 부가조사에서 사용된 총 35개 관련 문항들 중에서 요인분석들 통하여 요인 부하량이 낮은 문항들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12개 문항으로 복지의식변수를 구성하였다. ‘건강보험 및 보건’, ‘국민연금(노령연금)’, ‘교육’, ‘주거지원’, ‘빈곤층 생활지원’, ‘노인 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지원’, ‘대학교육 지원’, ‘부상보육’, ‘실업자 지원’,

‘근로능력자 지원’ 영역에서 그 운영 및 재정 부담에 대한 정부책임을 지지하는 수준으로 구성된 지수이다. 정부책임 지지수준으로 구성된 복지의식의 구체적 구성과정은 제3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본 장에서는 총 12개 복지의식 변수들의 평균을 각 연도별로 계산한 다음 복지의식 궤적의 무조건부 모형을 형성하고, 이를 최종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나.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복지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인구사회학적 개인특성 변수들인 통제변수와 시장소득, 주택가격, 거주지역, 경제활동 참여상태 등의 계층변수들 및 정부보조금 수혜정도, 기초보장 수급여부, 복지서비스 이용여부 등의 복지경험 변수들을 포함한다. 독립변수들은 2007년에서 2013년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변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통제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

- 연령 : 조사년도 - 출생년도를 계산 조사기간 동안의 평균나이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 성별 : 여=0, 남=1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 교육 : 조사기간 동안의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가장 높은 교육수준을 중심으로 교육고등이상 = 1, 교육고등미만 = 0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 혼인상태 : 조사기간 동안의 혼인상태 중에서 최소한 한 번 이상 유배우자 상태로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변수를 구성하였다. 분석에는 유배우=1, 기타=0으로 투입하였다.

- 장애유무 : 조사기간 동안의 장애상태 중에서 최소한 한 번 이상 장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변수를 구성하였다. 분석에는 장애있음=1, 장애없음=0으로 투입하였다.

2) 독립변수: 계층변수

- 시장소득 : 조사기간 동안의 소득들의 평균으로 변수를 구성하였다. 수치가 높을수록 시장소득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편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소득의 자연로그 변환 값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 주택 가격 : 조사기간 동안의 집 가격으로 조사된 것의 평균으로 변수를 구성하였다. 수치가 높을수록 집 가격이 비싼 것을 의미한다. 편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 가격의 자연로그 변환 값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 대도시 거주 : 조사기간 동안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번이라도 서울이나 광역시등 대도시에 거주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변수를 구성하였다. 대도시 거주 = 1, 기타 = 0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 상용직 임금근로자 : 조사기간 동안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중심으로 한 번이라도 상용직 임금근로자로 경제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변수를 구성하였다. 상용직 임금근로자 = 1, 기타 = 0으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3) 독립변수: 복지경험 변수

- 정부보조금 : 조사기간 동안 수령한 정부 보조금 수령 액수의 평균으로 변수를 구성하였다. 수치가 높을수록 정부보조금을 많이

받은 것을 의미하며 편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로그 변환 값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 기초보장 수급여부 : 조사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기초보장수급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변수를 구성하였다. 기초보장수급 = 1, 비수급 = 0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 복지서비스 이용여부 : 조사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복지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변수를 구성하였다.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있음=1, 없음=0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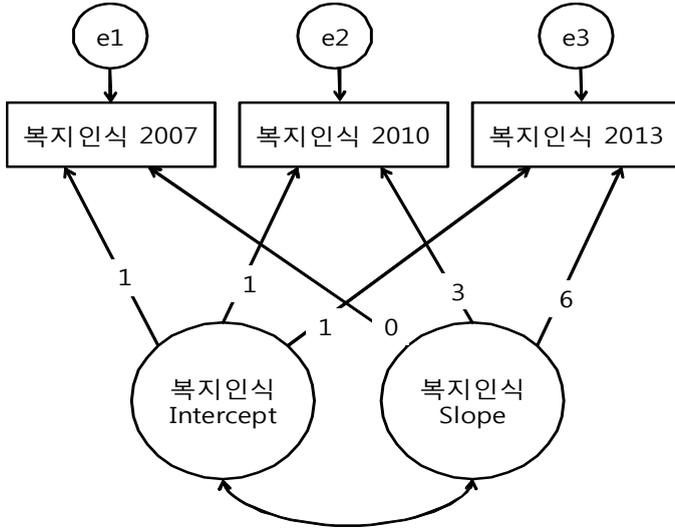
3. 분석방법

제2절에서 제시된 연구문제 4 가지에 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첫 번째 연구 질문인 우리나라 국민의 복지의식 궤적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모형의 무조건부 모형을 이용한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인 복지의식 궤적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유무에 대한 검증은 무조건부모형에 대한 다중집단분석을 통해서 실시한다. 세 번째 질문인 복지의식 궤적의 예측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모형의 조건부 모형을 이용한다. 네 번째 연구 질문인 예측요인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모형에 대한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한다. 이들 각각에 대한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무조건부 모형

첫 번째 연구문제인 “우리나라 국민의 복지의식 궤적은 어떠한가?”는 잠재성장모형의 무조건부 모형을 이용해서 분석한다. 무조건부 모형은 [그림 5-2]에서 도식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림 5-2] 복지인식의 무조건부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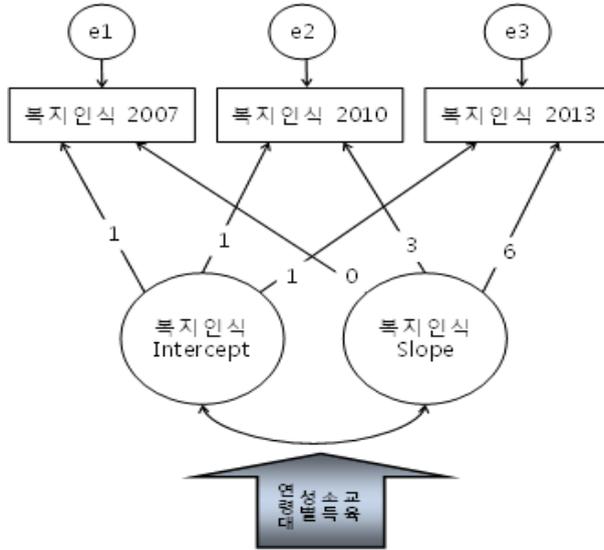


구체적으로 연구질문 1-1(즉, 1차년도(2007년)의 우리나라 국민의 복지인식 수준은 어떠한가?)은 [그림 5-2]에 나타난 복지인식 절편(intercept)에 대한 추정을 통해서 파악하고, 연구질문 1-2(즉,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복지인식 변화는 어떠한가?)에 대한 대답은 [그림 5-2]의 복지인식 경사(slope)에 대한 추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나. 무조건부 모형의 다중집단분석

두 번째 연구문제인 “복지인식 궤적이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는 무조건부 모형에 대한 다중집단분석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림 5-3]은 무조건부 모형에 대한 다집단 분석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연령대, 성별 및 교육수준(고졸이상 vs. 미만)에 따라서 복지인식 궤적이 차이가 있는지 각각 분석한다.

[그림 5-3] 무조건부 모형의 다중집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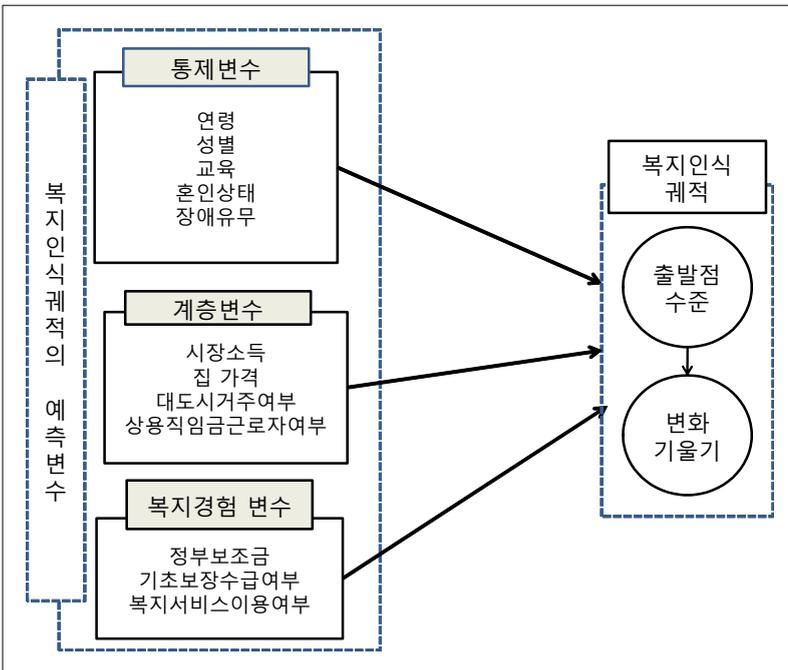


구체적으로 연구질문 2-1(즉, 복지의식 궤적이 연령대별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연령대(60세 이상 vs. 미만)에 따른 복지의식 궤적의 차이에 대한 다중집단분석을 통해서 가능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연구질문 2-2(즉, 복지의식 궤적이 성별 차이가 있는가?)는 성별에 따른 복지의식 궤적의 다중집단분석을 통해서 해결하고, 연구질문 2-3(즉, 복지의식 궤적이 소득수준별 차이가 있는가?)은 소득수준(평균소득 이상 vs. 미만)에 따라서 복지의식 궤적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함으로써 해결한다. 또한 연구문제 2-4(즉, 복지의식 궤적이 교육수준별 차이가 있는가?)는 고졸이상의 궤적이 고졸미만의 궤적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다중집단분석을 통해서 해결한다.

다. 조건부 모형

세 번째 연구문제인 “복지의식 궤적의 예측요인은 무엇인가?”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한다. 첫째, 각각의 예측변수와 복지의식 궤적의 관계를 파악하고, 둘째, 전체 예측요인을 하나의 모형에 포함한 잠재성장모형의 조건부 모형에 대한 분석을 한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고 있는 잠재성장모형의 조건부 모형은 [그림 5-4]와 같다.

[그림 5-4] 조건부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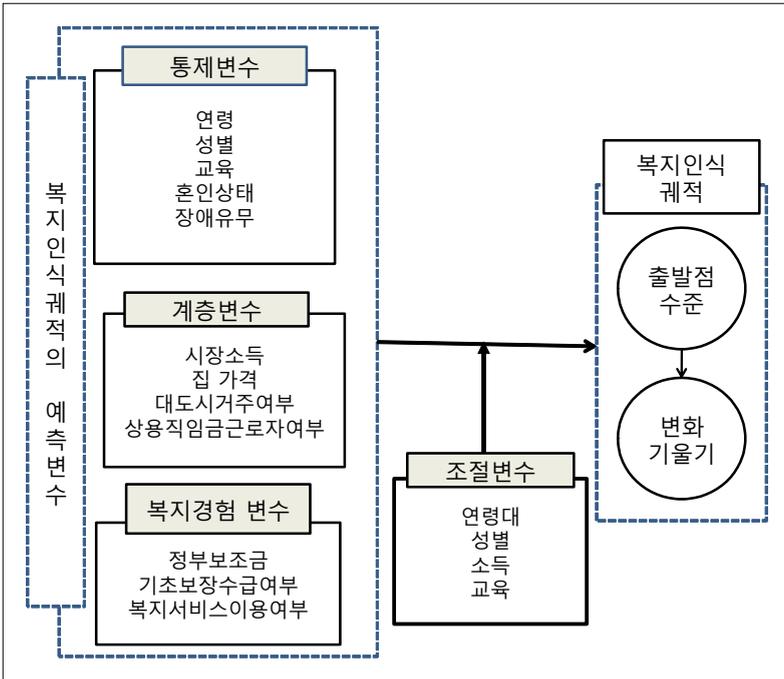


[그림 5-4]에 나타난 것처럼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계층변수와 복지경험 변수들에 따라서 복지인식 궤적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라. 조건부 모형의 다중집단분석

네 번째 연구문제인 “복지의식 궤적의 예측요인들이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는 조건부 모형에 대한 다중집단 분석을 통해서 해결한다. 조건부 모형의 다중집단분석의 개요는 [그림 5-5]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 5-5] 조건부 모형의 다중집단분석



먼저 조건부 모형의 다중집단분석을 통해서 연구문제 4-2-1(즉, 복지의식 궤적의 예측요인들이 연령(세대) 별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2-2(즉, 복지의식 궤적의 예측요인들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2-3(즉, 복지의식 궤적의 예측요인들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

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2-4(즉, 복지의식 궤적의 예측요인들이 교육 수준 별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검증을 한다.

제4절 분석결과

1. 기술통계

아래 <표 5-1>은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을 보여주는 분석결과로 종속변수인 복지의식과 독립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를 정리한 것이다.

<표 5-1> 기술통계: 연구참여자들의 특성

변수	가중치 비적용			가중치 적용		
	평균	N	%	평균	N	%
복지인식	복지인식2 복지인식5 복지인식8	0.526 0.539 0.426		0.593 0.566 0.408		
연령		55.145		47.579		
성별	남성	1793	42.8%	1951	46.3%	
	여성	2392	57.2%	2264	53.7%	
개인특성 변수	교육	고졸이상 고졸미만	2368 1817	56.6% 43.4%	3208 1008	76.1% 23.9%
	혼인상태	유배우자 무배우자	2807 1378	67.1% 32.9%	2852 1364	67.6% 32.4%
장애유무	장애있음	432	10.3%	285	6.8%	
	장애없음	3753	89.7%	3931	93.2%	
계층변수	시장소득 (Ln*시장소득)	3809.588 7.731		5221.706 8.196		
	집가격 (Ln집가격)	12181.70 7.946		15918.87 8.529		
	거주지역	대도시 기타지역	1771 2414	42.3% 57.7%	1906 2310	45.2% 54.8%
	경제활동참여상태	상용직임금근로자 기타	861 3324	20.6% 79.4%	1329 2887	31.5% 68.5%
복지경험 변수	정부보조금 (Ln정부보조금)	130.257 3.108		103.448 2.384		
	기초보장	수급 비수급	336 3849	8.0% 92.0%	188 4028	4.5% 95.5%
	복지서비스 이용여부	이용 비이용	2998 1187	71.6% 28.4%	2937 1278	69.7% 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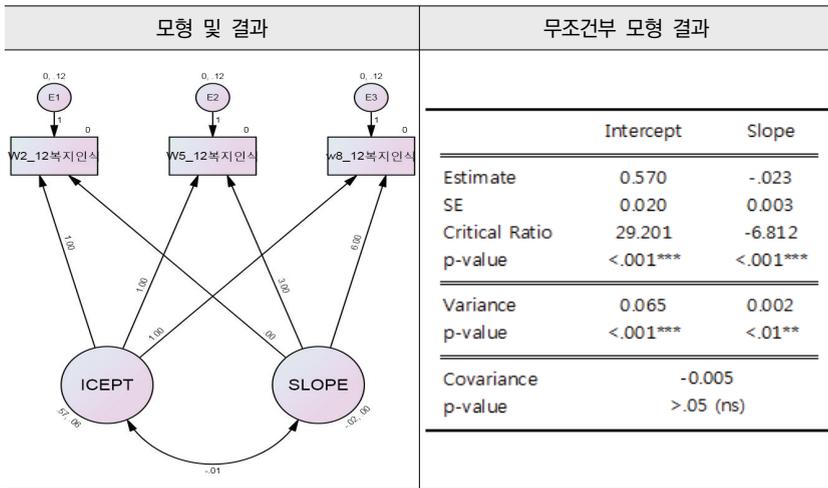
* Ln: 자연로그 변환한 변수

2. 분석결과

연구문제 1. 우리나라 국민의 복지인식 궤적은 어떠한가?

1차년도(2007년)의 우리나라 국민의 복지인식 수준은 0.570으로 나타났다(Intercept(se)=0.570(0.020), CR=29.201, $p < .001$). 여기서 복지인식은 12개 영역에서 정부책임에 대한 지지를 의미한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복지인식 변화를 보면 매년 평균적으로 정부책임에 대한 지지가 0.023 정도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lope(se)=-.023(0.003), CR=-6.812, $p < .001$).

[그림 5-6] 무조건부 모형의 분석결과



무조건부 모형의 분석결과를 통합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참가자들은 2007년에 평균 0.570의 복지인식수준을 나타내었고 (Intercept=0.570, $p < .001$), 향후 매년마다 평균 0.023 정도씩 복지의

식 수준이 낮아 졌다(Slope=-.023, $p<.001$). 또한 출발점 변량(var=0.065, $p<.001$)과 기울기의 변량(var=0.002, $p<.01$)에 있어서 개인차가 유의하게 나타나서 조건부 모형을 통해서 관련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문제 2. 복지의식 궤적이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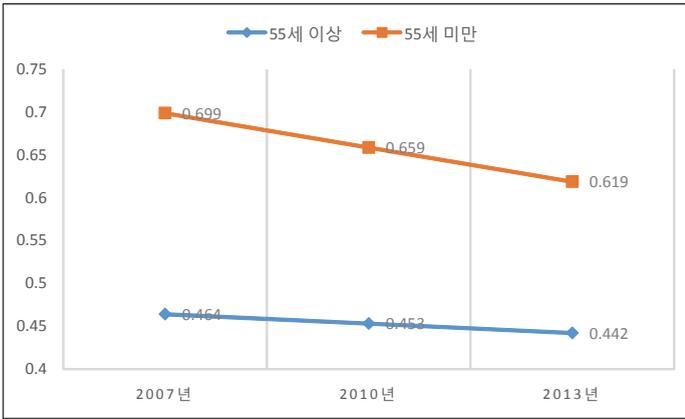
우선 복지의식 궤적이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자. 연령대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 참여자의 평균연령인 55세를 기준으로 평균연령 이상과 미만을 비교하였다. 출발점과 기울기가 연령대별로 동질한지를 검증한 결과, 출발점과 기울기에 있어서 최소한 하나는 차이가 있다(CMIN(df)=56.045(2), $p<.001$)는 것을 보여주었다. 집단간 차이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출발점(Critical Ratio for Difference(CRD)=6.118, $p<.001$)과 기울기(Critical Ratio for Difference(CRD)=-4.261, $p<.001$) 모두 연령대 별로 유의하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5-2>에서 나타난 것처럼 55세 이상 참여자 사이에서는 출발점에서 평균 0.464 정도의 복지의식을 나타내었고(Intercept=0.464, $p<.001$) 향후 일 년마다 평균 0.011 정도 복지의식 수준이 낮아 졌다(Slope=-0.011, $p<.01$). 55세 미만 참여자 사이에서는 출발점에서 평균 0.699 정도의 복지의식을 나타내었고(Intercept=0.699, $p<.001$) 그 이후도 해 마다 평균 0.040 정도 씩 복지의식 수준이 낮아진 것이다(Slope=-0.040, $p<.001$).

종합하면, 55세 미만은 출발점에서 55세 이상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의식을 나타내었으나(CRD=6.118, $p<.001$) 향후 55세 이상보다 해마다 더 빠른 속도로 복지의식 수준이 낮아졌다(CRD=-4.261, $p<.001$).

〈표 5-2〉 복지의식궤적의 연령대별 차이

	궤적	Estimate	SE	CR	p-value
55세 이상	Intercept	0.464	0.023	20.108	<.001
	Slope	-0.011	0.004	-2.578	<.01
55세 미만	Intercept	0.699	0.030	22.722	<.001
	Slope	-0.040	0.005	-7.797	<.001

[그림 5-7] 복지의식궤적의 연령대별 차이



연구문제 2-2인 복지의식 궤적이 성별 차이가 있는가와 관련하여 출발점과 기울기에서 궤적이 연령대 별로 동질한지를 검증한 결과, 복지의식 궤적은 성별에 따라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CMIN(df)=2.875, $p>.05$, ns)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3과 관련하여 복지의식 궤적의 소득수준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 참여자의 평균소득인 3,809.588을 중심으로, 평균소득 이상과 미만을 비교하였다. 출발점과 기울기가 소득수준별로 동질한지를 검증한 결과를 보면(CMIN(df)=9.509(2), $p<.01$), 출발점과 기울기에 있어서 최소한 하나는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출발점(CRD=-2.208, $p<.05$)과 기울기(CRD=2.778, $p<.01$) 모두 연령대 별로 유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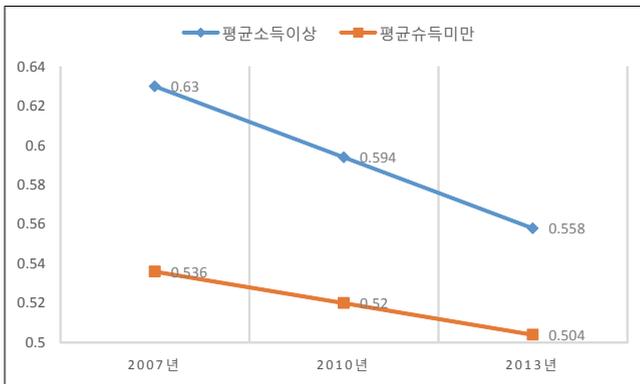
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5-3>에서 나타난 것처럼 평균 소득 이상 응답자는 출발점에서 평균 0.630 정도의 복지인식 수준을 나타내었고(Intercept=0.630, $p < .001$) 향후 일 년마다 평균 0.036 정도 씩 복지인식 수준이 떨어졌다(Slope=-0.036, $p < .001$). 평균소득 미만 응답자는 출발점에서 평균 0.536 정도의 정부 책임 지지수준을 나타내었고(Intercept=0.536, $p < .001$) 그 이후도 해 마다 평균 0.016 정도 씩 그 지지 수준이 낮아 졌다(Slope=-0.016, $p < .001$).

종합하면, 평균소득 이상인 사람들이 평균소득 미만인 사람들보다 출발점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복지인식을 나타내었으나(CRD=-2.208, $p < .05$) 향후 평균소득 미만인 사람들 보다 해마다 빠른 속도로 복지인식 수준을 감소시켰다(CRD=2.778, $p < .01$).

<표 5-3> 복지인식궤적의 소득수준별 차이

	궤적	Estimate	SE	CR	p-value
평균소득 이상	Intercept	0.630	0.036	17.624	<.001
	Slope	-0.036	0.006	-5.862	<.001
평균소득 미만	Intercept	0.536	0.023	23.540	<.001
	Slope	-0.016	0.004	-3.902	<.001

[그림 5-8] 복지인식궤적의 소득수준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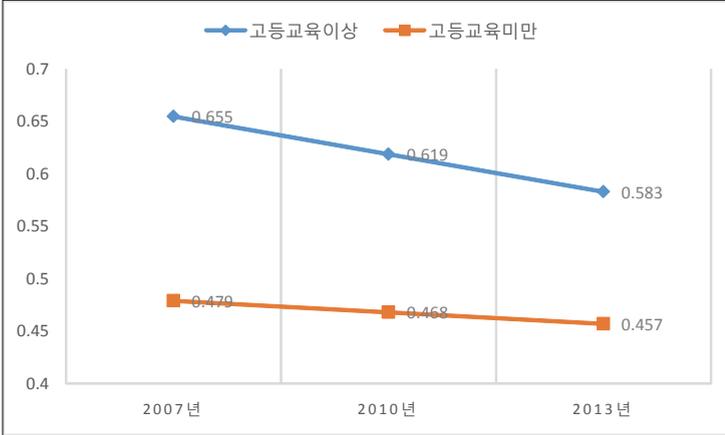
연구문제 2-4인 복지의식 궤적이 교육수준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복지의식 궤적의 교육수준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교육 이상인 사람들과 미만인 사람들을 비교하였다. 출발점과 기울기가 교육수준별로 동질한지를 검증한 결과, 출발점과 기울기에 있어서 최소한 하나는 차이가 있다는 것(CMIN(df)=26.605(2), $p < .001$)을 보여주었다.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출발점(CRD=-4.621, $p < .001$)과 기울기(CRD=3.551, $p < .001$) 모두 연령대별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5-4>에서 나타난 것처럼 고등학교 교육 이상 응답자 사이에서는 출발점에서 평균 0.655 정도의 복지의식을 나타내었고(Intercept=0.655, $p < .001$) 향후 일 년마다 평균 0.035 정도 씩 복지의식 수준이 감소하였다(Slope=-0.035, $p < .001$). 고등학교 교육 미만 응답자 사이에서는 출발점에서 평균 0.479 정도의 복지의식 수준을 나타내었고(Intercept=0.479, $p < .001$) 그 이후로 해 마다 평균 0.011 정도 씩 복지의식 수준이 감소하였다(Slope=-0.016, $p < .001$).

종합하면, 고등학교 교육 이상의 사람들이 미만인 사람들보다 출발점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복지의식을 나타내었으나(CRD=-4.621, $p < .001$) 향후 고등학교 교육 미만인 사람들 보다 해마다 더 빠른 속도로 정부책임에 대한 지지를 중심으로 구성된 복지의식 수준이 낮아졌다(CRD=3.551, $p < .001$).

<표 5-4> 복지의식궤적의 교육수준별 차이

	궤적	Estimate	SE	CR	p-value
고등교육 이상	Intercept	0.655	0.028	23.088	<.001
	Slope	-0.036	0.005	-7.128	<.001
고등교육 미만	Intercept	0.479	0.025	18.962	<.001
	Slope	-0.011	0.005	-2.505	<.05

[그림 5-9] 복지인식궤적의 교육수준별 차이



연구문제 3. 복지인식 궤적의 예측요인은 무엇인가?

조건부모형의 독립변수로는 연령, 성별, 혼인상태, 장애유무, 장애정도 등의 개인특성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고, 시장소득, 집 가격, 거주지, 고용형태 등을 계층변수로 포함하고, 정부보조금, 기초보장 수급여부, 복지서비스 이용여부 등을 복지경험변수로 포함하였다. 복지인식 궤적의 예측요인을 두 가지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각 독립변수와 복지인식 궤적의 관계를 각각 살펴본 다음에, 다음으로 이러한 변수들을 통합적으로 조건부 모형의 외생변수로 포함하여 복지인식 궤적의 예측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 5-5>에 정리되어 있다.

〈표 5-5〉 조건부 모형: 복지의식궤적의 예측요인

	조건부 모형			개별 조건부 모형		
	Estimate (S.E.)	C.R. P		Estimate (S.E.)	C.R. P	
통제변수	복지의식_JCEPT <--- 연령	-0.008 (0.002)	-5.104 ***	-0.008 (0.001)	-7.153 ***	
	복지의식_SLOPE <--- 연령	0.001 (0.000)	2.532 *	0.001 (0.000)	4.906 ***	
	복지의식_JCEPT <--- 성별	0.034 (0.040)	0.846	0.039 (0.039)	0.986	
	복지의식_SLOPE <--- 성별	-0.001 (0.007)	-0.126	-0.003 (0.007)	-0.483	
	복지의식_JCEPT <--- 교육(고등)	0.071 (0.053)	1.344	0.170 (0.039)	4.406 ***	
	복지의식_SLOPE <--- 교육(고등)	-0.010 (0.009)	-1.107	-0.023 (0.007)	-3.357 ***	
	복지의식_JCEPT <--- 혼인상태	0.044 (0.043)	1.009	0.054 (0.041)	1.312	
	복지의식_SLOPE <--- 혼인상태	-0.013 (0.008)	-1.722	-0.019 (0.007)	-2.612 **	
	복지의식_JCEPT <--- 장애유무	0.027 (0.045)	0.591	0.008 (0.042)	0.186	
복지의식_SLOPE <--- 장애유무	-0.001 (0.009)	-0.157	0.009 (0.008)	1.089		
계층변수	복지의식_JCEPT <--- ln시장소득	-0.048 (0.022)	-2.228 *	0.035 (0.016)	2.262 *	
	복지의식_SLOPE <--- ln시장소득	0.005 (0.004)	1.374	-0.009 (0.003)	-3.236 **	
	복지의식_JCEPT <--- ln집가격	-0.011 (0.007)	-1.622	-0.001 (0.007)	-0.108	
	복지의식_SLOPE <--- ln집가격	0.001 (0.001)	0.885	-0.002 (0.001)	-1.516	
	복지의식_JCEPT <--- 광역거주	0.016 (0.039)	0.410	0.064 (0.039)	1.620	
	복지의식_SLOPE <--- 광역거주	-0.007 (0.007)	-0.959	-0.015 (0.007)	-2.204 *	
	복지의식_JCEPT <--- 상용직임금근로자	-0.024 (0.054)	-0.450	0.096 (0.048)	2.007 *	
	복지의식_SLOPE <--- 상용직임금근로자	0.004 (0.010)	0.374	-0.014 (0.008)	-1.666	
복지감법	복지의식_JCEPT <--- ln정부보조금	-0.012 (0.010)	-1.189	-0.016 (0.008)	-2.074 *	
	복지의식_SLOPE <--- ln정부보조금	0.005 (0.002)	2.681 **	0.006 (0.001)	4.727 ***	
	복지의식_JCEPT <--- 기초보장수급 여부	-0.047 (0.081)	-0.575	0.020 (0.072)	0.272	
	복지의식_SLOPE <--- 기초보장수급 여부	0.021 (0.014)	1.481	0.026 (0.013)	2.024 *	
	복지의식_JCEPT <--- 복지서비스이용여부	0.076 (0.054)	1.405	0.034 (0.043)	0.785	
	복지의식_SLOPE <--- 복지서비스이용여부	-0.005 (0.010)	-0.476	0.010 (0.008)	1.374	
조건부 모형 적합도	카이스퀘어			RMSEA		
	$\chi^2(df)=48.168(15)***$.023		
				.997		
				.977		

개별 조건부 모형으로 각 독립변수와 복지의식 궤적의 관계를 보면 통제변수들 가운데서 성별과 장애유무는 복지의식 궤적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 교육, 혼인상태는 복지의식 궤적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출발점의 복지의식 수준이 낮았으나($b=-0.008$, $p<.001$),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연령이 높은 사람들의 복지의식 수준 감소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b=0.001$, $p<.001$). 고등학교 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들의 출발점에서의 복지의식 수준이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높았으나($b=0.170$, $p<.001$), 향후 6년간 고등학교 교육이상을 받은 사람들의 복지의식 감소속도는 상대적으로 빨랐다($b=-0.023$, $p<.001$). 혼인상태에 따라서 출발

점 복지의식 수준은 차이가 없었으나($b=0.054$, $p>.05$),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유배우자 상태의 사람들의 복지의식 수준의 감소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났다($b=-0.019$, $p<.01$).

계층변수들 가운데서 시장소득, 대도시 거주여부, 고용상태가 복지의식 궤적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소득이 높을수록 출발점의 복지의식 수준도 높았으나($b=0.035$, $p<.05$),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복지의식 감소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b=-0.009$, $p<.01$). 서울이나 광역시 등의 대도시 거주여부는 출발점 복지의식 수준과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나($b=0.006$, $p>.05$),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복지의식 수준 감소 속도가 타 지역거주자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b=-0.015$, $p<.05$). 상용직 임금근로자들은 출발점에서 다른 형태의 고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복지의식 수준을 나타내었고($b=0.096$, $p<.05$),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지나도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었다($b=-0.014$, $p>.05$).

복지경험 변수들에서는 정부보조금과 기초보장수급여부가 복지의식 궤적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정부보조금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출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복지의식 수준을 보여주었으나($b=-0.016$, $p<.05$),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들의 복지의식 감소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b=0.006$, $p<.001$). 기초보장수급여부는 출발점에서는 복지의식 수준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지만($b=0.020$, $p>.05$),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급자들의 복지의식 감소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b=0.026$, $p<.05$).

연구문제 3-2인 통합 조건부 모형을 통한 복지의식 궤적예측요인의 분석결과를 보면 통제변수들 가운데는 성별, 교육, 혼인상태, 장애유무에 따라서는 복지의식 궤적이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지만, 연령에 따라서는

복지궤적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출발점의 복지의식 수준이 낮았는데($b=-0.008$, $p<.001$),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향후 복지의식을 감소하는 속도가 연령이 낮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b=0.001$, $p<.05$).

인구사회학적 개인특성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계층변수로 투입된 집 가격, 대도시 거주 여부, 고용형태 등의 변수들은 복지의식 궤적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지만, 시장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복지의식 궤적이 차이가 있었다. 즉 출발점에서 시장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복지의식이 시장소득이 낮은 사람들보다 낮았고($b=-0.048$, $p<.05$), 2007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이러한 차이는 유지되었다($b=0.005$, $p>.05$).

복지경험변수들 중에서 기초보장 수급여부와 복지서비스 이용여부는 복지의식 궤적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정부보조금 수령 액수는 복지의식궤적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출발점에서는 정부보조금 수령이 복지의식궤적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b=-0.012$, $p>.05$), 조사기간 6년 동안 정부보조금을 많이 수령한 사람일수록 복지의식 감소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b=0.005$, $p<.01$).

연구문제 4. 복지의식 궤적의 예측요인들이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복지의식 궤적의 예측요인들이 연령(세대) 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건부 모형에 대한 구조 동질성 검증결과, 60세 이상과 60세 미만 사이의 복지의식 궤적의 예측요인들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c^2(24)=46.892$, $p<.01$). 이러한 구조적 차이의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 각각의 경로에 대한 집단차이 검증결과 총 3개 영역의 4개 경로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연령대별 예측요인의 차이분

석 결과는 다음 <표 5-6>에 정리되어 있다.

첫 번째 차이가 발견된 영역은 교육이 복지궤적의 초기 값(CRD=-2.286, $p<.05$)과 기울기(CRD=2.815, $p<.01$)에 미치는 영향이다. 60세 이상 집단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초기 복지인식수준이 높았으나 ($b=0.207$, $p<.01$), 시간이 지날수록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복지인식 감소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b=-0.041$, $p<.001$). 한편 60세 미만 집단에서는 교육수준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초기 복지인식수준의 차이가 없었고($b=-0.039$, $p>.05$), 시간이 지남에 따른 복지인식 감소속도의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0.013$, $p>.05$). 즉 교육수준은 60세 이상에만 복지인식궤적과 관련이 있고, 60세 미만에서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0세 미만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복지인식 차이가 거의 없다.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초기 복지인식 수준이 높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복지인식 감소속도가 빨라서 상대적으로 보수화되어 가는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해석된다.

계층변수들에서는 시장소득이 복지인식 출발점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만 연령대별 차이가 났다(CRD=-2.202, $p<.05$). 구체적으로 60세 이상에서는 시장소득이 출발점 복지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b=-0.004$, $p>.05$), 시장소득 수준에 따른 복지인식 수준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60세 미만에서는 시장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b=-0.104$, $p<.01$), 시장소득이 복지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장소득수준은 60세 이상에서는 복지인식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60세 미만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경험 변수들에서는 기초보장수급여부가 복지인식 궤적에 미치는

영향에서만 연령대별 차이가 났다. 두 연령대에서 모두 기초보장수급여부가 복지의식 궤적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기초보장수급여부가 복지의식 궤적의 초기 값에 미치는 영향력의 방향성에 있어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났다(CRD=-2.156, $p < .05$). 즉 60세 이상에서는 기초보장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에 더 높은 수준의 복지의식을 나타낸 반면($b=0.098$), 60세 미만에서는 기초보장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에 더 낮은 복지의식 수준을 나타내었다($b=-0.257$).

〈표 5-6〉 복지의식궤적의 예측요인의 연령대 별 차이

		60세 이상		60세 미만		집단차이 유의도
		Estimate (S.E.)	CR. P	Estimate S.E.	CR. P	
통제변수	복지인식_JCEPT <-- 연령	-0.005 (0.004)	-1.123	-0.008 (0.003)	-2.375 *	-0.661
	복지인식_Ω_OPE <-- 연령	0.001 (0.001)	1.473	0.001 (0.001)	0.836	-0.613
	복지인식_JCEPT <-- 성별	0.021 (0.057)	0.368	-0.002 (0.058)	-0.036	-0.284
	복지인식_Ω_OPE <-- 성별	-0.002 (0.010)	-0.194	0.009 (0.010)	0.887	0.761
	복지인식_JCEPT <-- 교육(고등)	0.207 (0.066)	3.126 **	-0.039 (0.085)	-0.46	-2.286 *
	복지인식_Ω_OPE <-- 교육(고등)	-0.041 (0.012)	-3.450 ***	0.013 (0.015)	0.841	2.815 **
	복지인식_JCEPT <-- 혼인상태	0.071 (0.060)	1.180	0.017 (0.070)	0.246	-0.582
	복지인식_Ω_OPE <-- 혼인상태	-0.016 (0.011)	-1.488	-0.004 (0.012)	-0.327	0.737
	복지인식_JCEPT <-- 장애유무	-0.022 (0.056)	-0.388	0.135 (0.072)	1.883	1.724
	복지인식_Ω_OPE <-- 장애유무	0.007 (0.012)	0.625	-0.024 (0.015)	-1.595	-1.642
계통변수	복지인식_JCEPT <-- ln시장소득	-0.004 (0.024)	-0.173	-0.104 (0.038)	-2.72 **	-2.202 *
	복지인식_Ω_OPE <-- ln시장소득	0.000 (0.004)	-0.045	0.012 (0.007)	1.796	1.529
	복지인식_JCEPT <-- ln집가격	-0.017 (0.009)	-2.033 *	0.002 (0.011)	0.152	1.362
	복지인식_Ω_OPE <-- ln집가격	0.002 (0.002)	1.525	-0.001 (0.002)	-0.596	-1.414
	복지인식_JCEPT <-- 광역거주	-0.004 (0.053)	-0.074	0.026 (0.055)	0.475	0.395
	복지인식_Ω_OPE <-- 광역거주	0.000 (0.009)	0.044	-0.011 (0.010)	-1.166	-0.866
	복지인식_JCEPT <-- 상용직임금근로자	-0.136 (0.166)	-0.818	0.021 (0.064)	0.332	0.888
복지인식_Ω_OPE <-- 상용직임금근로자	0.027 (0.030)	0.907	-0.007 (0.011)	-0.605	-1.063	
복지감변	복지인식_JCEPT <-- ln정부보조금	-0.019 (0.015)	-1.273	-0.009 (0.014)	-0.645	0.491
	복지인식_Ω_OPE <-- ln정부보조금	0.004 (0.003)	1.293	0.005 (0.003)	2.147 *	0.502
	복지인식_JCEPT <-- 기초보장수급여부	0.098 (0.095)	1.031	-0.257 (0.135)	-1.911 ^	-2.156 *
	복지인식_Ω_OPE <-- 기초보장수급여부	0.005 (0.017)	0.283	0.052 (0.024)	2.191 *	1.609
	복지인식_JCEPT <-- 복지서비스이용여부	0.205 (0.086)	2.384 *	0.073 (0.071)	1.024	-1.180
	복지인식_Ω_OPE <-- 복지서비스이용여부	-0.023 (0.015)	-1.494	-0.009 (0.013)	-0.720	0.710

60세 이상과 60세 미만의 예측요인 동일성 검증: $\chi^2(df)=46.891(24)$, $p < .01$

연구문제 4-2와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복지의식 궤적의 예측요인들의 조건부 모형에 대한 구조동질성 검증결과, 성별에 따라서 복지의식 궤적의 예측요인들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c2(22) = 14.221$, $p > .05ns$). 그리고 연구문제 4-3인 복지의식 궤적의 예측요인

들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득수준별 복지
 의식 궤적 예측요인들의 조건부 모형에 대한 구조 동질성 검증결과, 평
 균소득 이상과 평균소득 미만인 집단 사이의 복지 의식 궤적의 예측요인
 들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c2(24)=39.035, p<.05$).
 이러한 구조적 차이의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 각각의 경로에 대한 집단
 차이 검증결과 총 2개 경로에서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소득수준별
 예측요인의 차이분석 결과는 아래 <표 5-7>에 정리되어 있다.

<표 5-7> 복지 의식 궤적 예측요인의 소득수준별 차이

		평균소득 이상		평균소득 미만		집단차이 유의도
		Estimate (S.E.)	C.R. P	Estimate (S.E.)	C.R. P	차이 C.R. P
통제변수	복지의식_JCEPT <--- 연령	-0.003 (0.003)	-1.004	-0.009 (0.002)	-4.794 ***	
	복지의식_SLOPE <--- 연령	0.000 (0.001)	-0.222	0.001 (0.000)	2.835 **	
	복지의식_JCEPT <--- 성별	-0.082 (0.075)	-0.426	0.050 (0.047)	1.067	
	복지의식_SLOPE <--- 성별	0.014 (0.013)	1.024	-0.004 (0.008)	-0.504	
	복지의식_JCEPT <--- 교육(고등)	-0.008 (0.118)	-0.066	0.104 (0.056)	1.860	
	복지의식_SLOPE <--- 교육(고등)	0.004 (0.021)	0.171	-0.016 (0.010)	-1.602	
	복지의식_JCEPT <--- 혼인상태	0.053 (0.091)	0.584	0.036 (0.048)	0.738	
	복지의식_SLOPE <--- 혼인상태	-0.011 (0.016)	-0.717	-0.015 (0.009)	-1.716	
	복지의식_JCEPT <--- 장애유무	0.108 (0.098)	1.098	0.019 (0.051)	0.379	
	복지의식_SLOPE <--- 장애유무	-0.084 (0.020)	-1.678	0.004 (0.011)	0.346	
계층변수	복지의식_JCEPT <--- ln시알소득	-0.251 (0.096)	-2.611 **	-0.045 (0.025)	-1.817	2.081 *
	복지의식_SLOPE <--- ln시알소득	0.033 (0.017)	1.930	0.008 (0.004)	1.780	
	복지의식_JCEPT <--- ln집가격	0.002 (0.015)	0.107	-0.013 (0.008)	-1.666	
	복지의식_SLOPE <--- ln집가격	-0.001 (0.003)	-0.348	0.001 (0.001)	0.870	
	복지의식_JCEPT <--- 광역거주	-0.029 (0.072)	-0.397	0.039 (0.045)	0.864	
	복지의식_SLOPE <--- 광역거주	-0.009 (0.013)	-0.730	-0.005 (0.008)	-0.613	
	복지의식_JCEPT <--- 상용직임금근로자	-0.021 (0.079)	-0.271	0.007 (0.086)	0.080	
	복지의식_SLOPE <--- 상용직임금근로자	-0.001 (0.014)	-0.063	0.003 (0.016)	0.196	
복지경험	복지의식_JCEPT <--- ln경부보조금	-0.086 (0.019)	-1.865	-0.005 (0.013)	-0.355	-2.009 *
	복지의식_SLOPE <--- ln경부보조금평균	0.011 (0.003)	3.188 **	0.003 (0.002)	1.167	
	복지의식_JCEPT <--- 기초보장수급여부	0.263 (0.480)	0.547	-0.057 (0.077)	-0.740	
	복지의식_SLOPE <--- 기초보장수급여부	-0.060 (0.084)	-0.719	0.028 (0.014)	1.975 *	
	복지의식_JCEPT <--- 복지서비스이용여부	0.108 (0.088)	1.226	0.135 (0.070)	1.928	
	복지의식_SLOPE <--- 복지서비스이용여부	-0.013 (0.015)	-0.851	-0.012 (0.013)	-0.947	

평균소득 이상과 평균소득 미만의 예측요인 동질성 검증: $\chi^2(df)=39.035(24), p<.05$

통제변수로 포함된 연령, 성별, 교육, 혼인상태, 장애유무 등의 변수가
 복지 의식 궤적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
 견되지 않았다.

계층변수 중에서는 시장소득이 복지 의식 궤적의 출발점에 미치는 영향

이 소득수준별로 차이가 있었다($CRD=2.081, p<.05$). 구체적으로 평균 소득 이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출발점에서의 복지의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b=-0.251, p<.01$), 평균소득 미만인 집단에서는 시장소득 수준에 따라서 복지의식 수준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0.045, p>.05$). 즉 소득수준이 복지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은 평균소득 수준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평균소득 미만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득수준이 복지의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경험 변수들 중에서는 기초보장수급여부가 복지의식 궤적의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RD=-2.009, p<.05$). 즉 평균소득 이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초보장 수급여부가 복지의식 궤적의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지만($b=-0.060, p>.05$), 평균소득 미만인 집단에서는 기초보장 수급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복지의식수준 감소속도가 느리거나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b=.028, p<.05$).

연구문제 4-4와 관련하여 복지의식 궤적의 예측요인들은 교육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2(22)=47.992, p<.001$). 조건부 모형에 대한 교육 수준에 따른 동질성 검증결과는 다음 <표 5-8>에 정리되어 있다.

〈표 5-8〉 복지의식궤적의 예측요인의 교육수준 별 차이

		고등교육 이상		고등교육 미만		집단차이 유의도
		Estimate (S.E)	C.R. P	Estimate (S.E)	C.R. P	
통제변수	복지인식_ICEPT <-- 연령	-0.006 (0.002)	-2.636 **	-0.010 (0.003)	-3.552 ***	2.454 *
	복지인식_SLOPE <-- 연령	0.000 (0.000)	0.102	0.002 (0.000)	3.327 ***	
	복지인식_ICEPT <-- 성별	0.016 (0.060)	0.264	0.019 (0.054)	0.36	
	복지인식_SLOPE <-- 성별	0.007 (0.010)	0.668	-0.003 (0.010)	-0.298	
	복지인식_ICEPT <-- 혼인상태	-0.054 (0.071)	-0.761	0.092 (0.056)	1.654	
	복지인식_SLOPE <-- 혼인상태	0.010 (0.012)	0.775	-0.022 (0.010)	-2.179 *	
	복지인식_ICEPT <-- 장애유무	-0.047 (0.073)	-0.649	0.054 (0.055)	0.978	
	복지인식_SLOPE <-- 장애유무	0.010 (0.015)	0.680	-0.007 (0.012)	-0.575	
계통변수	복지인식_ICEPT <-- ln시장소득	-0.083 (0.037)	-2.259 *	-0.047 (0.025)	-1.929	-1.973 *
	복지인식_SLOPE <-- ln시장소득	0.009 (0.006)	1.331	0.007 (0.004)	1.51	
	복지인식_ICEPT <-- ln집가격	-0.001 (0.011)	-0.105	-0.019 (0.008)	-2.324 *	
	복지인식_SLOPE <-- ln집가격	0.000 (0.002)	-0.187	0.002 (0.002)	1.591	
	복지인식_ICEPT <-- 광역거주	0.057 (0.057)	1.009	-0.052 (0.052)	-1.003	
	복지인식_SLOPE <-- 광역거주	-0.015 (0.010)	-1.503	0.008 (0.009)	0.812	
	복지인식_ICEPT <-- 상용직입금근로자	-0.041 (0.067)	-0.616	0.030 (0.131)	0.229	
	복지인식_SLOPE <-- 상용직입금근로자	0.004 (0.012)	0.312	0.001 (0.024)	0.041	
복지경험	복지인식_ICEPT <-- ln정부보조금	-0.008 (0.015)	-0.523	-0.024 (0.015)	-1.59	2.309 *
	복지인식_SLOPE <-- ln정부보조금평균	0.004 (0.003)	1.353	0.008 (0.003)	2.745 **	
	복지인식_ICEPT <-- 기초보장수급여부	-0.309 (0.151)	-2.053 *	0.094 (0.088)	1.064	
	복지인식_SLOPE <-- 기초보장수급여부	0.067 (0.026)	2.538 *	0.001 (0.016)	0.085	
	복지인식_ICEPT <-- 복지서비스이용여부	0.156 (0.074)	2.103 *	0.026 (0.082)	0.317	
	복지인식_SLOPE <-- 복지서비스이용여부	-0.014 (0.013)	-1.069	-0.011 (0.015)	-0.721	

고등교육 이상과 고등교육 미만의 예측요인 통제성 검증: $\chi^2(df)=47.992(22)$, $p<.001$

연령이 복지의식 궤적의 출발점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수준별 차이가 없었지만, 연령이 복지의식 궤적의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수준별로 차이가 있었다(CRD=2.454, $p<.05$). 즉, 고등교육 이상 집단에서는 연령에 따라서 복지의식수준 기울기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b=0.000$, $p>.05$), 고등교육 미만 집단에서는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복지의식 수준 감소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지만($b=0.002$, $p<.05$).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두 집단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초기의 복지의식 수준이 낮았지만, 고등교육 이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연령에 따른 복지의식 수준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도 유지된 반면, 고등교육 미만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연령이 높은 사람들의 복지의식 감소속도가 오히려 느리게 나타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수준별 복지의식 수준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된다.

혼인상태가 복지의식 궤적의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이 교육수준에 따라

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CRD=-1.973, p<.05$). 즉 고등교육 이상 집단에서는 혼인상태에 따라서 복지의식 기울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b=0.010, p>.05$), 고등교육 미만 집단에서는 혼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복지의식 감소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b=-0.022, p<.05$).

교육수준에 따라서 기초보장수급여부가 복지의식 궤적에 미치는 영향은 출발점($CRD=2.309, p<.05$)과 기울기($CRD=-2.126, p<.05$)에 있어서 모두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 고등교육 이상 집단에서는 기초보장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출발점의 복지의식수준이 낮았으나($b=-0.309, p<.05$), 향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복지의식 감소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b=0.067, p<.05$). 반면 고등교육 미만 집단에서는 기초보장수급이 복지의식 궤적의 출발점($b=0.094, p>.05$)이나 기울기에($b=0.001, p>.05$)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고등교육 미만 집단에서는 기초보장수급여부에 따라서 출발점이나 기울기의 차이가 없었지만,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기초보장수급을 경험한 사람들이 초기에는 낮은 수준의 복지의식 수준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복지의식 감소속도가 느리게 나타나 기초보장 수급여부에 따른 복지의식 수준차이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절 소결: 결과의 요약과 해석

1. 복지의식 궤적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의 복지의식 변화궤적을 추정해 보는 것이었다. 무조건부 모형 분석 결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의식 수준은 평균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데이터와 연구로는 왜 감소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복지의식의 후퇴경향은 2008년 경제위기와 동반한 보수화의 경향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추론된다.

2. 복지의식 궤적의 집단별 차이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복지의식 궤적이 연령, 성별, 소득, 교육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무조건부 모형에 대한 다중집단 분석결과 복지의식 궤적은 연령대별, 소득수준별, 교육수준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에서는 55세 미만의 사람들이 출발점에서 55세 이상인 사람들 보다 복지의식 수준이 높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더 빠른 복지의식 감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연령에 따른 복지의식 수준 차이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에서도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출발점에서 높은 수준의 복지의식을 나타내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빠른 감소속도를 나타내어서 점차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복지의식 차이는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교육수준별 복지의식 궤적 비교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고등학교 교육 이상 사람들의 출발점 복지의식 수준이 이하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른 감소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육수준에 따른 복지의식 차이는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성별을 제외한 연령, 소득, 교육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에 따른 복지의식 궤적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간의 복지의식 변화 양상은 긍정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즉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복지의식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3. 조건부 모형 분석 결과

조건부 모형분석에서 각 변수를 하나씩 투입한 개별 조건부 모형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변수들 중에서 연령, 교육,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복지의식 궤적이 차이가 있었지만 성별이나 장애유무에 따라서는 복지의식 궤적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계층변수들 중에서는 시장소득, 대도시 거주, 상용직임금근로자 여부에 따라서 복지의식 궤적이 차이가 있었지만 주택 가격에 따른 복지의식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복지경험변수들 중에서는 정부보조금 수령액, 기초보장수급여부에 따라서는 복지의식 궤적이 차이가 있었지만 복지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개별 조건부 모형은 복지의식 궤적에 대한 각 변수별 다중집단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므로, 복지의식 궤적의 예측요인들을 모두 독립변수로 투입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통합 조건부 모형을 분석하였다.

통합조건부 모형 결과는 통제변수, 계층변수, 복지경험변수를 함께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여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개별 조건부 모형과는 차이가 있었다. 첫째, 통제변수들 중에서 연령에 따른 복지의식 궤적의 차이가 있었고, 성별, 교육, 혼인상태, 장애유무에 따른 복지의식 궤적의 차이는 없었다.

둘째, 통제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계층변수들 중에서는 시장소득만 복지의식 궤적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고, 주택 가격, 대도시 거주여부, 상용직 임금근로자 여부는 복지의식 궤적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장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출발점 복지의식 수준이 소득이 낮은 사람들보다 낮았고, 이러한 차이는 조사기간 6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계층변수들 중에서 복지의식 궤적에 가장 유의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시장소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낮은 것이 시간이 흘러도 계속되는 것으로 볼 때, 이러한 현상은 높은 소득에 동반하는 높은 세금 부담에서 오는 고소득자들의 심리적인 반응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정부에서 세율상승을 통한 복지재원 마련을 고민할 때 가장 큰 관건으로 고소득자를 어떻게 설득하는지가 성패의 관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계층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복지경험 변수들 중에서는 정부보조금 수령액만 복지의식 궤적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고, 기초보장수급여부나 복지서비스 이용여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의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기초보장수급이나 복지서비스 등의 요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원 대상의 폭이 넓고 현금 지원적 성격이 강한 보조금 수령이 복지의식에 더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4. 조건부 모형에 대한 다중집단 분석 결과

복지인식 궤적의 예측요인들이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조건부 모형에 대한 다중집단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대(60세 이상 vs. 미만)에 따라서 교육이 복지인식 궤적에 미치는 영향, 시장소득이 복지인식 궤적에 미치는 영향, 기초보장수급여부가 복지인식 궤적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대에 따라서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이 차이가 있으므로, 복지인식에 대한 이해나 복지인식 증진을 위한 실용적 방안을 구상할 때 연령대에 따른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고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성별에 따라서는 복지인식 궤적의 예측요인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인식 관련 실용적 전략 구상에서 성별에 따른 맞춤형 접근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으므로 성별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교육수준(고등 이상 vs. 미만)에 따라서는 연령이 복지인식 궤적에 미치는 영향, 혼인상태가 복지인식 궤적에 미치는 영향, 기초보장수급여부가 복지인식 궤적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인식에 대한 이해나 복지인식 증진을 위한 실용적 방안을 구상할 때 교육수준에 따른 맞춤형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 소득수준(평균소득 이상 vs. 미만)에 따라서는 시장소득이 복지인식 궤적에 미치는 영향과 기초보장수급여부가 복지인식 궤적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복지인식에 대한 이해나 복지인식 증진을 위한 실용적 방안을 구상할 때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6장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의식 수준과 영향요인

제1절 노인·장애인 의식분석의 의의와 연구문제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제4절 노인의 복지의식 실태와 영향 요인 분석

제5절 장애인의 복지의식 실태와 영향 요인 분석

제6절 소결: 결과의 요약과 해석



6

노인과 장애인의 << 복지의식 수준과 영향요인

제1절 노인·장애인 의식분석의 의의와 연구문제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정도는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현황과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 연구들 중 적지 않은 연구들이 취약인구집단의 의식이 특이성을 가질 개연성을 보여주었다.

재거(Jæger, 2006)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 정도를 설명하는 주요 관점으로 자기이익(self-interest) 관점과 정치적 이데올로기(political ideology) 관점을 제안하였다. 자기이익 관점에서는 복지급여의 수혜자이거나 복지국가에 의존하게 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복지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아, 노령연금 수급자, 실업자 등의 복지정책 지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자기이익 관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상대적으로 복지급여의 혜택을 받고 있는 비율이 높은 노인과 장애인은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김사현(2012)은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자가 비이용자보다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지출에 더 지지적이었다고 밝혔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급여로 인한 혜택을 오래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이익 관점에 따른 차이를 만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복지수급의 경험 여부뿐만 아니라 복지수급의 기간의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관점으로 제시한 정치적 이데올로기 관점에서는 개인들의 정

치적 가치관과 신념이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를 좌우하게 되며, 따라서 정치적 성향과 이념적 선호도에 따라 정부의 복지공급에 대한 책임을 지지하는 정도가 결정이 된다. 정치적 이데올로기 관점에 따르면, 노인의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그간의 선거 결과에서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보수 정당을 지지해 왔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경우, 정치적 성향에 대한 조사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2009년의 조사에서 약간 진보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비장애인과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한국장애인인권포럼, 2009). 그런데 노인들을 비롯하여 장애인의 경우에도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들의 명확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보다는 오히려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편견일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복지인식에 대한 연구에서는 측정 지표에 대한 논의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김영미·안상훈(2010)은 복지인식을 가치 차원에 해당하는 복지 책임주체에 대한 인식과 태도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 비용 부담 수용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고, 장애인 단체들의 복지인식에 대해서 복지비용부담의 경우 대체로 높은 수용성을 보이지만 국가복지책임에 대한 인식은 장애인 단체 간 편차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는 일반적인 복지인식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최유석(2011)은 사회복지의 정부책임에 대한 지지도가 정책 영역 별로 차이가 있어서, 보건의료제공, 노인생활보장에 대한 정부 책임은 88%가 지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일자리 제공, 실업자 생활보장, 무주택자 주거보장에 대한 정부책임은 2/3 정도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블레키소네와 콰다노(Blekesaune & Quadagno, 2003)는 중년 이상은 고연령층 대상의 복지에 대해서 지지적이었으며, 아동 대상의 복지에 대해서는 덜 지지적이었다고 밝혔다. 김

영미·안상훈(2010)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하는 집단으로 장애인단체는 빈곤층(40.0%), 장애인(40.0%), 아동(20.0%)을 지적하고, 노인단체는 노인(66.7%)과 장애인(33.3%)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인 복지정책이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지에 따라서도 복지의식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복지의식에 대한 일반적 관점에 근거를 두고 특정 집단, 특히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의식 수준과 영향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정 집단의 복지의식에 대한 관심은 복지국가의 전체적 발전과 관련되어 있다. 김영미·안상훈(2010: 380)이 지적하듯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조직은 앞으로 복지정책 결정과정에서 타조직과 연대 혹은 협력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대립과 갈등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는 전체 복지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인, 장애인 등 특정 집단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복지제도가 보편적이 되기보다는 선별적일 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 연구에서는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성별,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등을 활용하고 있다. 연령은 특히 중요한 변수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제도주의 관점에서는 노인이 복지수급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정부의 복지정책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한국의 노인은 상대적으로 정부의 복지정책을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김사현, 2012). 노인들의 복지의식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백정미 외(2008)는 한국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공공복지 책임을 지지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스발포스(Svallfors, 2008), 보놀리(Bonoli, 2009) 등은 노인복지정책, 특히 연금에 대한 세대 간 지지의 차이를 분석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더 지지할 것이라는 세대 간 균열가설을 지지하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김

수완(2011)은 국가 간 비교를 통해서 연령이 높을수록 연금지출을 지지하는 정도는 높아지지만 국가책임성을 지지하는 정도는 높아지지 않는다고 하여 종속변수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연령의 영향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장애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또는 장애유무를 독립변수로 사용한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국인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은 이중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김영순·여유진, 2011), 이러한 현상은 복지정책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노인들과 장애인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한편으로 그동안의 수혜 경험으로 인해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복지정책을 위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연구문제에 대해 답을 찾고자 한다.

- 첫째, 노인 집단은 비노인 집단과 복지의식의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가?
- 둘째, 장애인 집단은 비장애인 집단과 복지의식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가?
- 셋째, 노인의 복지의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비노인과 차이가 있는가?
- 넷째, 장애인의 복지의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비장애인과 차이가 있는가?

제2절 연구방법

복지의식의 실태에서는 한국복지패널 8차 자료를 활용하여 2012년을 기준으로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의식 현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대상자를 노인으로, 65세 미만 대상자를 비노인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장애인에는 15개 장애범주의 등록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등록장애인도 포함시켰다.

한국복지패널 8차 조사에서 부가조사에 응답한 4,185명 중 노인은 1,470명으로 35.13%이었다. 그러나 가중치를 고려하면 노인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15.54%이었다. 한편 장애인은 430명으로 10.27%이었다. 그러나 가중치를 고려하면 장애인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6.7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에 답하고자 분석방법으로 기술통계와 함께 t-검증과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로는 복지인식으로는 4장에서 사용한 정부책임에 대한 인식(12개 항목)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복지태도를 나타내는 종속변수로 복지증세에 대한 지지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항목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2~2 점으로 코딩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독립변수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연수, 장애여부(노인만)⁵⁾ 및 지역을, 경제 관련 요인으로는 취업여부, 가구소득의 제공근, 총자산의 제공근⁶⁾을, 복지급여 요인으로는 기초보장 수급여부, 기타 정부보조금 수급여부, 가구복지서비스 수급여부, 노인가구복지서비스 수급여부, 아동가구복지서비스 수급여부, 장애인가구복지서비스 수급여부를, 그리고 주관적 인식 요인으로 정치적 성향⁷⁾을 포함하였다.

5) 장애인 대상의 회귀모델에서 장애등급을 독립변수로 사용한 결과, 장애등급은 복지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교하기 위해 장애등급을 모델에서 제외하였다.

6) 가구소득과 총자산은 복지인식과 곡선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형을 확보하고자 두 변수를 변환할 필요가 있었는데, 제공근 변환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그 변환도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제3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 응답 노인의 일반적 특성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먼저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을 비노인과 비교해 보면, 노인 중 남성은 43.68%, 여성은 56.32%로, 비노인에 비해 남성의 비율은 낮고 여성의 비율은 높았다. 노인의 평균 연령은 72.9세이었으며, 비노인의 평균 연령은 41.8세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혼인상태를 비교해 보면, 노인 중 유배우자의 비율은 65.30%로 비노인의 68.03%에 비해 낮았던 반면에 사별의 비율은 노인 중에는 31.25%로 비노인의 2.19%에 비해 훨씬 더 높았다. 반면에 미혼의 비율은 노인 중에는 0.18%였으나 비노인 중에는 24.46%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보면, 노인의 55.75%가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비노인 중에서는 6.66%만이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았다. 반면에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비율을 보면, 노인 중에서는 13.08%에 불과하였으나 비노인 중에서는 절반이 넘는 53.26%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평균 교육연수를 보면, 노인은 7.2년으로 비노인의 13.02년에 비해 6년 가까이 짧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지면서 장애가 나타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에 따라 노인 중 장애인의 비율은 15.7%로 비노인의 5.08%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 별 분포를 보면, 노인 중 서울에 거주하는

7) 정치적 성향은 5점 척도로, 1 매우 진보적; 2 다소 진보적; 3 중도; 4 다소 보수적; 5 매우 보수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율은 16.22%로 비노인의 21.14%에 비해 5% 포인트 가까이 낮았다. 또한 광역시에 거주하는 비율도 노인은 19.75%로 비노인의 25.03%에 비해 5% 포인트 이상 낮았다. 반면에 시와 군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은 노인이 비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군 지역 거주 비율은 노인이 14.41%로 비노인의 5.94%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표 6-1〉 노인과 비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변수	범주	노인	비노인	합계
성별 (n=4,185)	남	43.68%	46.92%	46.41%
	여	56.32%	53.08%	53.59%
연령	평균(세)	72.9	41.8	46.7
혼인상태 (n=4,185)	유배우	65.30%	68.03%	67.61%
	사별	31.25%	2.19%	6.7%
	이혼	2.73%	4.83%	4.5%
	별거	0.54%	0.5%	0.51%
	미혼	0.18%	24.46%	20.69%
교육수준 (n=4,185)	무학	19.72%	0.45%	3.44%
	초등학교	36.03%	6.21%	10.85%
	중학교	16.11%	8.14%	9.38%
	고등학교	15.06%	31.93%	29.31%
	전문대학	1.13%	15.49%	13.26%
	대학교	9.89%	33.83%	30.11%
	대학원(석사)	1.91%	3.44%	3.20%
	대학원(박사)	0.15%	0.50%	0.45%
	평균 교육연수(년)	7.20	13.02	12.11
장애 (n=4,185)	비장애	84.3%	94.92%	93.27%
	장애	15.7%	5.08%	6.73%
5개 권역별 지역구분 (n=4,185)	서울	16.22%	21.14%	20.38%
	광역시	19.75%	25.03%	24.21%
	시	48.72%	47.05%	47.31%
	군	14.41%	5.94%	7.26%
	도농복합군	0.90%	0.83%	0.84%

나. 경제 관련 특성

다음으로 노인의 경제 관련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주된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노인의 69.42%가 비경제활동인구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비노인 중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24.9%로 노인의 1/3 정도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비노인 중에는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35.33%로 가장 많았으나 노인 중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1.48% 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노인 중에는 자영업자가 13.65%로 세 번째로 많았으며, 비노인의 9.14%에 비해 5% 포인트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의 비중도 1.51%로 낮았지만 비노인의 비중에 비해서는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취업자 중 직종을 살펴보면, 노인 중에는 농림어업 숙련종사자가 51.2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비노인의 3.6%에 비해 15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순노무종사자도 29.82%로 비노인의 15.16%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반면에 노인 중에서 관리자의 비율은 1.24%로 비노인의 4.11%에 비해 1/3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율도 3.59%로 비노인의 17.84%에 비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무종사자의 경우 노인 중에는 0.69%에 불과하여 비노인의 21.01%에 비해 20% 포인트 이상 낮게 나타났다.

노조 가입 비율을 보면, 비노인이 10.07%인데 비하여 노인은 0%로 나타나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표 6-2〉 노인과 비노인의 경제활동 특성 비교

변수	범주	노인	비노인	합계
주된 경제활동 상태 (n=4,185)	상용직 임금근로자	1.48%	35.33%	30.07%
	임시직 임금근로자	5.78%	17.13%	15.37%
	일용직 임금근로자	3.39%	6.26%	5.82%
	자활근로·공공근로·노인일자리	1.51%	0.44%	0.60%
	고용주	0.00%	2.31%	1.95%
	자영업자	13.65%	9.14%	9.84%
	무급가족종사자	4.49%	2.91%	3.15%
	실업자	0.27%	1.58%	1.38%
	비경제활동인구	69.42%	24.9%	31.82%
직종 (n=2,504)	관리자	1.24%	4.11%	3.9%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59%	17.84%	16.84%
	사무종사자	0.69%	21.01%	19.58%
	서비스종사자	4.13%	9.66%	9.27%
	판매종사자	5.62%	11.06%	10.68%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51.28%	3.60%	6.96%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0.45%	7.15%	6.6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3.19%	10.42%	9.91%
	단순노무종사자	29.82%	15.16%	16.19%
노조 가입여부 (n=1,651)	노동조합이 없음	88.55%	75.5%	75.97%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안됨	11.02%	8.28%	8.38%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 안함	0.42%	6.15%	5.94%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	0.00%	10.07%	9.70%

다음으로 노인의 경제상태를 비노인과 비교하였다. 전체 노인의 39.2%가 가구의 연간소득이 1천만원 미만인 반면에 비노인은 4.2%가 1천만원 미만이었다. 또한 전체 노인의 66.7%가 연간 2천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비노인 중에는 10.4%만이 2천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 중에서 1억원 이상의 가구소득이 있는 노인은 2.7%에 불과하였으나, 비노인 중에는 10.8%로

노인에 비해 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가구소득(시장소득)도 노인은 연 평균 2,187.2만원으로, 비노인의 5,922.8만원의 36.9%에 불과하였다.

다음으로 총자산을 살펴보면, 자산 1억원 미만의 노인이 39.8%로 비노인의 26.7%에 비해 13% 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총자산 10억원 이상의 노인도 전체 노인의 6.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노인의 5.1%에 비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평균 총자산을 보면, 노인은 2억9,633.1만으로 비노인의 3억2,753.2만보다 적었지만 비노인의 90.5%에 해당하여 가구소득의 격차에 비해서는 총자산의 격차⁸⁾가 훨씬 더 작았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비노인에 비해 현재 소득은 적지만 일부 빈곤층을 제외하면 자산은 더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8)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t 검증을 한 결과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72$, $p=0.085$).

〈표 6-3〉 노인과 비노인의 경제상태 비교

변수	범주	노인	비노인	합계
연간 가구 소득	1천만원 미만	39.6%	4.2%	9.7%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27.1%	6.6%	9.8%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11.5%	10.2%	10.4%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7.3%	13.6%	12.6%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3.9%	12.4%	11.1%
	5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4.3%	14.0%	12.5%
	6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1.5%	9.7%	8.5%
	7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	1.2%	7.8%	6.8%
	8천만원 이상~9천만원 미만	0.2%	6.0%	5.1%
	9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0.8%	4.8%	4.1%
	1억원 이상	2.7%	10.8%	9.5%
	평균 가구소득(만원)	2,187.2	5,922.8	5,342.3
총자산	1억원 미만	39.8%	26.7%	28.7%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18.6%	21.2%	20.8%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10.0%	13.5%	13.0%
	3억원 이상~4억원 미만	7.6%	10.8%	10.3%
	4억원 이상~5억원 미만	5.6%	7.8%	7.5%
	5억원 이상~6억원 미만	3.7%	4.5%	4.4%
	6억원 이상~7억원 미만	2.9%	4.4%	4.1%
	7억원 이상~8억원 미만	2.4%	2.9%	2.8%
	8억원 이상~9억원 미만	1.7%	1.2%	1.2%
	9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1%	2.1%	1.9%
	10억원 이상	6.8%	5.1%	5.4%
	평균 총자산(만원)	29,633.1	32,753.2	32,268.4

다. 복지수급 특성

다음으로 노인과 비노인의 2012년 복지수급 경험을 비교하였다. 먼저 기초보장 수급여부를 비교해 보면, 노인 중에 기초보장 수급 경험이 있는 비율은 8.35%로, 비노인의 3.53%에 비해 2.5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타 정부보조금 수급 경험이 있는 비율은 노인 중에는 79.18%로 10명 중 8명이 기타 정부보조금을 받았으며, 비노인 중 42.33%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복지서비스를 수급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노인 중에는 85.79%로, 비노인의 36.99%에 비해 2.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노인복지서비스를 수급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노인 중에는 86.48%, 비노인 중에는 13.2%로 노인이 6.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수급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노인 중에는 12.67%로 비노인의 9.8%보다 3% 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아동복지서비스를 수급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노인 중에 7.71%로, 비노인의 34.37%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어떤 복지급여이든 수급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노인 중에는 92.03%, 비노인 중에는 60.76%로 노인이 30% 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 노인과 비노인의 복지수급 특성 비교

변수	범주	노인	비노인	합계
기초보장 수급여부	있다	8.35%	3.53%	4.28%
	없다	91.65%	96.47%	95.72%
기타 정부보조금 수급여부	있다	79.18%	42.33%	48.06%
	없다	20.82%	57.67%	51.94%
가구복지서비스 수급여부	있다	85.79%	36.99%	44.57%
	없다	14.21%	63.01%	55.43%
노인복지서비스 수급여부	있다	86.48%	13.20%	24.58%
	없다	13.52%	86.80%	75.42%
아동복지서비스 수급여부	있다	7.71%	34.37%	30.23%
	없다	92.29%	65.63%	69.77%
장애인복지서비스 수급여부	있다	12.67%	9.80%	10.24%
	없다	87.33%	90.20%	89.76%
복지수혜경험	있다	92.03%	60.76%	65.62%
	없다	7.97%	32.94%	34.38%

라. 노인의 주관적 인식

마지막으로 노인들의 주관적 인식을 비교하였다. 노인들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보면, 49.79%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 만하다’고 응답하여 비노인의 54.95%에 비해서는 5% 포인트 정도 낮았으며, 반면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응답은 50.21%로 비노인의 45.05%에 비해 약간 높았다. 따라서 노인들이 비노인보다 타인에 대한 신뢰가 약간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치적 성향을 보면, 노인의 평균 정치적 성향 점수는 3.47점으로 비노인의 3.06점보다 높아⁹⁾, 더 보수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9) 정치적 성향은 ‘1 매우 진보적’, ‘5 매우 보수적’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과 비노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t 검증 결과는, $t=10.08$, $p=0.000$ 으로 두 집단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 노인과 비노인의 주관적 인식 비교

변수	범주	노인	비노인	합계
사람들에 대한 신뢰 (n=3,047)	믿을 만하다	49.79%	54.95%	54.22%
	조심해야 한다	50.21%	45.05%	45.78%
정치적 성향(n=3,944)	평균	3.47	3.06	3.12

2. 응답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먼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장애인 응답자 중 남자는 57.13%, 여자는 42.87%로, 비장애인의 45.64%, 54.36%에 비해 남자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연령을 비교해 보면, 장애인은 55세-60세의 비율이 14.2%로 가장 높았으며, 50세-55세 13.4%, 65세-70세 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장애인은 40세-45세의 비율이 12.8%로 가장 높았으며, 45세-50세 11.5%, 30세-35세 11.2%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은 청년층의 비율이 낮고 노년층의 비율이 높는데, 20세-40세 미만의 비율은 9.9%에 불과한 반면에 65세 이상의 비율은 36.2%에 달하였다. 반면에 비장애인은 20세-40세 미만의 비율은 37.6%, 65세 이상의 비율은 14.1%로 청년층의 비율이 2.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평균 연령을 비교해 보면, 장애인의 평균 연령은 58.6세로, 비장애인의 45.8세에 비해 12.8세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를 비교해 보면, 장애인 중 유배우자의 비율은 70.35%로, 비장애인의 67.41%에 비해 유배우자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 또한 사별

의 비율도 장애인 중에는 11.87%로 비장애인의 6.33%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이혼과 사별의 비율도 장애인 중에는 각각 8.16%, 1.35%로, 비장애인의 4.24%, 0.45%에 비해 각각 1.9배,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장애인 중 미혼의 비율은 8.28%로, 비장애인의 21.58%에 비해 1/3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비교해 보면, 장애인은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정도 비율이 35.8%로 비장애인의 12.8%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문대학 이상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장애인 중에서는 15.8%에 불과한 반면에 비장애인 중에서는 49.3%로, 장애인의 비율이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 교육연수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애인은 9.03년으로 비장애인의 12.34년보다 3년 이상 교육연수가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별 분포를 보면, 장애인의 15.35%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서 비장애인의 20.74%에 비해 5% 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역시 거주 장애인의 비율도 22.59%로, 비장애인의 24.33%에 비해 약간 낮았다. 반면에 시 거주 장애인의 비율은 49.64%로, 비장애인의 47.14%보다 약간 더 높았으며, 특히 군 거주 장애인의 비율은 11.64%로, 비장애인의 6.94%에 비해 5% 포인트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표 6-6〉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변수	범주	장애인	비장애인	합계
성별 (n=4,185)	남	57.13%	45.64%	46.41%
	여	42.87%	54.36%	53.59%
연령 (n=4,185)	20-25세 미만	1.4%	6.9%	6.6%
	25-30세 미만	2.8%	9.4%	9.0%
	30-35세 미만	2.3%	11.2%	10.6%
	35-40세 미만	3.3%	10.1%	9.6%
	40-45세 미만	5.1%	12.8%	12.3%
	45-50세 미만	9.8%	11.5%	11.4%
	50-55세 미만	13.4%	10.8%	11.0%
	55-60세 미만	14.2%	8.1%	8.5%
	60-65세 미만	11.6%	5.1%	5.6%
	65-70세 미만	12.0%	4.7%	5.2%
	70-75세 미만	11.6%	4.3%	4.8%
	75-80세 미만	7.1%	3.2%	3.4%
	80세 이상	5.5%	1.9%	2.1%
	평균(세)	58.6	45.8	46.7
혼인상태 (n=4,185)	유배우	70.35%	67.41%	67.61%
	사별	11.87%	6.33%	6.70%
	이혼	8.16%	4.24%	4.50%
	별거	1.35%	0.45%	0.51%
	미혼	8.28%	21.58%	20.69%
교육수준 (n=4,185)	무학	10.2%	3.0%	3.4%
	초등학교	25.6%	9.8%	10.9%
	중학교	16.5%	8.9%	9.4%
	고등학교	31.9%	29.1%	29.3%
	전문대학	6.1%	13.8%	13.3%
	대학교	8.9%	31.6%	30.1%
	대학원(석사)	0.8%	3.4%	3.2%
	대학원(박사)	0.0%	0.5%	0.5%
		평균 교육연수(년)	9.03	12.34
5개 권역별 지역구분 (n=4,185)	서울	15.35%	20.74%	20.38%
	광역시	22.59%	24.33%	24.21%
	시	49.64%	47.14%	47.31%
	군	11.64%	6.94%	7.26%
	도농복합군	0.77%	0.85%	0.84%

나. 경제 관련 특성

다음으로 장애인의 경제 관련 특성을 비장애인과 비교해 보았다. 먼저 주된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장애인의 48.37%가 비경제활동인구로 가장 많았으며, 비장애인 30.62%보다 18% 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반면에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장애인 중에는 9.33%에 불과하여 비장애인 31.56%의 1/3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임시직 임금근로자의 비율도 장애인 중에는 11.61%로 비장애인의 15.64%보다 4% 포인트 이상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장애인 중 자영업자의 비율은 12.68%로 비장애인의 9.64%보다 3% 포인트 이상 높았으며, 고용주의 비율도 2.33%로 비장애인의 1.9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중에는 일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7.19%로 비장애인의 5.72%보다 높았으며,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도 0.76%로 비장애인의 0.59%보다 높았다.

취업자 중 직종을 살펴보면, 장애인 중에는 단순노무종사자가 28.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비장애인의 15.51%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또한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도 장애인 중에는 17.93%로, 비장애인의 6.38%에 비해 거의 세 배 정도 많았다. 반면에 비장애인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사무종사자(19.96%)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7.59%)의 비중은 장애인 중에서는 각각 12.33%, 2.76%에 불과하여 사무종사자는 40% 정도나 적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80% 이상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급여 및 근무조건이 좋지 않은 직종에 더 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노조가입 상태를 보면, 장애인 중에는 2.13%만이 노조에 가입하고 있어서 비장애인의 10.0%의 1/5에 불과한 상태이다.

〈표 6-7〉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제 관련 특성 비교

변수	범주	장애인	비장애인	합계
주된 경제활동 상태 (n=4,185)	상용직 임금근로자	9.33%	31.56%	30.07%
	임시직 임금근로자	11.61%	15.64%	15.37%
	일용직 임금근로자	7.19%	5.72%	5.82%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0.76%	0.59%	0.60%
	고용주	2.33%	1.93%	1.95%
	자영업자	12.68%	9.64%	9.84%
	무급가족종사자	6.43%	2.92%	3.15%
	실업자	1.30%	1.39%	1.38%
	비경제활동인구	48.37%	30.62%	31.82%
직종 (n=2,504)	관리자	1.85%	4.01%	3.9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76%	17.59%	16.84%
	사무종사자	12.33%	19.96%	19.58%
	서비스종사자	11.46%	9.15%	9.27%
	판매종사자	9.05%	10.76%	10.68%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7.93%	6.38%	6.96%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2.25%	6.92%	6.6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13.44%	9.72%	9.91%
	단순노무종사자	28.92%	15.51%	16.19%
노조 가입여부 (n=1,651)	노동조합이 없음	76.02%	75.97%	75.97%
	노동조합 있으나 가입대상 안됨	16.32%	8.07%	8.38%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 안함	5.53%	5.96%	5.94%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	2.13%	10.00%	9.70%

다음으로 장애인의 연간 가구소득을 보면, 1천만원 미만인 비율이 29.5%, 2천만원 미만이 52.3%로 절반 이상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비장애인 중에서는 연간 가구소득이 1천만원 미만인 비율은 8.3%, 2천만원 미만인 비율은 17.1%로 훨씬 적었다. 반면에 1억원 이상의 가구소득인 장애인은 6.4%에 불과하였으나, 비장애인은 9.7%로 비장애인이 1.5배 정도 더 많았다. 결과적으로 평균 연간소득을 비교해 보면, 장애인의 평

균 가구소득은 3,355.8만원으로 비장애인의 5,485.7만원의 6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8〉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제상태 비교

변수	범주	장애인	비장애인	합계
연간 가구소득	1천만원 미만	29.5%	8.3%	9.7%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22.8%	8.8%	9.8%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8.8%	10.5%	10.4%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7.9%	13.0%	12.6%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6.9%	11.4%	11.1%
	5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5.1%	13.0%	12.5%
	6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5.9%	8.6%	8.5%
	7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	2.5%	7.1%	6.8%
	8천만원 이상~9천만원 미만	3.0%	5.2%	5.1%
	9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4%	4.3%	4.1%
	1억원 이상	6.4%	9.7%	9.5%
		평균 가구소득(만원)	3,355.8	5,485.7
총자산	1억원 미만	48.4%	27.3%	28.7%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16.7%	21.1%	20.8%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10.7%	13.1%	13.0%
	3억원 이상~4억원 미만	6.5%	10.5%	10.3%
	4억원 이상~5억원 미만	8.3%	7.4%	7.5%
	5억원 이상~6억원 미만	0.8%	4.7%	4.4%
	6억원 이상~7억원 미만	0.8%	4.4%	4.1%
	7억원 이상~8억원 미만	2.0%	2.9%	2.8%
	8억원 이상~9억원 미만	0.9%	1.3%	1.2%
	9억원 이상~10억원 미만	0.4%	2.0%	1.9%
	10억원 이상	4.6%	5.4%	5.4%
		평균 총자산(만원)	23,498.2	32,901.3

다음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총자산을 비교하였다. 자산이 1억원 미만인 장애인은 48.4%로, 거의 절반 가까운 장애인은 총자산이 1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에 비장애인은 27.3%로 장애인보다 20% 포인트 이

상 낮았다. 특히 총자산 5억원 이상인 장애인은 9.4%에 불과하여 비장애인의 20.6%에 비하여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평균 가구 총자산도 장애인은 2억3,498.2만원으로 비장애인의 3억2,901.3만원의 7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복지수급 특성

다음으로 2012년을 기준으로 장애인의 복지수급 경험을 살펴보았다. 먼저 기초보장 수급 경험을 보면, 장애인 중에는 17.15%가 수급 경험이 있어서 비장애인의 3.35%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정부보조금 수급여부에서도 장애인 중에는 88.53%가 수급 경험이 있어서 비장애인의 45.14%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복지서비스 수급 경험과 노인복지서비스에서는 각각 장애인의 66.16%, 44.69%가 수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장애인의 43.02%, 23.13%에 비해서 각각 20% 포인트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는 장애인의 57.64%가 수급 경험이 있어서 비장애인의 6.82%에 비해서 8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동복지서비스에서는 장애인의 18.25%만이 수급 경험이 있어서 비장애인의 31.09%에 비해 수급 경험 비율이 10% 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96.13%는 2012년 복지 수혜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장애인의 63.41%에 비해 1/3 정도 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9〉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복지수급 경험 비교

변수	범주	장애인	비장애인	합계
기초보장 수급 경험	있다	17.15%	3.35%	4.28%
	없다	82.85%	96.65%	95.72%
기타 정부보조금 수급여부	있다	88.53%	45.14%	48.06%
	없다	11.47%	54.86%	51.94%
가구복지서비스	있다	66.16%	43.02%	44.57%
	없다	33.84%	56.98%	55.43%
노인복지서비스	있다	44.69%	23.13%	24.58%
	없다	55.31%	76.87%	75.42%
아동복지서비스	있다	18.25%	31.09%	30.23%
	없다	81.75%	68.91%	69.77%
장애인복지서비스	있다	57.64%	6.82%	10.24%
	없다	42.36%	93.18%	89.76%
복지수혜경험	있다	96.13%	63.41%	65.62%
	없다	3.87%	36.59%	34.38%

라. 장애인의 주관적 인식

한편 장애인의 주관적 인식을 비장애인과 비교해 보면,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에서 장애인은 50.22%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 만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비장애인은 54.47%가 ‘믿을 만하다’고 응답하여 비장애인보다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가 약간 낮았다. 또한 장애인의 정치적 성향을 보면, 평균 3.30점으로 비장애인의 3.11점보다 높게 나타나¹⁰⁾ 장애인이 더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 t 검증 결과, $t=2.77$, $p=0.006$.

〈표 6-10〉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주관적 인식 비교

변수	범주	장애인	비장애인	합계
사람들에 대한 신뢰	믿을 만하다	50.22%	54.47%	54.22%
	조심해야 한다	49.48%	45.53%	45.78%
정치적 성향	평균	3.30	3.11	3.12

제4절 노인의 복지인식 실태와 영향 요인 분석

1. 복지인식의 실태

본 연구에서는 복지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으로 12개 문항을 선택하였다. 각 문항은 -2~2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부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지지하는 친복지적, 점수가 낮을수록 정부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반대하는 반복지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인식의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의 제3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먼저 실업자 지원에 대한 인식을 보면, 노인과 비노인 모두 1점이 각각 56.9%, 55.7%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또한 비율의 차이도 0.8% 포인트에 불과하였다. 이어서 0점도 노인이 18.1%, 비노인이 19.1%로 1% 포인트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 t 검증에서도 노인과 비노인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8개 분야의 정부지출에 대한 복지인식을 보았다. 건강보험 및 보건분야의 정부지출에 대한 복지인식을 보면, 노인과 비노인 모두 1점(좀 더 지출)이 각각 51.7%와 45.3%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나, 노인이 비노인보다 6.4% 포인트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좀 덜 지출”을 의미하는 -1점의 비율을 보면 노인은 5.3%인데 비해, 비노인은 8.1%로 노인이 2.8% 포인트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 검증에서도 노인은

비노인보다 건강보험 및 보건의 지출에 대해 더 지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이 비노인보다 건강보험 및 보건의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정부지출에 대한 복지인식을 보면, 노인과 비노인 모두 1점(“좀 더 지출”)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노인은 53.5%로, 비노인의 39.3%에 비해 14.2% 포인트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점(“좀 덜 지출”), -2점(“훨씬 덜 지출”)의 비율은 모두 노인이 비노인에 비해 각각 6.6% 포인트, 3.1%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 검증에서도 노인은 비노인보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지출에 대해 훨씬 더 지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이 현재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의 정부지출에 대한 복지인식을 보면, 건강보험 및 보건의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그 차이가 작은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비율이 높은 1점은 노인이 46.6%, 비노인이 47.1%로 0.5% 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 다만 0점의 비율에서 노인이 비노인보다 7.5% 포인트 높은 반면에 2점에서 노인이 비노인보다 4.1%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t 검증에서도 노인과 비노인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주거지원의 정부지출에 대한 복지인식에서는 가장 많은 비율의 노인(50.5%)과 비노인(41.9%)이 0점(현재 수준으로 지출)으로 응답하였으나 노인이 비노인보다 8.6%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점, 2점의 비율의 비율을 보면 노인이 비노인보다 각각 4.8% 포인트, 2.8%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t 검증에서도 노인은 비노인보다 주거지원 지출에 대해 덜 지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통적 복지급여의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빈곤층, 노인, 장애인 및 아동가구 생활지원 영역의 정부지출에 대한 복지인식을 살펴보

았다. 먼저 빈곤층 생활지원에 대해서 노인 중에는 1점의 비율이 58.9%로 가장 높았으며, 비노인의 54.1%에 비해 4.8% 포인트 높았다. 또한 0점의 비율은 반대로 노인이 24.7%로, 비노인의 30.4%보다 5.7%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과 비노인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t검증의 결과,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1〉 노인과 비노인의 문항 별 복지인식 비교

문항	범주	노인	비노인	합계/통계치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실업자지원)	-2	4.2%	3.4%	3.5%
	-1	14.0%	12.6%	12.8%
	0	18.1%	19.1%	18.9%
	1	56.9%	55.7%	55.9%
	2	6.9%	9.3%	8.9%
	평균	0.48	0.55	t=-1.58, p=0.114
정부지출이 늘기를 바라는지 혹은 줄어들기를 바라는지 (건강보험 및 보건)	-2	0.4%	0.9%	0.8%
	-1	5.3%	8.1%	7.7%
	0	36.7%	38.2%	38.0%
	1	51.7%	45.3%	46.3%
	2	6.0%	7.4%	7.2%
	평균	0.58	0.50	t=2.30, p=0.022
정부지출이 늘기를 바라는지 혹은 줄어들기를 바라는지 (국민연금: 노령연금)	-2	0.5%	3.6%	3.1%
	-1	4.3%	10.9%	9.8%
	0	34.6%	39.5%	38.7%
	1	53.5%	39.3%	41.5%
	2	7.2%	6.8%	6.9%
	평균	0.63	0.35	t=8.12, p=0.000
정부지출이 늘기를 바라는지 혹은 줄어들기를 바라는지 (교육)	-2	0.6%	2.0%	1.8%
	-1	8.9%	10.2%	10.0%
	0	39.1%	31.6%	32.8%
	1	46.6%	47.1%	47.0%
	2	4.9%	9.0%	8.4%
	평균	0.46	0.51	t=-1.30, p=0.192
정부지출이 늘기를 바라는지 혹은 줄어들기를 바라는지 (주거지원)	-2	0.7%	2.4%	2.1%
	-1	12.2%	11.5%	11.6%
	0	50.5%	41.9%	43.2%
	1	33.2%	38.0%	37.3%
	2	3.4%	6.2%	5.8%
	평균	0.27	0.34	t=-2.20, p=0.028

문항	범주	노인	비노인	합계/통계치
정부지출이 늘기를 바라는지 혹은 줄어들기를 바라는지 (빈곤층 생활지원)	-2	0.9%	0.9%	0.9%
	-1	7.7%	5.4%	5.8%
	0	24.7%	30.4%	29.5%
	1	58.9%	54.1%	54.8%
	2	7.8%	9.2%	9.0%
	평균	0.65	0.65	t=-0.06, p=0.955
정부지출이 늘기를 바라는지 혹은 줄어들기를 바라는지 (노인 생활지원)	-2	0.6%	0.9%	0.9%
	-1	2.4%	4.8%	4.4%
	0	30.9%	35.0%	34.4%
	1	57.5%	51.8%	52.7%
	2	8.6%	7.5%	7.7%
	평균	0.71	0.60	t=3.54, p=0.000
정부지출이 늘기를 바라는지 혹은 줄어들기를 바라는지 (장애인 생활지원)	-2	0.5%	0.2%	0.2%
	-1	0.6%	2.5%	2.2%
	0	21.7%	25.6%	25.0%
	1	67.3%	59.3%	60.5%
	2	9.8%	12.4%	12.0%
	평균	0.85	0.81	t=1.50, p=0.134
정부지출이 늘기를 바라는지 혹은 줄어들기를 바라는지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	-2	0.7%	2.3%	2.0%
	-1	4.5%	7.5%	7.0%
	0	38.5%	31.8%	32.8%
	1	51.0%	47.4%	48.0%
	2	5.4%	11.0%	10.2%
	평균	0.56	0.57	t=-0.42, p=0.677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생계를 보장해야한다 (근로빈곤층지원)	-2	11.5%	7.4%	8.0%
	-1	32.4%	29.2%	29.7%
	0	19.3%	18.4%	18.6%
	1	33.9%	40.2%	39.2%
	2	2.9%	4.9%	4.6%
	평균	-0.16	0.06	t=-4.51, p=0.000
대학교육까지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대학무상제공)	-2	22.4%	17.5%	18.2%
	-1	54.0%	44.2%	45.7%
	0	13.6%	16.0%	15.7%
	1	8.0%	17.0%	15.6%
	2	2.0%	5.3%	4.8%
	평균	-0.87	-0.52	t=-8.20, p=0.000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보육무상제공)	-2	4.1%	3.2%	3.4%
	-1	18.5%	16.5%	16.8%
	0	21.5%	15.9%	16.8%
	1	49.1%	48.4%	48.5%
	2	6.9%	16.0%	14.6%
	평균	0.36	0.57	t=-4.59, p=0.000

반면에 노인 생활지원에 대해서 노인 중에는 1점의 비율이 57.5%로 비노인의 51.8%에 비해 5.7% 포인트 높았던 반면에 0점과 -1점의 비율은 각각 4.1% 포인트, 2.4%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t 검증 결과에서도 노인은 비노인에 비해서 정부의 노인 생활지원 지출 증가에 더 지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생활지원에 대해서는 노인 중에서 1점의 비율이 67.3%로 가장 높았으며, 비노인에 비해서도 8% 포인트 높게 나타났지만 반면에 2점의 비율은 비노인과 2.6% 포인트, 0점의 비율은 3.9% 포인트 등 두 집단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 결과, t 검증에서 두 집단의 평균 차이는 0.04점으로 상당히 작았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에 대해서도 노인 중에서 1점의 비율이 51.0%로 가장 높았으며, 비노인과 차이는 3.6% 포인트에 불과하였다. 반면 2점의 비율은 노인이 5.4%로 비노인보다 5.6% 포인트 낮았으나 0점의 비율은 노인이 38.5%로 6.7%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 검증을 실시하여 두 집단의 평균 복지의식을 비교한 결과, 노인과 비노인의 차이는 0.01에 불과하여 거의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근로빈곤층 지원 정부지출에 대해서는 노인 중에서는 1점(33.9%)과 -1점(32.4%)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근로빈곤층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노인의 의식을 비노인의 의식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노인이 훨씬 더 부정적인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노인은 비노인에 비해 1점, 2점 등 친 복지적 응답에서는 각각 6.3% 포인트, 2.0% 포인트 낮은 반면에, -1점, -2점 등 반 복지적 응답에서는 각각 3.2% 포인트, 4.1%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 검증의 결과에서도 근로빈곤층 지원에 대한 평균 복지의식은 노인은 -0.16점으로 비노인의 0.06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과 비노인의 복지의식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대학교육 무상제공이었다. 대학교육 무상교육 정부지출에 대해서는 노인과 비노인 모두 -1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노인은 54.0%로 비노인의 44.2%에 비해서도 9.8% 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1점, 2점의 비율은 노인이 각각 8.0%, 2.0%로 비노인에 비해 각각 9.0% 포인트, 3.3% 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t 검증의 결과에서도 대학교육 무상지원에 대한 노인의 평균 복지의식은 -0.87점으로 비노인의 -0.52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육 무상제공 정부지출에 대해서는 노인과 비노인 모두 1점의 비율이 49.1%, 48.4%로 가장 높았으며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점의 비율은 노인이 6.9%로 비노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에 0점의 비율은 노인이 21.5%로 비노인에 비해 5.6% 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t 검증 결과에서도 보육 무상제공에 대한 평균 복지의식은 0.36점으로 비노인의 0.57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노인과 비노인의 복지의식수준을 비교해 보면, 건강보험 및 보건, 국민연금(노령연금) 등에 대해서는 노인이 비노인보다 훨씬 더 친복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이 건강보험 및 보건, 국민연금의 혜택을 이미 많이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 인식되는 빈곤층, 노인, 장애인, 아이가 있는 가족 등에 대한 생활지원에 대해서는 노인과 비노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노인 생활지원이 유일하다. 이는 자기이해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근로빈곤층 최소생계보장, 대학교육 무상제공, 유치원·보육시설 무상제공 등 노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문항에서는 반대로 노인이 비노인보다 반복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의 복지의식 중에서 가장 친복지적 문항은 장애인 생활

지원(0.85)이었으며, 이어서 노인 생활지원(0.71), 빈곤층 생활지원(0.65), 국민연금(노령연금)(0.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부정적인 문항은 대학교육 무상제공(-0.87), 근로빈곤층 최소생계보장(-0.16), 주거지원(0.27), 유치원·보육시설 무상제공(0.36) 등이었다. 반면에 비노인 응답자 중에서는 긍정적인 문항은 장애인 생활지원(0.81), 빈곤층 생활지원(0.65), 노인 생활지원(0.60) 등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유사한 순서를 보이고 있다. 한편 비노인 응답자 중 부정적인 문항은 대학교육 무상제공(-0.52), 근로빈곤층 최소생계보장(0.06), 주거지원(0.34), 국민연금(0.35) 등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에 대한 복지의식이 노인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문항 별로 노인과 비노인의 평균 차이를 비교해 보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대학교육 무상제공으로 노인이 0.35점 낮았으며, 국민연금은 오히려 노인이 0.28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빈곤층 최소생계보장과 유치원·보육시설 무상제공도 각각 0.22점, 0.21점 노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과 비노인은 전반적으로 복지인식 수준에 차이도 있으나 문항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12개 문항 전체의 평균 복지인식 수준을 보면, 노인은 0.38점으로 비노인의 0.42점¹¹⁾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이 비노인에 비해 덜 친복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11) t 검증 결과, $t = -2.00$, $p = 0.04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6-12〉 노인과 비노인의 평균 복지의식수준 차이

문항	노인	비노인	차이
실업자지원	0.48	0.55	-0.07
건강보험 및 보건	0.58	0.50	0.08
국민연금(노령연금)	0.63	0.35	0.28
교육	0.46	0.51	-0.05
주거지원	0.27	0.34	-0.07
빈곤층 생활지원	0.65	0.65	0.00
노인 생활지원	0.71	0.60	0.11
장애인 생활지원	0.85	0.81	0.04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	0.56	0.57	-0.01
근로빈곤층 최소생계보장	-0.16	0.06	-0.22
대학교육 무상 제공	-0.87	-0.52	-0.35
유치원·보육시설 무상제공	0.36	0.57	-0.21
평균 복지의식	0.38	0.42	0.04

한편 복지증세에 대한 태도를 보면, 노인은 0.51로 비노인의 0.33에 비해 높아 복지증세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3〉 노인과 비노인의 복지증세 태도 비교

	평균	표준오차	통계값
노인	0.51	0.026	t=4.25
비노인	0.33	0.034	p=0.000

2. 복지의식의 영향 요인 분석

노인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 관련 요인, 복지급여 요인 및 주관적 인식 요인으로 나누어 회귀분석모형을 구성하고 8차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회귀모델의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4.31$, $p=0.0000$), 회귀모델의 설명력 R^2 은 0.0536(Adj $R^2=$

0.0411)로 나타났다. 비교를 위하여 노인을 제외한 비노인을 대상으로 한 회귀모델의 결과를 살펴보면,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12.09$, $p=0.0000$), 회귀모델의 설명력 R^2 은 0.0791(Adj $R^2=0.0725$)로 나타났다.

개별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모델에서는 독립변수들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은 가구소득의 제곱근 ($p=0.022$), 총자산의 제곱근($p=0.001$), 기초보장 수급여부($p=0.034$), 가구복지서비스 수급여부($p=0.025$), 그리고 정치적 성향($p=0.001$)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노인을 대상으로 한 회귀모형에서는 노인에서 유의했던 독립변수들 외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p=0.001$), 연령($p=0.000$), 시($p=0.013$), 기타 정부보조금 수급여부($p=0.043$) 등이 비노인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구소득을 보면,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노인의 복지의식은 친복지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총자산은 증가할수록 노인의 복지의식은 반복지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초보장 수급 노인 및 가구복지서비스 수급 노인은 비수급 노인에 비해 친복지적인 것으로 나타나 복지서비스 수급 경험이 복지의식에 긍정적이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성향이 노인의 복지의식에 상당히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반복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과 차이가 있는 비노인 대상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복지의식이 반복지적이었으며, 연령이 많아질수록 반복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서울시 거주자에 비해 시 지역 거주자는 친복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노인과 비노인 모두 복지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방향은 반대로 나타났다. 즉 노인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친복지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노인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반복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인데, 가구소득이 가구 내 노인유무와 상호작용이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기타 정부보조금 수급여부는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친복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4〉 노인과 비노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회귀분석

	노인		비노인	
	계수	t	계수	t
여성	0.001	0.02	-0.061	-3.24**
연령	0.004	1.83	-0.006	-5.29***
혼인상태	-0.003	-0.11	0.020	0.79
교육연수	0.000	-0.15	-0.004	-1.23
장애여부	0.026	0.73	-0.014	-0.31
광역시	0.039	0.97	0.022	0.82
시	0.003	0.09	0.058	2.48*
군	0.027	0.59	0.026	0.60
도농복합군	0.078	0.62	0.096	0.90
취업여부	-0.037	-1.33	-0.031	-1.45
가구소득제곱근	0.002	2.29*	-0.002	-3.71***
총자산제곱근	-0.001	-3.42**	0.000	-2.70**
기초보장수급	0.103	2.13*	0.009	0.17
기타정부보조금	-0.023	-0.68	0.050	2.02*
가구복지서비스	0.239	2.24*	0.057	2.09*
노인가구복지서비스	-0.127	-1.17	-0.007	-0.21
아동가구복지서비스	0.013	0.27	0.033	1.49
장애인가구복지서비스	0.053	1.33	0.049	1.42
정치적 성향	-0.041	-3.23**	-0.062	-6.43***
상수	0.141	0.73	1.039	11.99***

주: 1) 노인 모델: F = 4.27, p = 0.0000; R2 = 0.0560; Adj-R2 = 0.0429

2) 비노인 모델: F = 13.05, p = 0.0000; R2 = 0.0891; Adj-R2 = 0.0823

3) * p<0.05; ** p<0.01; *** p<0.001

다음으로 복지태도를 보여주는 변수로 여겨지는 노인의 복지증세에 대한 지지도¹²⁾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복지증세에 대한 모델의 설명력은 0.0676(Adj-R2 = 0.0547)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노인의 복지증세에 대한 회귀 모델의 설명력은 0.0486(Adj-R2 = 0.0414)으로, 노인 대상의 회귀 모델의 설명력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노인 대상 모델에서는 여성(p=0.000), 가구소득제곱근(p=0.000), 총자산제곱근(p=0.008), 가구복지서비스(p=0.001) 및 정치적 성향(p=0.034)이 복지증세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노인을 대상으로 한 회귀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다르게 나타났다. 노인의 복지증세 지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연령(p=0.000)은 비노인의 복지증세 지지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노인의 복지증세 지지에는 영향을 미쳤던 가구소득제곱근은 비노인의 복지증세 지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구학적 요인 중에서 노인 중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복지증세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노인들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복지증세를 찬성하였으며, 총자산은 많을수록 복지증세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복지수급 경험 중에서는 가구복지서비스를 이용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복지증세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가구복지서비스 수급여부는 노인의 복지증세 지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가구복지서비스 수급 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이 서비스 수급의 긍정적 경험을 상쇄시킨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성향은 보수적일수록

12) 복지증세에 대한 지지도는 7점 척도(-2, -1.33, -0.67, 0, 0.67, 1.33, 2)로, 값이 커질수록 증세를 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증세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과 차이가 있는 비노인 대상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비노인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복지증세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5〉 노인과 비노인의 복지증세 지지에 대한 회귀분석

	노인		비노인	
	계수	t	계수	t
여성	-0.269	-4.48***	-0.126	-2.95**
연령	-0.003	-0.69	0.018	7.23***
혼인상태	-0.104	-1.67	-0.085	-1.51
교육연수	0.008	1.39	0.008	0.99
장애여부	-0.044	-0.58	0.064	0.61
광역시	0.105	1.23	0.042	0.68
시	-0.120	-1.64	0.054	1.01
군	0.076	0.79	-0.103	-1.06
도농복합군	-0.280	-1.07	0.043	0.18
취업여부	-0.017	-0.29	-0.086	-1.76
가구소득제곱근	0.005	3.51***	0.001	0.98
총자산제곱근	-0.001	-2.65**	-0.001	-2.23*
기초보장수급	0.087	0.86	0.054	0.44
기타정부보조금	-0.053	-0.74	0.046	0.80
가구복지서비스	0.760	3.39**	0.173	2.76**
노인가구복지서비스	-0.382	-1.68	-0.010	-0.13
아동가구복지서비스	-0.085	-0.82	-0.076	-1.49
장애인가구복지서비스	-0.048	-0.58	-0.082	-1.03
정치적 성향	-0.057	-2.12*	-0.115	-5.17***
상수	0.798	1.96	0.005	0.03

주: 1) 노인 모형: $F = 5.23$, $p = 0.0000$; $R^2 = 0.0676$; $Adj-R^2 = 0.0547$

2) 비노인 모형: $F = 6.81$, $p = 0.0000$; $R^2 = 0.0486$; $Adj-R^2 = 0.0414$

3) * $p < 0.05$; ** $p < 0.01$; *** $p < 0.001$

제5절 장애인의 복지의식 실태와 영향 요인 분석

1. 복지의식의 실태

장애인의 복지의식은 실업자지원, 건강 지출, 연금 지출, 교육 지출, 주거지원에 대한 지출, 빈곤층 생활지원에 대한 지출, 노인 생활지원에 대한 지출, 장애인 생활지원에 대한 지출,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에 대한 지출,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 대한 지원, 대학교육까지 무상 제공,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무상에 대한 제공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대한 태도로 살펴보았다. 각 문항은 -2~2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복지적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반복지적인 의식을 나타낸다.

복지의식 문항 별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교하였다. 먼저 실업자 지원에 대한 의식을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1점이 각각 63.2%, 55.4%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나,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7.8% 포인트 높았다. 반면에 0점의 비율은 장애인이 11.6%, 비장애인이 19.5%로 장애인이 7.9% 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2점, -1점, 2점의 비율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t 검증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실업자 지원 정부지출에 대한 복지의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8개 분야의 정부지출에 대한 복지의식을 보았다. 건강보험 및 보건분야의 정부지출에 대한 복지의식을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1점(좀 더 지출)이 각각 51.2%와 46.0%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나,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6.2% 포인트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0점의 비율을 보면 장애인은 35.1%인데 비해, 비장애인은 38.2%로 장애인이 3.1% 포인트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점수에서는 두 집단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t 검증 결과를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보험

및 보건의 정부지출에 대한 지지 수준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정부지출에 대한 복지의식을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1점(“좀 더 지출”)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장애인은 50.9%로, 비장애인의 40.8%에 비해 10.1% 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점(“좀 덜 지출”), -2점(“훨씬 덜 지출”)의 비율은 모두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각각 6.7% 포인트, 3.1%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 검증에서도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지출에 대해 훨씬 더 지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들 중에 현재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의 정부지출에 대한 복지의식을 보면, 가장 비율이 높은 1점은 장애인이 50.5%, 비장애인이 46.8%로 3.7% 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 또한 0점의 비율에서도 장애인이 36.3%, 비장애인이 32.5%로 3.8% 포인트 차이에 불과하였다. 다만 2점의 비율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 검증에서도 장애인의 교육의 정부지출에 대한 복지의식 수준은 0.47로 비장애인의 0.50과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거지원의 정부지출에 대한 복지의식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의 장애인(43.4%)은 1점으로 응답한 반면, 비장애인(43.3%)은 0점으로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1점의 비율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6.6%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0점의 비율을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1.5% 포인트에 불과하였다. t 검증 결과에서는 장애인의 주거지원 지출에 대한 복지의식 수준은 0.43으로 비장애인의 0.32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7$).

다음으로 전통적 복지급여의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빈곤층, 노인, 장애인 및 아동가구 생활지원 영역의 정부지출에 대한 복지의식을 살펴보

았다. 먼저 빈곤층 생활지원에 대해서 장애인 중에는 1점의 비율이 62.9%로 가장 높았으며, 비장애인의 54.2%에 비해 8.7% 포인트 높았다. 또한 0점의 비율은 반대로 장애인이 21.1%로, 비노인의 30.2%보다 9.1%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t 검증을 결과, 빈곤층 생활지원에 대한 복지의식 수준은 장애인은 0.78, 비장애인은 0.64로, 장애인의 복지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 생활지원에 대해서도 장애인 중에는 1점의 비율이 57.1%로 비장애인의 52.4%에 비해 4.7% 포인트 높았던 반면에 0점의 비율은 4.7%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t 검증 결과에서도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정부의 노인 생활지원 지출 증가에 더 지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생활지원에 대해서는 장애인 중에서 1점의 비율이 65.8%로 가장 높았으며, 비장애인에 비해서도 5.6% 포인트 높게 나타났으며, 2점의 비율도 비장애인에 비해 5.1%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0점의 비율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10.2% 포인트나 낮게 나타났다. 그 결과, t 검증에서 두 집단의 평균 차이는 0.16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에 대해서는 장애인 중에서 1점의 비율이 54.8%로 가장 높았으며, 비장애인과 차이는 7.3% 포인트였다. 반면 2점의 비율은 장애인이 2.5%로 비장애인보다 8.2% 포인트 낮았다.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에 대해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0점과 1점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비장애인은 2점의 비율도 10.7%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t 검증을 실시하여 두 집단의 평균 복지의식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0.03에 불과하여 거의 차이가 없었다.

〈표 6-16〉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항 별 복지인식 비교

문항	범주	장애인	비장애인	합계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실업자지원)	-2	3.9%	3.5%	3.5%
	-1	13.3%	12.7%	12.8%
	0	11.6%	19.5%	18.9%
	1	63.2%	55.4%	55.9%
	2	8.0%	9.0%	8.9%
	평균	0.58	0.54	t=0.66, p=0.512
정부지출이 늘기를 바라는지 혹은 줄어들기를 바라는지 (건강보험 및 보건)	-2	0.7%	0.8%	0.8%
	-1	7.1%	7.7%	7.7%
	0	35.1%	38.2%	38.0%
	1	51.2%	46.0%	46.3%
	2	5.9%	7.3%	7.2%
	평균	0.55	0.51	t=0.64, p=0.519
정부지출이 늘기를 바라는지 혹은 줄어들기를 바라는지 (국민연금: 노령연금)	-2	0.9%	3.3%	3.1%
	-1	3.6%	10.3%	9.8%
	0	37.3%	38.8%	38.7%
	1	50.9%	40.8%	41.5%
	2	7.3%	6.9%	6.9%
	평균	0.60	0.38	t=4.14, p=0.000
정부지출이 늘기를 바라는지 혹은 줄어들기를 바라는지 (교육)	-2	1.3%	1.8%	1.8%
	-1	8.2%	10.2%	10.0%
	0	36.3%	32.5%	32.8%
	1	50.5%	46.8%	47.0%
	2	3.6%	8.7%	8.4%
	평균	0.47	0.50	t=-0.61, p=0.543
정부지출이 늘기를 바라는지 혹은 줄어들기를 바라는지 (주거지원)	-2	1.9%	2.1%	2.1%
	-1	7.4%	11.9%	11.6%
	0	41.8%	43.3%	43.2%
	1	43.4%	36.8%	37.3%
	2	5.5%	5.8%	5.8%
	평균	0.43	0.32	t=1.90, p=0.057
정부지출이 늘기를 바라는지 혹은 줄어들기를 바라는지 (반근층 생활지원)	-2	1.1%	0.9%	0.9%
	-1	3.9%	5.9%	5.8%
	0	21.1%	30.2%	29.5%
	1	62.9%	54.2%	54.8%
	2	10.8%	8.9%	9.0%
	평균	0.78	0.64	t=2.72, p=0.007

174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문항	범주	장애인	비장애인	합계
정부지출이 늘기를 바라는지 혹은 줄어들기를 바라는지 (노인 생활지원)	-2	0.2%	0.9%	0.9%
	-1	3.3%	4.5%	4.4%
	0	30.0%	34.7%	34.4%
	1	57.1%	52.4%	52.7%
	2	9.5%	7.5%	7.7%
	평균	0.72	0.61	t=2.31, p=0.021
정부지출이 늘기를 바라는지 혹은 줄어들기를 바라는지 (장애인 생활지원)	-2	0.4%	0.2%	0.2%
	-1	1.5%	2.3%	2.2%
	0	15.5%	25.7%	25.0%
	1	65.8%	60.2%	60.5%
	2	16.8%	11.7%	12.0%
	평균	0.97	0.81	t=3.51, p=0.000
정부지출이 늘기를 바라는지 혹은 줄어들기를 바라는지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	-2	0.8%	2.1%	2.0%
	-1	4.3%	7.2%	7.0%
	0	37.6%	32.5%	32.8%
	1	54.8%	47.5%	48.0%
	2	2.5%	10.7%	10.2%
	평균	0.54	0.57	t=-0.75, p=0.452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근로빈곤층지원)	-2	9.4%	7.9%	8.0%
	-1	31.0%	29.6%	29.7%
	0	17.8%	18.6%	18.6%
	1	38.3%	39.3%	39.2%
	2	3.5%	4.6%	4.6%
	평균	-0.04	0.03	t=-0.95, p=0.343
대학교육까지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대학무상제공)	-2	19.2%	18.2%	18.2%
	-1	51.4%	45.3%	45.7%
	0	14.3%	15.8%	15.7%
	1	10.5%	16.0%	15.6%
	2	4.6%	4.8%	4.8%
	평균	-0.70	-0.56	t=-1.78, p=0.076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보육무상제공)	-2	3.8%	3.3%	3.4%
	-1	14.8%	16.9%	16.8%
	0	20.1%	16.6%	16.8%
	1	52.0%	48.2%	48.5%
	2	9.3%	15.0%	14.6%
	평균	0.48	0.55	t=-0.91, p=0.361

다음으로 근로빈곤층 지원 정부지출에 대해서는 장애인 중에서는 1점(38.3%)과 -1점(31.0%)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근로빈곤층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 의식을 비장애인의 의식과 비교해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1점, 2점 등 친 복지적 응답에서는 각각 1.0% 포인트, 1.1% 포인트 낮았고, -1점, -2점 등 반 복지적 응답에서는 각각 1.5% 포인트, 1.4%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는 크지 않았다. t 검증의 결과에서도 근로빈곤층 지원에 대한 평균 복지인식은 장애인은 -0.04점으로 비장애인과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 무상제공 정부지출에 대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1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장애인은 51.4%로 비장애인의 45.3%에 비해서도 6.1%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1점의 비율은 장애인이 10.5%로 비장애인에 비해 5.5% 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t 검증의 결과에서는 대학교육 무상지원에 대한 평균 복지인식은 장애인이 -0.70점으로 비장애인의 -0.56점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76$).

마지막으로 보육 무상제공 정부지출에 대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1점의 비율이 52.0%, 48.2%로 가장 높았으며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점의 비율은 장애인이 9.3%로 비장애인보다 5.7% 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t 검증 결과에서는 보육 무상제공에 대한 평균 복지인식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복지인식수준을 비교해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복지인식수준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차이를 보이는 국민연금(노령연금), 빈곤층 생활지원, 노인 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지원의 문항에서는 모두 장애인의 복지인식수준이 비장애인의 복지인식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항들은 모두 장애인이 비장

애인에 비해 복지수급 경험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들이다. 흥미로운 점은 다수 문항에서 장애인의 복지의식수준이 높은 반면에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교육,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 대학교육 무상 제공, 유치원·보육시설 무상제공 등의 보편주의적 복지급여에 대한 의식수준이 비장애인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장애인 중에서 가장 친복지적 문항은 장애인 생활지원(0.97점), 빈곤층 생활지원(0.78점), 노인 생활지원(0.72점), 실업자 지원(0.58점), 건강보험 및 보건(0.55점),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0.5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반복지적 문항에는 대학교육 무상제공(-0.7점), 근로빈곤층 최소 생계보장(-0.04) 등이었다. 비장애인 중에서 가장 친복지적 문항으로는 장애인 생활지원(0.81점), 빈곤층 생활지원(0.64점), 노인 생활지원(0.61점),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0.57점), 유치원·보육시설 무상제공(0.55점), 실업자 지원(0.54점), 건강보험 및 보건(0.5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 중에서 가장 반복지적 문항은 대학교육 무상제공(-0.56점)이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두 집단 간 복지의식 수준 차이가 큰 문항은 국민연금(0.22점)이었으며, 이어서 장애인 생활지원(0.16점), 빈곤층 생활지원과 대학교육 무상제공(각각 0.14점), 주거지원과 노인 생활지원(각각 0.11점)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12개 문항의 평균 복지의식 수준을 보면, 장애인은 0.45점으로 비장애인의 0.41점¹³⁾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장애인의 평균 복지의식의 95% 신뢰구간(0.39, 0.50)을 보면, 상당히 넓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집단 내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t 검정 결과, $t=1.33$, $p=0.183$ 으로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6-17〉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균 복지인식수준 차이

문항	장애인	비장애인	차이
실업자지원	0.58	0.54	0.04
건강보험 및 보건	0.55	0.51	0.04
국민연금(노령연금)	0.60	0.38	0.22
교육	0.47	0.50	-0.03
주거지원	0.43	0.32	0.11
빈곤층 생활지원	0.78	0.64	0.14
노인 생활지원	0.72	0.61	0.11
장애인 생활지원	0.97	0.81	0.16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	0.54	0.57	-0.03
근로빈곤층 최소생계보장	-0.04	0.03	-0.07
대학교육 무상 제공	-0.70	-0.56	-0.14
유치원·보육시설 무상제공	0.48	0.55	-0.07
평균 복지인식	0.45	0.41	0.04

한편 복지증세에 대한 태도를 보면, 장애인은 0.53으로 비장애인의 0.35에 비해 높아 장애인이 복지증세에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8〉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복지증세 태도 비교

	평균	표준오차	통계값
장애인	0.53	0.072	t=2.46
비장애인	0.35	0.024	p=0.014

2. 복지인식의 영향 요인 분석

장애인의 경우에도 노인과 유사하게 장애인의 복지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 관련 요인, 복지급여 요인 및 주관적 인식 요인으로 나누어 회귀분석모형을 구성하고, 한국복지패널 8차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회귀모델의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46$, $p=0.0000$). 또한 이 회귀모델의 설명력 R^2 은 0.1387 (Adj $R^2=0.0987$)로 나타났다. 비교를 위하여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회귀모델의 결과를 살펴보면,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7.49$, $p=0.0000$), 회귀모델의 설명력 R^2 은 0.0821 (Adj $R^2=0.0774$)로 나타났다.

개별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모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은 여성($p=0.06314$), 교육연수($p=0.082$), 5개 권역별 지역구분 변수 중에서 광역시($p=0.087$)와 군($p=0.063$), 총자산의 제곱근($p=0.010$), 노인가구복지서비스 수급여부($p=0.005$), 아동가구복지서비스 수급여부($p=0.004$), 장애인가구복지서비스 수급여부($p=0.004$) 등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회귀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다르게 나타났다. 장애인 회귀모형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변수들 중에서 비장애인 회귀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로는 연령($p=0.000$), 시 지역($p=0.007$), 취업여부($p=0.013$), 가구소득의 제곱근($p=0.003$), 가구복지서비스($p=0.001$) 및 정치적 성향($p=0.000$)이었다. 반면에 장애인 회귀모형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비장애인 회귀모형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변수들도 있었는데, 교육연수, 광역시, 군 지역, 노인가구복지서비스 수급여부, 아동가구복지서비스 수급여부, 장애인가구복지서비스 수급여부 등이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서 장애인은 남성보다 여성의 복지인식이 친복지적이었다. 이는 외국 문헌의 결과와는 일치하지만 전체 대상자 및 노인의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다음으로 장애인은 교육연수가 많을수록 친복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별로 비교해 보면, 광역시와 군

14) 회귀모형에서 장애인은 사례수가 406명으로 많지 않아 유의수준을 0.1로 설정하였다.

지역 거주 장애인은 서울시 거주 장애인에 비해 복지의식이 반복지적이었다.

경제적으로는 총자산이 많은 장애인일수록 복지의식은 반복지적인 것으로 나타나 자산이 많을수록 정부의 복지에 대한 책임에 반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장애인의 복지수급 경험은 전반적으로 복지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노인가구복지서비스를 받은 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보다 복지의식이 친복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가구복지서비스를 받은 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보다 복지의식이 친복지적이었으며, 장애인가구복지서비스를 받은 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보다 복지의식이 친복지적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복지수급 경험이 복지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에 전체 대상자와 노인의 복지의식에는 상당히 강한 영향을 미쳤던 정치적 성향은 장애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장애인은 전체 대상자 및 노인과 달리 정치적 성향보다는 복지수급 경험이 복지의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비장애인 회귀모델에서 장애인 회귀모델과 차이가 있는 독립변수들의 복지의식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비장애인은 연령은 많아질수록 복지의식이 반복지적이었다. 반면에 시 지역 거주 장애인은 서울시 거주 장애인보다 친복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여부는 비장애인의 복지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반복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반복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은 비장애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구복지서비스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친복지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치적 성향은 보수적일수록 반복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9〉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회귀분석

	장애인		비장애인	
	계수	t	계수	t
여성	0.077	1.86 †	-0.065	-4.01***
연령	-0.003	-1.38	-0.005	-5.89***
혼인상태	0.040	0.81	-0.011	-0.55
교육연수	0.010	1.74 †	-0.005	-1.93
광역시	-0.113	-1.71 †	0.031	1.34
시	-0.064	-1.07	0.055	2.70**
군	-0.149	-1.87 †	0.041	1.19
도농복합군	-0.033	-0.12	0.099	1.12
취업여부	0.010	0.22	-0.044	-2.47*
가구소득제곱근	-0.001	-1.31	-0.001	-2.98**
총자산제곱근	-0.001	-2.58*	0.000	-3.60***
기초보장수급	-0.044	-0.66	0.042	0.92
기타정부보조금	0.052	0.78	0.040	1.90
가구복지서비스	-0.050	-0.75	0.085	3.44**
노인가구복지서비스	0.171	2.79**	-0.026	-0.96
아동가구복지서비스	0.181	2.87**	0.034	1.74
장애인가구복지서비스	0.129	2.91**	0.034	1.09
정치적 성향	-0.015	-0.64	-0.063	-7.69***
상수	0.594	2.97**	0.998	14.12***

주: 1) 장애인 모델: F = 3.46, p = 0.0000; R2 = 0.1387; Adj-R2 = 0.0987
 2) 비장애인 모델: F = 17.49, p = 0.0000; R2 = 0.0821; Adj-R2 = 0.0774
 3) † p<0.1; * p<0.05; ** p<0.01; *** p<0.001

다음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세에 대한 지지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의 복지증세 지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기초보장 수급여부(p=0.010), 기타 정부보조금 수급

여부($p=0.039$), 가구복지서비스 수급여부($p=0.023$), 노인가구복지서비스 수급여부($p=0.049$), 아동가구복지서비스 수급여부($p=0.073$), 그리고 장애인가구복지서비스 수급여부($p=0.014$) 등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회귀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다르게 나타났다. 장애인 회귀모형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변수들 중에서 비장애인 회귀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로는 여성($p=0.000$), 연령($p=0.000$), 가구소득의 제곱근($p=0.024$), 총자산의 제곱근($p=0.003$), 그리고 정치적 성향($p=0.000$)이었다. 반면에 장애인 회귀모형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비장애인 회귀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변수로는 기초보장 수급경험, 기타 정부보조금 수급경험, 노인가구복지서비스 수급경험, 아동가구복지서비스 수급경험 및 장애인가구복지서비스 수급경험 등 모두 복지수급 경험 요인들이었다.

주로 복지수급 경험 요인들이 장애인의 복지증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초보장과 기타 정부보조금 수급경험이 있는 장애인이 없는 장애인보다 복지증세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이 있는 장애인이 없는 장애인보다 복지증세를 지지하였다. 반면에 노인가구복지서비스 수급경험, 아동가구복지서비스 수급경험과 장애인가구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은 복지증세에 대한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복지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보다 복지증세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가구복지서비스, 아동가구복지서비스 및 장애인가구복지서비스 수급 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장애인 회귀모형에서 장애인 회귀모형과 차이가 있는 독립변수들의 복지증세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비장애인은 남성보다 여성이 복지증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많을수록 복지증세

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복지증세에 찬성하였으나, 총자산은 많을수록 복지증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성향은 보수적일수록 복지증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0〉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복지증세에 대한 회귀분석

	장애인		비장애인	
	계수	t	계수	t
여성	-0.022	-0.22	-0.146	-4.00***
연령	0.004	0.71	0.012	6.87***
혼인상태	-0.035	-0.29	-0.043	-0.96
교육연수	0.010	0.70	0.009	1.56
광역시	0.206	1.27	0.051	0.98
시	0.135	0.92	0.022	0.47
군	0.274	1.40	-0.058	-0.74
도농복합군	0.396	0.61	-0.016	-0.08
취업여부	0.098	0.86	-0.044	-1.10
가구소득제곱근	0.004	1.28	0.002	2.27*
총자산제곱근	-0.001	-0.76	-0.001	-3.00**
기초보장수급	0.420	2.59*	0.019	0.18
기타정보보조금	0.340	2.07*	-0.014	-0.29
가구복지서비스	0.375	2.29*	0.200	3.60***
노인가구복지서비스	-0.295	-1.98*	-0.073	-1.17
아동가구복지서비스	-0.277	-1.80†	-0.069	-1.57
장애인가구복지서비스	-0.270	-2.48*	0.006	0.08
정치적 성향	0.028	0.50	-0.110	-5.94***
상수	-0.416	-0.85	0.099	0.62

주: 1) 장애인 모델: $F = 2.02$, $p = 0.0081$; $R^2 = 0.0860$; $Adj-R^2 = 0.0435$
 2) 비장애인 모델: $F = 8.14$, $p = 0.0000$; $R^2 = 0.0400$; $Adj-R^2 = 0.0351$
 3)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제6절 소결: 결과의 요약과 해석

1. 주요 결과의 요약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 정도를 설명하는 자기이익(self-interest) 관점과 정치적 이데올로기(political ideology) 관점의 두 관점에서 노인은 비노인에 비해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가 더 높을 가능성과 더 낮을 가능성을 모두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이익의 관점에서는 노인은 비노인보다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정부 복지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 정치적 이데올로기 관점에서는 노인은 비노인보다 보수적이기 때문에 정부 복지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낮다. 본 연구의 결과는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지지하고 있다. 먼저, 복지 의식에 대한 t 검증에서는 노인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건강보험 및 보건, 국민연금(노령연금) 등에 대해서는 비노인보다 훨씬 더 친복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으로 정부 지원 대상으로 인식되는 빈곤층, 노인, 장애인, 아이가 있는 가족 등에 대한 생활지원에 대해서 노인이 비노인보다 더 지지적인 복지정책은 노인 생활지원이 유일하다. 이는 자기이익 관점을 지지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의식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도, 기초보장 수급 노인 및 가구복지서비스 수급 노인은 비수급 노인에 비해 친복지적인 것으로 나타나 복지서비스 수급 경험이 복지의식에 긍정적이라는 자기이익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에 근로빈곤층 최소생계보장, 대학교육 무상제공, 유치원·보육시설 무상제공 등 노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문항에서는 반대로 노인이 비노인보다 반복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12개 복지정책의 평균 점수에서 노인은 비노인보다 낮아(0.04점 차이) 반복

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도 노인이 친복지적인 정책이 포함되어 상당히 그 차이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복지의식에 대한 회귀분석을 보면, 정치적 성향이 노인의 복지의식에 상당히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반복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적 성향은 노인이 비노인보다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은 자기이익 관점에서는 노인과 유사하게 정부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 복지정책을 비장애인보다 더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정치적 이데올로기 관점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장애인보다 더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덜 지지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최근 선거에서 장애인이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집단화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비장애인보다는 더 진보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2009년의 서울시 장애인에 대한 조사에서도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은 자기이익 관점의 설명에 잘 부합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복지의식수준(12개 항목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장애인의 복지의식수준은 비장애인보다 약간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별 복지정책에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t 검증 결과, 국민연금(노령연금), 빈곤층 생활지원, 노인 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지원의 문항에서는 모두 장애인의 복지의식수준이 비장애인의 복지의식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항들은 모두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복지수급 경험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들이다.

복지의식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도 장애인의 복지수급 경험은 전반적으로 복지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

복지서비스, 아동가구복지서비스 및 장애인가구복지서비스를 받은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은 장애인보다 복지의식이 친복지적이었다.

한편 복지증세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노인의 경우 노인가구복지서비스 수급여부는 복지증세 지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노인가구복지서비스 수급경험, 아동가구복지서비스 수급경험 및 장애인가구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은 복지증세에 대한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가구복지서비스, 아동가구복지서비스 및 장애인가구복지서비스 수급 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분석 결과, 주목할 만한 점은 성별의 영향이다.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들이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친복지적인 결과를 나타낸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을 제외하면 노인, 비노인, 비장애인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반복지적이었다. 따라서 여성의 복지의식이 남성보다 낮은 원인을 밝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노인, 비노인, 비장애인은 모두 예상되었던 바와 같이 정치적 성향이 복지의식 및 복지증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장애인의 복지의식 및 복지증세에는 정치적 성향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복지의식 및 복지증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 결과의 해석과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과 장애인은 모두 자기이익 관점을 지지하여, 복지급여를 수급한 경험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과 장애인에 비해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편적 복지제도가 선별적 복지제도에 비해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하면, 최근에 대상자가 확대되기 시작한 무상보육제도,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은 모두 정부의 복지책임을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노인보다 비노인의 복지의식이 더 높다는 점도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복지책임을 높이도록 하는 요구를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복지에 대한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시킬 것인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정책 제언을 위해 주목해야 할 내용 중 하나는 복지의식과 달리 복지증세에 대한 분석에서 노인가구복지서비스 수급경험, 아동가구복지서비스 수급경험 및 장애인가구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이 복지증세에 대한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이 자신이 가장 많이 경험한 노인가구복지서비스와 장애인가구복지서비스 수급 경험이 복지증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현재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7장 근로에 대한 의식 국가비교

제1절 근로에 대한 의식의 의의와 연구 문제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근로에 대한 의식 실태 비교

제4절 근로시간에 대한 영향요인 국가 비교

제5절 소결: 결과의 요약과 해석



7

근로에 대한 의식 << 국가비교

제1절 근로에 대한 의식의 의의와 연구 문제

1. 연구의 초점과 연구문제

본 장에서는 사회정책과 관련된 주요한 의식의 영역으로 근로에 대한 의식을 분석하고 있다. 최근 많은 복지국가에서 ‘일’, ‘고용’, ‘노동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기존의 사회정책 연구들이 일자리의 질이나 노동시장 불평등 등의 노동시장과 일자리의 구조를 분석하는데 치중했던 것에서 최근에는 일에 대한 인식과 선호(preference), 개인 간 선호의 다양성(heterogeneity)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다. 사회정책에서 일에 대한 의식이 과거 대비 더욱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변화로 해석된다. 고용불안과 고용과 복지의 연계가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하는 사회정책의 환경을 감안하면 당연한 변화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일에 대한 인식 중에서도 특히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일에 대한 선호와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복지국가에서 근로시간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표준보다 오래 일하는 것, 즉 장시간 근로의 이슈이고, 다른 하나는 표준보다 적게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¹⁵⁾의 이슈이다.

한국에서 장시간 근로의 이슈는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반면, 시간제 근로는 일자리의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으로서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으며,

15) 현재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 용어가 정부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간제 일자리라는 표현을 쓰도록 한다.

이에 대한 욕구도 노동공급 측면에서나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시화되어 표출된 적이 거의 없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임시 일용직, 파견 등 간접고용과 같이 다른 방식의 비정형고용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시간제 근로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노동공급 측 입장에서도 시간제 근로는 다른 비정규직과 마찬가지로의 “나쁜” 일자리의 한 형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고, 전일제에 비해 낮은 소득 등이 더 큰 한계로 비춰진 것이다. 최근 고용율 증진의 일환으로 시간제 일자리 확충이 정책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시간제 일자리 = 나쁜 일자리”라는 비판이 거세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시간제 일자리가 더 일반화되어 있는 서구 복지국가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고용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시간제 고용이 전일제 고용에 비하여 저숙련 일자리에 더 만연하다는 점, 근로시간과 소득간의 상충관계로 인한 저소득 문제, 제반 고용연계 사회적 보호체제에서의 배제 위험, 승진 등 경력에서의 불이익 등의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갖는 한계는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보여진다. 반면 다른 한편으로 시간제 근로가 여성을 노동시장에 통합시키는데 분명한 기여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교적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져있고 (Halldén, Gallie, Zhou, 2012), 일부 국가 사례비교연구들은 시간제 일자리가 지니는 고용의 질과 제약이 국가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최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일-생활 양립에의 욕구 증대, 생애과정의 탈표준화 등의 현상이 근로시간 자율성(autonomy)의 중요성과 시간제 근로에 대한 개인의 선호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다. 예컨대 하킴(Hakim, 2000)의 선호이론(preference theory)은 시간제 근로의 선택이 단순히 제도적 제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일과 여가(혹은 생활)간의 조합에 대한 개인의 자발적 선호에 의해서 결정됨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두 가지 논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근로시간에 대한 개인의 선택이 사실상 얼마나 자발적인가라는 점이다. 둘째, 계급론적 시각에서는 근로시간과 일에 대한 인식은 계급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다. 하킴의 이론은 이에 전면으로 대응하여, 생활양식에 대한 선호는 모든 교육수준과 사회적 계층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계급의 중요성은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본 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누가 더 적게/오래 일하기를 원하는가? 근로시간에 대한 선호는 국가차원의 거시적 요인에 의해 사실상 체계적으로 제약되는 것인가? 아니면, 노동시장 규제 및 보호,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복지국가의 처우, 한 국가의 일자리 상황과 노동시장 유연성 정도 등이 개인의 근로시간에 대한 선택과 선호를 설명해주는가? 미시적으로는 성, 연령, 계급에 따라 개인의 근로시간에 대한 선호가 달라지는가? 계급과 개인의 가치 중에서 개인의 근로시간과 일에 대한 태도를 더 많이 규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특히 젠더 요인을 중심으로 어떤 이론적 설명이 근로시간에 대한 선호를 잘 설명하는가에 대한 가설적 검증을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비교 국가적 차원에서 성별에 따라 제반 국가적 요인들과 개인적 요인들이 각각 어떻게 근로시간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층분석을 통해 비교 분석한다. 둘째, 분석대상 국가 전체 그리고 한국의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성별이 근로시간에 대한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로분석을 통해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분석은 상호보완적으로 일에 대한 선호를 규정하는 미시적, 거시적 조건들을 더욱 심층적으로 밝히게 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가. 선호이론(Preference theory)

하킴(Hakim, 2000, 2003, 2006)의 선호이론은 시장에서의 일과 가정에서의 일에 대한 여성의 선택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생활양식에 대한 '선호'를 생활양식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한다. 즉 자녀 및 가족 생활과 관련된 활동을 강조할 것인지, 시장에서의 일과 공적 영역에서의 경쟁적인 활동을 강조할 것인지는 여성의 생활양식에 대한 선호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이론은 여성의 역할에 대한 문화나 대중의 가치는 여성 개인의 선호에 비하면 여성의 생활양식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훨씬 덜 중요하다고 본다. 물론 계급 등의 사회적 구조와 경제적 환경이 여성의 선택을 어느 정도 제약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 이론은 사회적 행위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개인화(individualisation)를 강조하는 기든스(Giddens)의 성찰적 근대화 이론과 맥이 닿아있다. 개인화는 사회적 계급, 국가나 가족의 영향으로부터 각 개인을 자유롭게 함을 의미한다.

선호이론의 주요 설명은 다음과 같다(Hakim, 2000). 첫째, 여성의 선택과 기회를 확장시킨 역사적인 변화들로서 출산조절능력을 가져온 피임혁명, 성차별금지를 공식화한 동등기회의 혁명, 여성들이 선호하는 화이트칼라 직종의 확대, 2차 소득자를 위한 부차적 직업의 창출, 생활양식에서의 개인의 선호와 가치의 중요성 증대 등을 제기한다. 둘째, 여성들은 가족과 고용 간의 충돌에 있어서 이질적인 선호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상기한 이질적인 선호와 우선순위는 여성 내부 집단간의 균열

을 야기한다. 예컨대 가정 중심적인 여성과 일 중심적인 여성, 그리고 이들 중간에 있는 적응적(adaptive) 여성 등이 그것이다. 이질적 선호를 가진 여성집단 간의 이해관계 갈등은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선호-일 중심적-를 가진 남성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왔다. 넷째, 선호이론은 획일적인 사회공학적 정책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준다. 이 이론은 사회정책이 '일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하킴의 선호이론은 이후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켜 수많은 비판들이 제기되었고(예컨대 Jonung & Ståhlberg, 2008; McRae, 2003; Crompton & Harris, 1998; Ginn et al., 1996) 그의 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려는 연구들이 뒤를 이었다(Leahy & Doughney, 2006; Kan, 2005; Procter & Padfield, 1999). 비판의 핵심은 선호이론이 일(근로 시간)에 대한 결정을 개인의 취향에 의한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노동시장 여건과 일자리 상황 등이 개인의 일에 대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제약 요인이라는 점, 개인의 근로시간과 일에 대한 태도는 일차적으로 계급에 의해 규정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호이론을 토대로 성별에 따라 근로시간 선호와 실제 근로시간이 달라지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요컨대 선호이론에 따르면, 일자리 선택에서 중요한 요인은 생활양식에 대한 선호와 일에 대한 가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생활양식에 대한 선호와 일에 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간제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나. 직업적 특성 (계급적 관점)

계급 이론에 따르면 계급은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과 정치적 선호를 강하게 규정한다. 최근 계급 이론은 후기산업사회의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계급체계를 제안한다(Häusermann & Schwander, 2009; Oesch, 2003, 2006; Kitschelt & Rehm, 2005).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경제로 변환하면서 계급구조 역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기술 수준(skill-level)을 토대로 직업적 계급 층위에 주목한다. 웨쉬(Oesch, 2006)는 계급을 노동시장에서 처한 특정한 상황을 공유하는 직업 집단으로 정의하고, 집단 간에 공유되는 노동시장 상황이 그 집단의 자원과 선호도를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하우스만과 스웬더(Häusermann & Schwander, 2009a; 2009b)는 노동시장 '지위(status)'보다는 계급 혹은 기술수준에 따른 직업적 층위에 근거한 내부자-외부자의 구분이 정책선호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훨씬 큰 설명력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주로 숙련수준을 중심으로 한 직업적 특성에 초점을 두는 최근의 계급 연구동향에 의거하여, 이 연구에서도 숙련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는 기술수준이 낮은 업종과 직무에 더 많이 존재한다고 알려져있다(Gallie & Zhou, 2011).

한편 헨든 등(Halldén et. al., 2012)은 숙련형성체제 유형에 따라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하에서는 고용주가 학교체제에서 습득되는 일반 기술(general skill)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시간제 근로자에게 투자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는 대체로 저숙련 직종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조정된 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에서는 다변화된 질 생산과 관련된 복

잡한 작업과정에 필요한 ‘고숙련의 특수한 기술(specific skill)’이 강조됨에 따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고용을 증시한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전체적으로 근로여건과 질이 더 높을 수 밖에 없으며, 근로자의 협상력도 커진다. 또한 고숙련 일자리에서도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기술을 축적해갈 수 있도록 시간제로의 근로시간 단축 요구권을 관대하게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에스떼베츠(Estévez-Abe, 2005)는 이러한 체제가 젠더에 따라 상반된 함의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특수한 기술을 강조하는 체제에서의 혜택은 주로 남성 근로자가 누리게 되며, 여성은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해 특수한 기술을 습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여성일수록 더 낮은 숙련업무에 종사하는 분절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톰린슨(Tomlinson, 2006)은 여성이 기업과 근로시간을 두고 협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수적 숙련성을 가졌을수록 유리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숙련성에 따른 기술수준과 업무대체가능성(업무의 속성상 다른 사람이 대체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가)을 통해 직업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상반된 설명이 모두 가능하다. 고숙련 기술을 보유하거나, 업무의 대체불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협상력이 커질 수 있어 시간제 근로가 더욱 가능해질 수 있다(Tomlinson, 2006). 반면 저숙련 일자리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협상력은 낮은 대신, 업무의 대체가능성이 높아 시간제 일자리가 더 일반화되어 있을 수 있다.

다. 제도주의적 접근

제도주의적 관점은 개인의 선호와 결정을 제약하는 거시적 요인을 강조한다. 이처럼 제도주의에 입각하여 개인의 일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

치는 거시적·제도적 요인들을 설명하고자 한 일부 연구들이 있다(Hult & Svallfors, 2002; Gallie, 2007; Stier & Lewin-Epstein, 2003; Esser, 2005). 이들은 주로 복지국가 체제를 중심으로 개인의 일에 대한 선호(지향)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주의적 메카니즘을 설명해낸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즉 개인의 자발적 선택을 가져오는데 기여하는 '선호'는 이미 상당부분 구조적으로 제약되었다는 점을 밝혀내고 있다.

제도주의적 접근에서 시간제 근로의 이슈는 산업관계나 복지제도의 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된다(Fagan, 2001). 허든 등(Halldén et al., 2012)은 스웨덴과 영국의 시간제 일자리의 기술수준과 자율성을 비교하면서, 양국의 시간제 일자리는 전일제 일자리에 비해 낮은 처우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지만, 제도(institutional system) 차이로 인해 스웨덴의 시간제 일자리가 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수준과 자율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일과 근로시간 선호는 가족 상황, 특히 자녀양육 등에 대한 대안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육지원 정책이 발달한 국가일수록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보육서비스는 돌봄 의무로 인한 개인의 근로시간 제약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주는 한편, 근로시간 제약보다는 일자리의 질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함으로써 시간제 근로의 질을 높일 수 있다(Halldén et al. 2010).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높으면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보육정책이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는 힘, 즉 추동하는(push) 요인이라면, 시간제 일자리의 질은 시간제 일자리로 근로자들을 유인하는(pull)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간제 일자리와 관련된 제반 규제도 국가 간 근로시간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예컨대 시간제 일자리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도는 시간제 근로에 대한 선호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 그 외의 관련 선행연구

월터스(Walters, 2005)는 영국의 저임금 시간제 여성근로자 50명에 대한 질적 인터뷰를 통해 유급노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연구하였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하위직종에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들이라도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며, 특히 노동계급 가구에 속한 여성 시간제 근로자들의 경우 시간제 근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이 유급노동과 가정생활간에 진정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님을 밝혔다.

웨이건(Fagan, 2001)은 영국에서 남성과 여성의 일과 근로시간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바 있다. 그 연구에 따르면 노동시장 상황은 남녀 모두의 근로시간에 대한 태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가정상황은 남녀에게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등은 남성보다는 여성의 근로시간 선호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그녀는 여성의 근로시간 패턴은 실제 선호와는 다르다는 점도 밝혔다. 전일제로 일하는 여성들이 실제로는 더 적게 일하기를 원하며, 시간제 근로를 하는 여성들은 더 오랜 시간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편 크롬슨과 헐리스(Crompton & Harris, 1998)는 근로시간에 대한 선호는 선택(choice)과 제약(constraint) 양쪽 모두의 결과이며, 이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강조하였다.

제2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근로에 대한 의식 분석은 개인의 근로시간 선택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즉, 본 분석은 총체적으로 개인의 근로시간에 대한 선택이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근로에 대한 의식의 전반적인 실태를 관련 요인의 기술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본 절의 분석에서는 국제사회인식조사 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ISSP)의 2005년 자료(Work Orientation Module)를 활용한다. 국가비교 분석에서는 복지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 맥락이 유사한 OECD 국가 18개국(호주,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헝가리,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한국)의 핵심 근로연령대(25-54세)에 속한 근로자들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두 번째로 경로분석에서는 분석결과의 해석과 함의를 보다 선명하게 하기 위하여 분석대상 국가 중 일부 국가로 한정하여 기술하였다. 그리고 이중에서도 한국의 핵심 근로연령대(25-54세)로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들을 각각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변수들을 주요 종속변수로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이 선호하는 유급 노동 시간이다. ISSP에서는 “당신이 지금 원하는 대로 일하는 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면 다음 중 어떤 것을 선호하시겠습니까?”라는 문항으로 질문되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이를 전일제 근로, 시간제 근로의 이분변수로 구성하였다. 둘째, 현재 근로시간에 대한 변수이다. 전일제 근로, 시간제 근로의 이분 변수로 구성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선호하는 유급노동시간과, 현재 실제 유급노동시간 간의 관련성도 함께 분석해보고

자 한다.

독립변수와 관련해서는 먼저 다층분석에서는 국가차원으로 다음과 같은 거시 변수들을 고려하도록 한다. 첫째,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가족생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대표하는 변수로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지원 수준을 사용한다. GDP대비 보육 및 학령전기 아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지출비중으로 측정된다. 둘째, 시간제일자리 질을 대리하는 변수로서 전일제임금 대비 시간제임금 비중을 투입한다. 셋째, 시간제일자리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시간제 일자리 요구규제의 관대성(Generosity of PT request regulation) 지표를 사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다층모형과 경로모형에 투입되는 개인차원의 독립변수는 다음과 같다.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변수들로서 먼저 성별 변수를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시간제 일자리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고, 시간제 일자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연령은 5세 단위로 측정된 연령대 서열변수를 투입한다. 셋째, 가족상황을 나타내는 대표변수로서 자녀여부를 투입한다.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자녀의 나이에 대한 세부정보를 구할 수 없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통제변수로 투입한다.

직업속성에 관한 변수군은 ISCO 숙련도(skill level)에 따른 4단계 분류에 의한 직업의 기술 수준과, 업무대체성(본인의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체하는 것이 얼마나 용이한가)에 대한 5점 척도로 구성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기술수준과 업무대체 불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일에 대한 가치에 관한 변수로는 시간 자율성과 유급노동의 의미를 투입하였다. 시간 자율성에 대한 가치는 직업에서 시간 자율성 차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시간자율성이

중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편 '유급노동의 의미'는 자료에서 조사된 두 개의 변수('직업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의 역코딩 값,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도 유급노동을 즐긴다'의 합산점수)로 측정하였다. 그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돈을 위한 수단이 아니더라도 유급노동을 즐거움을 의미한다.

<표 7-1> 변수의 측정

변수	변수명	측정	자료 출처	
종속 변수	현재 근로시간	25-54세 대상, 전일제(주당 30시간 이상)=0, 시간제(주당 10-29시간) =1	ISSP (2005)	
	선호 근로시간			
국가 변수	노동시장 참여 지원	GDP 대비 % 공적 교육 지출	OECD	
	시간제일자리 질	전일제임금 대비 시간제임금 비중	OECD	
	시간제일자리 권리	시간제 일자리 요구 규제의 관대성 (Generosity of PT request regulation)	OECD	
독립 변수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0=남성, 1=여성	ISSP (2005)
		연령	연령대 (5세간격, 25-54세)	
		자녀여부	0=자녀없음, 1=자녀있음	
		교육수준	교육수준, 6점의 서열변수. 점수 높을수록 높은 교육수준을 의미	
	직업 속성	직업의 기술 수준	ISCO skill level에 따른 4단계 분류, 점수 높을수록 높은 계급을 의미	
		업무대체성	본인의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체하는 것이 얼마나 용이한가에 대한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업무대체성이 낮음을 의미	
	일에 대한 가치	시간 자율성 가치	직업에서 시간 자율성 차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하지 않음을 의미	
		유급노동의 의미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의 역코딩 값,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도 유급노동을 즐긴다' 두 문항의 합산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돈을 위한 수단이 아니더라도 유급노동을 즐거움을 의미.	

주: 단, 인식조사에서 독립은 서독을 의미함

제3절 근로에 대한 의식 실태 비교

1. 국가별 일과 근로시간에 대한 인식 비교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각국의 25-54세 사례 수는 다음과 같다. 일본 226명, 독일과 영국은 각각 295명, 헝가리 317명, 아일랜드 341명, 캐나다 347명, 핀란드 363명, 스페인 384명, 체코 201명, 스웨덴 476명, 뉴질랜드 499명, 한국 547명, 노르웨이 575명, 덴마크 579명, 호주 604명, 미국 678명, 포르투갈 696명, 프랑스 698명이다. 이후 제시되는 모든 분석에서는 ISSP에서 제공되는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표 7-2〉는 일에 대한 인식에 대해 국가별로 평균값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직업이 돈 벌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에 대해 스페인, 체코, 헝가리, 한국, 일본 등은 상대적으로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돈 벌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에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의 북구유럽 국가들에서는 상대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반면, ‘돈이 필요 없어도 유급노동을 즐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조적이다. 한국은 비교적 일과 돈의 연결이 강한 국가로 해석된다.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일자리에 있어서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핀란드 등에서 특히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고, 헝가리, 독일, 일본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족생활 갈등과 관련해서는 ‘직장일이 가족생활을 방해’하는 경험에 대해 호주,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경험한다고 인식하는 반면, 일본, 체코, 아일랜드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흥미롭다. 일가족생활 갈등을 평균적으로 좀 더 자주 느낀다고 한 국가들은 실제로는 일가족양립 문화가 더 자리를 잡은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인식이 실제 일가족양립이 어려운 정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일가족양립에 대한 민감성을 더 반영하는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한국은 직장일이 가족생활을 방해한다고 느끼거나 또는 가족생활이 직장일을 방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두 낮은 편이다.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 즉 직장대체가능성에 있어서는 미국, 덴마크, 아일랜드 등에서 더 찾기 쉽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일본, 독일, 헝가리 등에서는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려운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은 중간 수준이다. 반면 회사가 나를 대체할 가능성, 즉 업무대체가능성에 대해서는 뉴질랜드, 영국, 스웨덴, 핀란드에서 업무대체가 쉽지 않은 편으로 응답한 반면, 스페인, 체코 등에서 좀 더 쉽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각국의 고용유연성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표 7-2〉 국가별 기초통계 II : 평균값

	직업은 돈벌기위한 수단 ¹⁾	돈이 필요없어도 유급노동 즐김 ²⁾	시간자유성 중요 ¹⁾	직장일이 가족생활 방해 ³⁾	가족생활이 직장일 방해 ³⁾	현재와 동일 수준의 일자리 찾을 가능성 ⁴⁾	회사가 나를 대체할 가능성 ⁴⁾
호주	3.35	2.55	2.32	3.12	3.77	3.23	2.93
독일(서)	3.24	2.39	2.49	3.36	4.04	3.76	2.93
영국	3.22	2.67	2.39	3.18	3.84	3.11	2.95
미국	3.37	2.49	2.48	3.43	3.92	2.89	2.84
헝가리	2.97	2.58	2.59	3.53	4.39	3.68	2.69
아일랜드	3.37	2.53	2.31	3.58	4.08	3.04	2.72
노르웨이	3.94	2.15	2.21	3.39	4.07	3.22	2.89
스웨덴	3.61	2.35	1.98	3.15	3.82	3.39	2.94
체코	2.59	2.81	2.45	3.63	4.22	3.68	2.49
뉴질랜드	3.46	2.39	2.29	3.24	3.92	3.18	3.11
캐나다	3.61	2.58	2.30	3.20	3.68	3.17	2.85
일본	3.20	2.17	2.48	3.57	3.96	3.71	2.82
스페인	2.45	2.87	1.88	3.57	3.92	3.14	2.80
프랑스	3.37	2.74	2.28	3.24	4.10	3.35	2.44
포르투갈	3.17	2.60	2.12	3.58	3.99	3.60	2.56
덴마크	3.81	2.05	2.29	3.39	3.93	2.94	3.11
핀란드	3.23	3.19	2.05	3.31	3.95	3.31	2.99
한국	2.87	2.27	2.15	3.78	4.15	3.56	2.86
전체 평균	3.29	2.51	2.26	3.39	3.98	3.31	2.82

주: 1) 점수 높을수록 동의하지 않음 2) 점수 높을수록 동의함 3) 점수 낮을수록 자주 경험 4) 점수 높을수록 가능성 낮음

〈표 7-2〉는 국가별로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국가수준의 변수들을 보자. 이들은 국제인식조사 자료와 시점을 맞추기 위해 2005년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다(단, 시간제 전환요구 규제 관대성은 2000년대 후반의 수치임). 첫째, 근로자의 가족생활 부담을 경감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보육 지출 수준은 덴마크(GDP 대비 1.1%), 스웨덴(1.1%), 노르웨이(0.8%)에서 높게 나타나고, 캐나다(0.2%), 미국·일

본·체코(0.3%), 호주·독일·스페인(0.4%) 등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0.2%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보육정책이 본격적으로 확충되기 이전의 상황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전일제 임금대비 시간제 임금비율을 보면, 포르투갈(1.07), 헝가리(1.00), 프랑스(0.90) 등에서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은 전일제의 임금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반면 미국(0.55), 한국(0.57), 캐나다(0.65), 영국(0.69) 등에서는 시간제 일자리 임금수준이 전일제에 비해 상당히 낮다.

셋째, 시간제로의 전환 요구에 대한 규제의 관대성을 보자. 시간제로의 전환 요구권이 제도적으로 가장 발달한 국가는 스웨덴(29)이며, 그리고 노르웨이·독일(26), 프랑스(25) 등이며, 반면 호주·미국·캐나다(1), 한국(8), 덴마크(9)는 낮은 수준이다.

다음으로 ISSP 자료에서 산출한 실제 근로시간 현황을 보자. 이는 각국에서 25-54세 근로자 중에서 전일제/시간제 근로를 한다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중을 제시한 것인데, 각국의 설문조사 자료의 응답을 통해 도출한 수치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파악되는 실제 시간제 근로 비중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략적으로 경향을 보면, 여성의 경우 전체적으로 남성에게 비해 시간제 근로 비중이 확연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시간제 근로 비중은 국가마다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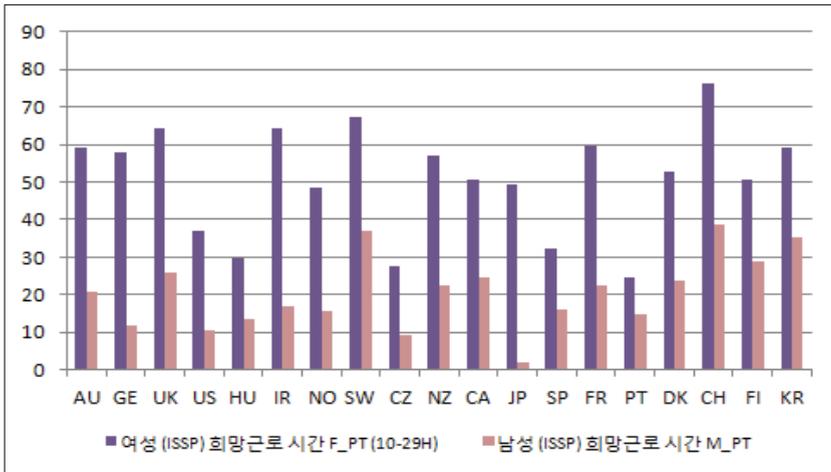
〈표 7-3〉 국가별 기초통계 II

국가	여성 (ISSP)				남성 (ISSP)				국가변수 (OECD, 2005)		
	실제 근로시간 (해당 비율)		희망 근로시간		실제 근로시간		희망 근로시간		보육 지출 (GDP 대비)	전일제 임금대비 시간제 임금비율	시간제 전환 요구 규제 관대성
	전일제 (30h+)	시간제 (10-29h)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호주	60.6	39.4	40.8	59.2	90.9	9.1	79.3	20.7	0.4	0.88	2
독일(서)	56.0	44.0	41.9	58.1	98.3	1.7	88.1	11.9	0.4	0.84	26
영국	55.0	45.0	35.5	64.5	93.2	6.8	74.1	25.9	0.8	0.69	11
미국	81.8	18.2	63.2	36.8	91.6	8.4	89.6	10.4	0.3	0.55	1
헝가리	94.3	5.7	70.3	29.7	98.4	1.6	86.3	13.7	0.7	1.00	12
아일랜드	63.5	36.5	35.6	64.4	98.4	1.6	82.9	17.1	0.5	0.75	18
노르웨이	82.5	17.5	51.5	48.5	98.7	1.3	84.2	15.8	0.8	0.78	26
스웨덴	66.5	33.5	32.5	67.5	93.9	6.1	63.1	36.9	1.1	0.88	29
체코	95.6	4.4	72.5	27.5	99.2	0.8	90.9	9.1	0.3	0.84	15
뉴질랜드	60.2	39.8	42.8	57.2	93.7	6.3	77.6	22.4	0.6	0.88	7
캐나다	76.0	24.0	49.4	50.6	97.6	2.4	75.4	24.6	0.2	0.65	1
일본	65.6	34.4	50.7	49.3	97.3	2.7	98.1	1.9	0.3	0.70	20
스페인	78.2	21.8	67.6	32.4	96.4	3.6	84.0	16.0	0.4	0.78	10
프랑스	68.6	31.4	40.2	59.8	94.4	5.6	77.5	22.5	1.0	0.90	25
포르투갈	91.8	8.2	75.5	24.5	99.7	0.3	85.1	14.9	0.4	1.07	23
덴마크	86.2	13.8	47.0	53.0	97.5	2.5	76.2	23.8	1.4	0.84	9
핀란드	85.8	14.2	49.5	50.5	95.7	4.3	71.3	28.7	0.6	0.84	14
한국	73.0	27.0	41.0	59.0	89.1	10.9	64.5	35.5	0.2	0.57	8

[그림 7-1]은 위의 표를 바탕으로 성별, 국가별로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시간제 근로를 더 많이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헝가리, 체코,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는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는 여성의 비율이 스위스, 스웨덴, 영국, 아일랜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

근로자 중에서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들로는 스웨덴, 스위스, 한국, 핀란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7-1] 시간제 근로 선호 비율 : 국가비교 기초통계



2. 집단별 일에 대한 인식 비교

다음으로는 분석에 활용된 모든 국가 응답자의 응답을 기초로 성별, 실제 근로시간별, 선호 근로시간별 일에 대한 인식 차이를 다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자리에서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 즉 시간 자율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전체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는데(중요한 편, 매우 중요 합하여 66.8%),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전일제 근로자보다 시간제 근로자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제 근로를 선호할수록 시간 자율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표 7-4 참조).

〈표 7-4〉 일에 대한 인식 비교 : 시간 자율성의 중요성

		일자리에서 근로시간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매우 중요함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전체
성별	남성	23.9	40.0	22.8	11.0	2.4	100
	여성	26.0	43.3	19.6	9.1	2.0	100
실제 근로시간	전일제	19.9	41.8	25.9	10.4	2.1	100
	시간제	20.6	42.4	25.3	9.8	1.9	100
선호 근로시간	전일제	17.7	38.9	28.3	12.3	2.8	100
	시간제	23.1	46.5	21.6	7.5	1.3	100

유급노동의 의미에 대해서는 ISSP에서 두 가지로 질문하고 있는데, ‘직업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에 동의하는 정도를 보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47.2%, 동의하는 경우가 38.6%로 나타난다(표 7-5 참조). 이는 일이 돈을 버는 것 외에도 본인의 자아실현이나 사회적 의미 등을 가진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여성은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49.5%로 남성(44.5%)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보다는 전일제 근로자일수록 시간제 근로자에 비해 직업을 돈버는 수단이라고 동의하는 경향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표 7-5〉 일에 대한 인식 비교 : 유급노동의 의미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매우 동의함	동의함	보통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전체
성별	남성	15.3	26.3	14.0	30.8	13.7	100
	여성	12.5	23.8	14.3	34.6	14.9	100
실제 근로시간	전일제	19.0	32.5	22.4	19.7	6.4	100
	시간제	14.6	28.3	25.9	22.6	8.6	100
선호 근로시간	전일제	8.4	20.6	14.7	37.8	18.5	100
	시간제	9.9	22.1	14.2	35.1	18.6	100

한편 <표 7-6>을 보면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유급노동을 즐긴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다는 인식이 60.2%로 동의한다고 응답한 26.4%에 비해 훨씬 지배적이었다. 여성의 경우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유급노동을 즐긴다고 하는 경우는 25.1%로 남성의 27.8%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어 성별 차이는 존재하지만 확연한 수준은 아니다. 앞서 논의한 직업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응답한 것과 비교해볼 때 다소 상반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여성의 경우 돈이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유급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유급노동을 즐긴다고 응답하는 경우는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제 근로자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표 7-6> 일에 대한 인식 비교 : 유급노동의 의미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유급노동을 즐긴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성별	남성	16.0	42.2	14.0	18.9	8.9	100
	여성	17.0	44.2	13.6	17.2	7.9	100
실제 근로시간	전일제	0.8	4.0	20.9	40.2	34.2	100
	시간제	0.9	4.2	24.1	37.3	33.5	100
선호 근로시간	전일제	19.4	45.1	14.5	13.9	7.2	100
	시간제	15.0	48.0	14.2	15.4	7.4	100

<표 7-7>에서 회사가 내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대체시킬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인식에서는 성별, 실제 근로시간별 차이가 어느 정도 드러난다. 남성은 33.2%가 본인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 25.6%가 업무대체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업무대체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44.7%, 낮다는 인식이 29.5%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일수록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업무대체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난다.

〈표 7-7〉 일에 대한 인식 비교 : 업무대체가능성

		회사가 나를 대체하기 쉬운 정도 (업무대체가능성)					
		매우 쉬움	쉬운 편임	보통	어려운 편임	매우 어려움	전체
성별	남성	15.1	24.8	26.8	22.8	10.4	100
	여성	19.0	30.7	24.7	18.5	7.1	100
실제 근로시간	전일제	13.7	27.5	26.6	23.2	9.0	100
	시간제	19.0	32.5	22.4	19.7	6.4	100
선호 근로시간	전일제	14.3	27.4	26.5	22.8	9.0	100
	시간제	15.1	30.2	25.4	21.9	7.4	100

일-가족생활 갈등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표 7-8〉의 결과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일-가족생활 갈등을 더 느끼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직장일이 가정생활을 방해하는 경험’에 대해 항상 혹은 가끔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남성은 18%인 반면 여성은 15.7%로 더 낮고, 그런 경험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남성의 45.1%에 비해 여성은 49%로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가정생활이 직장일을 방해하는 경험에 대해서도 거의 없거나 없다고 응답한 남성은 71.1%, 여성은 72.8%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시간제로 일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근로시간이 전일제일수록 일-가족생활 갈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표 7-8〉 일-가족생활 갈등에 대한 인식 비교 : 직장일이 가정생활 방해하는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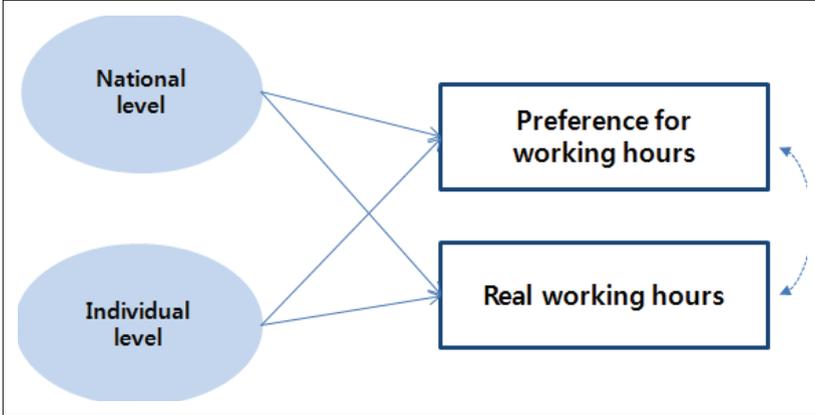
		직장일이 가정생활을 방해하는 경험					
		항상	자주	가끔	거의 없음	전혀 없음	전체
성별	남성	4.3	13.7	36.9	25.1	20.0	100
	여성	3.1	12.6	35.2	28.7	20.3	100
실제 근로시간	전일제	3.5	14.7	36.8	28.1	17.0	100
	시간제	2.0	9.8	34.2	32.0	21.9	100
선호 근로시간	전일제	3.1	13.5	34.7	29.7	19.1	100
	시간제	3.0	13.8	38.4	27.8	17.0	100
		가정생활이 직장일을 방해하는 경험					
성별	남성	1.3	4.6	23.0	35.5	35.6	100
	여성	1.0	4.4	21.8	37.0	35.8	100
실제 근로시간	전일제	0.8	4.0	20.9	40.2	34.2	100
	시간제	0.9	4.2	24.1	37.3	33.5	100
선호 근로시간	전일제	0.8	3.8	19.7	40.6	35.1	100
	시간제	0.7	4.2	23.8	38.7	32.6	100

제4절 근로시간에 대한 영향요인 국가 비교

1. 선호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다층분석

우선 근로시간 선호에 대해 다층모형을 이용하여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7-2]는 본 연구의 분석모형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투입되는 변수는 〈표 7-1〉에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근로시간과 근로시간에 대한 선호가 상호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이에 대해 순환모형(recursive model)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7-2] 연구모형 1 : 다층 모형



분석결과는 <표 7-9>에 제시되어있다. 먼저, 근로시간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보면, 국가 변수 중에서는 공적보육지출만이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국가가 가정생활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도가 높을수록 시간제 근로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육 지원이 특히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전일제보다는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한편 시간제 근로요구권리나, 시간제 일자리의 질은 개인의 시간제 선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흥미롭다. 개인의 선호가 시간제 전환에의 권리성이나 일자리 질에 따라 좌우되기보다는 미시적인 요인들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실제로, 개인 수준의 변수들은 근로시간 선호에 대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있을수록 전일제보다는 시간제를 선호하게 된다. 일의 가치에 관한 요인에서는 시간자율성을 중시하고, 유급 노동의 의미를 둔 이외에 것에 들수록 전일제보다 시간제를 선호하고 있

다. 직업속성과 관련해서, 기술수준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근로시간에 대한 선호는 전문직이나 단순직 등의 기술수준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한편 업무대체가능성이 높을수록 시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단, $p < .10$ 수준).

한편, 근로시간 선호와 실제 근로시간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 개인의 근로시간 선호를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개인의 근로시간 선호가 자발적인 것인가, 상황과 구조에 제약된 것인가에 대해 본 연구결과를 통해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가족상황이나 직업속성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된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시간제 근로는 개인의 선호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자. 국가 변수 중에서는 시간제 일자리의 질 변수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일제 대비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오히려 전일제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구조적으로 전일제 일자리가 더 지배적인 국가에서 시간제와 전일제 일자리의 임금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개인적인 요인 중에서는 자녀가 있을수록, 기술수준이 낮을수록, 업무대체가능성이 높을수록 전일제보다는 시간제 일자리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간제 일자리가 전일제 일자리에 비해 더 낮은 기술수준의 직무와 대체가능한 업무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일의 가치에 관한 요인들에서, 시간자유성이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돈벌이 때문이 아니더라도 유급노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인식할수록 전일제보다 시간제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실제 시간제 근무가 시간제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 7-9〉 다층모형 분석결과 (고정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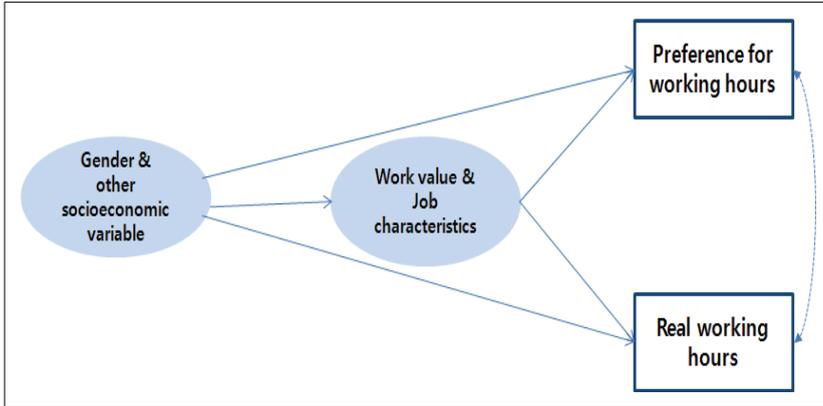
		근로시간 선호		실제 근로시간	
		β	t	β	t
개인수준 독립변수	성별	1.472	14.279**	1.952	9.263**
	연령	0.076	3.398**	0.032	0.905
	교육수준	0.067	1.857†	0.000	-0.010
	자녀여부	0.433	5.822**	0.660	4.883**
	기술수준	-0.031	-0.633	-0.425	-6.629**
	업무대체가능성	-0.041	-1.655†	-0.139	-4.916**
	시간자유성	-0.325	-6.933**	-0.186	-4.717**
	유급노동 의미	0.061	2.965**	0.031	1.893†
국가수준 독립변수	보육지출(GDP대비)	0.952	2.406*	0.226	0.348
	시간제근로요구권리	-0.001	-0.094	0.009	0.339
	시간제 일자리의 질	-0.691	-1.077	-2.469	-2.533*
근로시간 선호 - 실제 근로시간		0.316	4.309**		
Thresholds	근로시간 선호	-0.060	-0.105		
	실제 근로시간	1.177	1.887†		
Residual variance	근로시간 선호	0.675	3.546**		
	실제 근로시간	0.236	4.992**		
모형 적합도	AIC	14562.880			
	BIC	14752.596			

주: †: $p < .10$, *: $p < .05$, **: $p < .01$. 종속변수 값이 작을수록 더 높은 지지를 의미함.

2. 선호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경로분석

다음으로 한국의 25-54세 근로연령층에 대해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에 대한 선호와 실제 근로시간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고자 한다. 특히 성별을 중요한 독립변수로 보고, 생활양식에 대한 가치와 일자리의 특성 등이 근로시간 선호에 차이를 가져오는가를 경로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사용된 변수들은 국가비교연구의 다층모형에서 사용된 개인차원 변수와 동일하다.

[그림 7-3] 연구모형 2 : 경로모형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인적 차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연령, 교육수준과 계층)은 일에 대한 가치(시간 자율성의 중요성, 유급노동의 의미)와 일자리의 속성(일자리의 기술수준, 업무대체가능성)으로 연결되며, 이들은 근로시간에 대한 선호와 실제 근로시간으로 연결된다. 근로시간에 대한 선호와 실제 근로시간 간에는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쌍방향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아 순환모형(nonrecursive model)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모형을 추정한 결과, 한국 모형은 $CFI=0.992$, $TLI=0.955$, $RMSEA=0.022$, 영국은 $CFI=0.985$, $TLI=0.921$, $RMSEA=0.046$, 독일모형은 $CFI=0.990$, $TLI=0.944$, $RMSEA=0.043$ 으로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⁶⁾ 스웨덴과 미국은 TLI 적합도가 각각 0.768, 0.738로 나타났으나, RMSEA가 0.08 보다 낮고 CFI 적합도 지수는 좋은 편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진다(표 7-10 참조).

16) 일반적으로 $RMSEA < .05$ 이면 좋은 적합도, $RMSEA < .08$ 이면 괜찮은 적합도, $RMSEA < .10$ 이면 보통 적합도, $RMSEA > .10$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논의되며, CFI, TLI의 경우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평가된다(홍세희, 2009).

이들 지표는 표본크기에 영향을 덜 받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며, 경험적으로 충분한 해석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등 좋은 모형에 관한 가정을 충족하여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7-10〉 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CFI	TLI	RMSEA
전체 국가	0.971	0.821	0.057
스웨덴	0.959	0.768	0.068
영국	0.985	0.921	0.046
독일	0.990	0.944	0.043
미국	0.958	0.738	0.062
한국	0.992	0.955	0.022

〈표 7-11〉은 경로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개인적 속성인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중에서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독일을 제외한 스웨덴, 영국, 미국, 한국의 분석에서 모두 여성일수록 남성에 비해 숙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여성일수록 업무 대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여성일수록 시간자율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은 한국과 미국에서만 유의미하게 입증되었고, 스웨덴, 영국, 독일에서는 시간자율성에 대한 젠더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여성일수록 일의 의미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낮은 경향은 미국에서만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제는 ‘근로시간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자. 성별은 모든 분석대상 국가들에서 최종내생변수인 근로시간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수준은 모든 분석 국가에서 근로시간 선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을수록 시간제를

선호하는 경향은 독일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모두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연령이나 교육수준, 기술수준은 근로시간 선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시간제를 희망하는 경향은 영국과 미국에서만 확인되었고, 미국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간제를 희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실제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면, 모든 분석 국가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실제로 시간제로 일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한편 다른 국가들에서는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독일 제외), 자녀가 있을수록, 기술수준이 낮을수록(독일 제외), 업무대체가능성이 높을수록(영국 제외) 전일제보다는 시간제로 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교육수준과 시간자율성 인식이 실제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에서만 확인되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성별 변수만이 전일제/시간제 근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에서는 시간제 근로로 일하는 경우가 연령대나 기술수준, 업무대체가능성, 시간자율성에 대한 선호 등에 따라 상이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선호와 실제 근로시간 간의 관계는 경로분석에서도 다층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시간제를 선호할수록 실제로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표 7-11〉 선호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요인의 영향: 경로분석 결과

경로		스웨덴	영국	독일	미국	한국
		Estimates (t값)	Estimates (t값)	Estimates (t값)	Estimates (t값)	Estimates (t값)
인구 사회학적 속성 → 직업 속성 :기술수준	성별 →	-0.017	-0.161	-0.032	0.028	-0.161
	기술수준	(-0.276*)	(-2.166*)	(-0.408)	(2.092*)	(-2.166*)
	연령 →	0.045	0.035	0.053	0.018	0.075
	기술수준	(2.386*)	(1.128)	(2.244*)	(4.322**)	(2.923**)
	교육수준 →	0.399	0.317	0.432	0.296	0.379
	기술수준	(13.105**)	(8.424**)	(13.271**)	(62.498**)	(11.014**)
인구 사회학적 속성 → 직업 속성 :업무대체 가능성	성별 →	-0.366	-0.204	-0.273	-0.265	-0.449
	업무대체가능성	(-3.573**)	(-1.487)	(-2.156*)	(-13.082)	(-4.094**)
	연령 →	0.001	-0.007	-0.046	0.024	0.019
	업무대체가능성	(0.194)	(-0.160)	(-1.080)	(4.026**)	(0.554)
	교육수준 →	0.028	0.171	0.057	0.071	-0.117
	업무대체가능성	(0.752)	(3.878**)	(1.136)	(10.579**)	(-2.561**)
인구 사회학적 속성 → 일에 대한 가치 :시간자율성	성별 →	-0.114	-0.014	0.002	-0.081	-0.221
	시간자율성	(-1.500)	(-0.137)	(0.015)	(-4.846**)	(-2.539*)
	연령 →	0.012	-0.035	-0.002	-0.008	-0.019
	시간자율성	(0.511)	(-1.028)	(-0.052)	(-1.628)	(-0.630)
	교육수준 →	-0.045	-0.008	-0.097	-0.006	0.047
	시간자율성	(-1.782 †)	(-0.227)	(-2.076*)	(-1.180)	(1.292)
인구 사회학적 속성 → 일에 대한 가치: 유급노동 의미	성별 →	0.092	0.141	-0.077	0.090	0.113
	유급노동의미	(0.957)	(0.972)	(-0.463)	(3.655**)	(0.812)
	연령 →	0.031	0.083	0.172	0.020	-0.088
	유급노동의미	(1.069)	(1.770 †)	(3.388**)	(2.704**)	(-1.977*)
	교육수준 →	0.086	0.093	0.049	0.097	0.155
	유급노동의미	(2.468*)	(1.995*)	(0.551)	(12.204**)	(2.634**)
인구 사회학적 속성/ 직업속성/ 일에 대한 가치/ → 근로시간 선호	성별 →	0.998	1.235	1.364	0.740	0.497
	근로시간선호	(7.891**)	(7.491*)	(7.675**)	(32.001**)	(4.242**)
	연령 →	0.033	0.116	0.093	0.042	-0.039
	근로시간선호	(0.901)	(2.225*)	(1.479)	(6.095**)	(-0.990)
	교육수준 →	-0.021	0.060	0.034	0.074	0.018
	근로시간선호	(-0.367)	(0.952)	(0.393)	(8.372**)	(0.300)
	자녀여부 →	0.497	0.385	0.198	0.182	0.270
	근로시간선호	(4.014**)	(2.355*)	(1.076)	(7.904**)	(2.328*)

경로		스웨덴	영국	독일	미국	한국
		Estimates (t값)	Estimates (t값)	Estimates (t값)	Estimates (t값)	Estimates (t값)
	기술수준→	-0.091	-0.116	0.051	-0.003	-0.046
	근로시간선호	(-0.995)	(-1.248)	(0.350)	(-0.227)	(-0.646)
	업무대체가능성	0.040	0.009	-0.145	0.009	-0.043
	→근로시간선호	(0.684)	(0.131)	(-1.845+)	(0.965)	(-0.887)
	시간자율성→	-0.063	-0.188	-0.219	-0.151	-0.142
	근로시간선호	(-0.810)	(-2.158*)	(-2.284*)	(-12.616**)	(-2.396*)
	유급노동의미	0.008	-0.056	0.132	0.046	0.029
	→근로시간선호	(0.125)	(-0.929)	(1.889+)	(5.794**)	(0.794)
인구 사회학적 속성/ 직업속성/ 일에 대한 가치/ → 실제 근로시간	성별 →	1.183	1.296	2.055	0.736	0.446
	실제근로시간	(6.953**)	(6.406**)	(7.791**)	(25.280**)	(3.210**)
	연령 →	0.102	0.091	0.037	0.016	-0.013
	실제근로시간	(2.173*)	(1.678+)	(0.493)	(1.907+)	(-0.243)
	교육수준 →	0.085	0.066	0.010	0.024	-0.106
	실제근로시간	(1.263)	(0.921)	(0.091)	(2.277*)	(-1.349)
	자녀여부 →	0.512	1.011	0.625	0.258	0.011
	실제근로시간	(3.171**)	(5.269**)	(2.423*)	(9.072**)	(0.081)
	기술수준→	-0.242	-0.281	0.105	-0.143	-0.142
	실제근로시간	(-2.379*)	(-2.602*)	(0.711)	(-8.417**)	(-1.371)
	업무대체가능성	-0.154	-0.035	-0.229	-0.051	-0.035
→실제근로시간	(-2.607*)	(-0.627)	(-3.030**)	(-4.527**)	(-0.627)	
시간자율성→	0.022	-0.134	-0.110	-0.095	-0.081	
실제근로시간	(0.244)	(-1.176)	(-1.060)	(-6.558**)	(-1.140)	
유급노동의미	-0.001	-0.076	0.048	0.001	-0.001	
→실제근로시간	(-0.015)	(-1.095)	(0.938)	(0.140)	(-0.019)	
근로시간 선호	0.311	0.601	0.528	0.447	0.318	
— 실제 근로시간	(3.441**)	(7.336**)	(12.558**)	(29.052**)	(4.147**)	
Residual Variances	기술수준	0.460	0.687	0.642	0.646	0.588
		(13.491**)	(8.713**)	(52.597**)	(66.999**)	(12.604**)
	업무대체가능성	1.160	1.372	1.169	1.413	1.369
		(11.879**)	(8.446**)	(9.067**)	(61.537**)	(11.977**)
시간자율성	0.626	0.781	1.024	0.962	0.861	
	(15.264**)	(10.619**)	(10.023**)	(72.687**)	(12.604**)	
유급노동의미	1.047	1.430	1.853	2.111	2.199	
	(20.699**)	(14.793**)	(14.665**)	(95.372**)	(16.278**)	

주: † p<.10, * p<.05, **p<.01

다음으로 성별이 근로시간 선호와 실제 근로시간에 갖는 효과를 분해해보도록 한다. <표 7-12>를 보면 모든 분석대상국가에서 성별은 근로시간 선호와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확실한 총효과 및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며, 실제로 시간제 일자리에 일하는 경향이 높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성별이 근로시간 선호에 대해 갖는 간접효과는 한국과 미국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접효과를 분해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기술수준이 더 낮거나 업무대체성이 높아 시간제를 선호한다는 설명은 5개 모든 국가에서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대신 한국과 미국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시간자율성을 중시함에 따라 시간제를 선호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이 남성보다 유급노동의 의미를 경제적인 것에 두는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시간제를 선호하는 간접효과는 미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시간자율성을 거친 간접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별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간접효과는 스웨덴과 미국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를 분해해보면, 스웨덴에서는 여성이 업무대체가능성이 높아 시간제로 일하는 가능성이 높음이 확인되었다. 미국에서는 여성이 기술수준이 낮고, 업무대체성이 높으며, 시간자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시간제로 일하는 간접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성별의 간접효과는 어떤 경로도 유의하지 않았고, 직접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7-12〉 성별의 직접간접 및 총효과 분해

		스웨덴	영국	독일	미국	한국	
		Estimates (t값)	Estimates (t값)	Estimates (t값)	Estimates (t값)	Estimates (t값)	
근로 시간 선호	총효과	0.993 (7.967**)	1.247 (7.580**)	1.391 (7.713**)	0.753 (32.538**)	0.558 (4.815**)	
	직접효과	0.998 (7.891**)	1.235 (7.491**)	1.364 (7.675**)	0.740 (32.001*)	0.497 (4.242**)	
	총간접효과	-0.005 (-0.203)	0.012 (0.345)	0.027 (0.600)	0.014 (3.548**)	0.061 (1.926†)	
	간 접 효 과	성별→기술수준→ 근로시간 선호	0.002 (0.265)	0.019 (0.987)	-0.002 (-0.266)	0.000 (-0.225)	0.007 (0.619)
		성별→ 업무대체가능성→ 근로시간 선호	-0.014 (-0.672)	-0.002 (-0.131)	0.039 (1.394)	-0.002 (-0.963)	0.019 (0.866)
		성별→시간자율성 →근로시간 선호	0.007 (0.709)	0.003 (0.136)	0.000 (-0.015)	0.012 (4.523**)	0.031 (1.743†)
		성별→ 유급노동 의미→ 근로시간 선호	0.001 (0.124)	-0.008 (-0.678)	-0.010 (-0.449)	0.004 (3.090**)	0.003 (0.566)
	실제 근로 시간	총효과	1.241 (7.312**)	1.346 (6.581**)	2.110 (8.006**)	0.753 (25.979**)	0.502 (3.701**)
		직접효과	1.183 (6.953**)	1.296 (6.406**)	2.055 (7.791**)	0.736 (25.208**)	0.446 (3.210**)
		총간접효과	0.058 (1.697†)	0.051 (1.043)	0.055 (1.363)	0.017 (4.001**)	0.056 (1.553)
간 접 효 과		성별→기술수준→ 실제 근로시간	0.004 (0.273)	0.046 (1.363)	-0.003 (-0.354)	-0.004 (-2.030*)	0.023 (1.159)
		성별→ 업무대체가능성→ 실제 근로시간	0.056 (2.098*)	0.046 (1.363)	0.062 (1.684†)	0.014 (4.278**)	0.016 (0.620)
		성별→시간자율성 →실제 근로시간	-0.002 (-0.241)	0.002 (0.136)	0.000 (-0.015)	0.008 (3.896**)	0.018 (1.040)
		성별→ 유급노동 의미→ 실제 근로시간	0.000 (-0.015)	-0.011 (-0.728)	-0.004 (-0.424)	0.000 (0.140)	0.000 (-0.019)

주: † p<.10, * p<.05, **p<.01

제5절 소결: 결과의 요약과 해석

이 연구에서 다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시 차원과 국가 수준의 변수를 결합시켜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한 일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제도주의(institutionalism)에 기반한 비교사회정책학적 관점을 토대로, 각 국가의 복지제도나 시간제 일자리의 질과 규제정도 등에 따라 개인의 근로 결정과 선호가 달라지는지를 보고자 한 것이다. 둘째, 미시적 차원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근로에 대한 의식을 보면 여타의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일을 금전적 보상과 연결하는 경향이 강하고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는 서로 방해받은 경험이 적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여 일-가정 양립에 민감성이 낮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격적인 연구문제 두 가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개인의 '근로시간 선호'가 개인의 취향에 따른 것인지 혹은 상황과 구조에 제약된 것인지에 대해 본 연구결과는 주로 전자의 가능성을 확인해주고 있다. 첫째, 근로시간의 선호는 시간제 전환에의 권리성이나 일자리 질 등의 구조적인 요인에 좌우되기보다는 개인적인 요인들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숙련성 수준은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근로시간 선호와 실제 근로시간(전일제/시간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간자율성을 증시할수록 시간제를 선호한다는 결과도 근로시간 선호가 개인적 취향에 의한 것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들은 '선호이론'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와는 달리, 실제 근로시간의 결정에 대해서는 선호이론과 계급이론의 설명이 모두 타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근로시간 선호와 실제 근

로시간 간에는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실제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 개인의 근로시간 선호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다층분석, 경로분석), 시간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돈벌이 때문이 아니더라도 유급노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인식할수록 전일제보다 시간제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다층분석) 등은 실제 시간제 근무가 시간제에 대한 선호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선호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에 숙련수준이 낮을수록, 업무대체가능성이 높을수록 실제로 시간제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은 경향이 대부분의 국가들(한국 제외)에서 확인된 점(경로분석)은 계급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시간제 일자리가 전일제 일자리에 비해 더 낮은 기술수준의 직무와 대체가능한 업무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한편 근로시간 선호와 실제 근로시간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선호이론과 계급이론이 뚜렷하게 검증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 숙련성이 낮거나, 업무대체성이 높고 시간자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시간제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은 경향이 확인되어(경로분석), 미국의 상황에서는 젠더 차이가 선호이론과 계급이론 양자에 의해 일정부분 설명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8장 결론

제1절 결과의 종합

제2절 정책적 함의



제1절 결과의 종합

본 연구는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을 연구의 주제로 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복지의식으로 다루어져왔던 의식의 범주를 확대하여 근로와 관련된 의식을 포괄하고 사회정책 관련 의식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크게 다섯 가지의 연구 문제를 다루었다. 첫째,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을 그 의식을 기준으로 어떻게 집단화될 수 있는가? 둘째, 사회정책 관련 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사회정책 관련 의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넷째, 노인과 장애인 등 주요 이해집단의 의식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 다섯째, 근로에 대한 의식은 그 특징이 무엇인가?

사회정책 관련 의식의 구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정책 관련 의식은 11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어 의식을 서로 다른 차원의 하위 범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신뢰도분석 결과, 사회정책 관련 12개 문항이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 지지 수준'이라는 내용으로 지수화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들은 복지의식 분석에서 종속변수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잠재적 집단분석을 한 결과 우리나라 성인이 복지에 대한 의식을 중심으로 3개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복지확대 반대집단>, <복지확대 지지집단>, 그리고 <잔여복지지지집단>이 그 세 집단이다. <잔여복지지지집단>은 대체로 연령이 높은 응답자가 많고 <복지확대지지집단>과 비

교하여 재산과 소득이 높으며 근로연령대를 표적으로 하는 아동 보육과 교육비지원, 실업자 및 근로빈곤층 지원에 대하여 지지가 약한 특징을 보였다. 반면 <복지확대지지집단>은 근로능력자 지원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복지 영역에서 정부의 역할을 지지하고 있다. 이 집단은 대개 젊은 고용 불안정 집단으로 아동을 양육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며 소득과 재산이 적은 집단으로 추정된다. <복지확대반대집단>은 대부분의 복지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보였는데 근로연령층이 많고 안정적 고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소득과 재산도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의식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인을 집단 구분한 결과를 보면, 사회정책과 관련하여 단순히 반대와 지지 집단으로 상황을 이해하기보다 다양한 차원의 의식을 고려하여 국민의 의식 지형을 정교하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복지의식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재산과 소득으로 구성되는 계층, 복지이해관계 변수 중 복지수급여부, 주관적 인식 중 정치적 성향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계급은 그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경향을 보였으며 복지이해관계 중 연령과 성의 영향은 기대와 달라서 노인과 여성이 복지에 대한 정부책임에 부정적이었다. 잠재적인 복지수요가 복지에 대한 지지에 유효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계층 변수 중 그 동안 그 영향이 밝혀진 바 없는 재산의 영향은 매우 커서 우리나라에서 납세자로서의 이해관계가 매우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의 영향들은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분석의 대상이 되는 인구 집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종단분석과 노인 및 장애인집단의 의식분석에서 암시되었다.

복지의식의 변화를 보면 전체적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지지 수준은 평균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집단에 따라 그 변화의 방향과 기울기가 상이하였다. 연령이 높

을수록 지지가 낮았으나 그 하락의 속도가 느리게 나타났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복지의식이 다소 높았지만 빠르게 낮아지고 있었다. 소득의 영향은 연령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서 60세 미만의 연령대에서 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 학력이 높은 집단은 초기 친복지수준이 높지만 빠르게 하락하였다. 학력이 높은 노인의 경우에는 출발지점에서 지지도가 높았지만 그 하락의 속도는 높았다. 고학력의 노인들이 복지에 대한 실망과 지지철회가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용직 종사자는 높은 수준으로 복지를 지지하였고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경향이 있었다. 정부의 지원을 수급한 경험은 복지에 대한 지지가 낮아지는 속도를 늦추었다. 전반적으로 복지의식의 변화 궤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이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에 따라 상이하였다. 복지의식의 제고를 위한 전략도 집단에 따라 정교하여 질 필요가 재확인되었다.

노인과 장애인의 의식은 전체적으로 복지에 대한 지지의 수준도 다르고 정책 내용에 따라서 지지하는 수준이 상이하였다. 노인과 장애인은 비노인, 비장애인의 의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주로 해당 집단의 지원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지지가 더 강하여 이해관계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경우 세대균열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의 논지와 일맥상통한다. 한편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재산의 영향이 강해서 재산이 많을수록 반복지적이었으며 소득은 집단에 따라 달리 영향을 주었다. 노인의 경우에는 소득은 높을수록 복지에 대한 지지가 높아 일반 집단에 대한 분석결과와 상이하였다. 복지증세에 대한 요인의 영향 분석에서 노인복지서비스와 장애인복지서비스 수급 경험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탓으로 추정된다. 복지 지원 수급이 모두 복지의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만족도가 낮은 질의 수급경험은 오히려 복지에 대한 지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결

과이다.

근로에 대한 의식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근로의식이 일정한 경향을 특징을 보인다. 먼저 ‘직업이 돈 벌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에 대해 타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높고 ‘돈이 필요 없어도 유급노동을 즐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수준이 낮다. 직장이 가족생활을 방해하는 경험을 하였다는 응답과 가족생활이 직장생활을 방해하는 경험을 하였다는 응답이 모두 낮아서, 우리나라 국민의 일가족양립에 대한 민감성이 낮음을 암시하였다.

근로시간에 대한 선호와 실제 근로시간 분석에서는 대체로 우리나라의 고용안정성과 노동시장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근로시간에 대한 선호는 개인의 취향에 따른 것이지만 실제 근로시간의 결정에 대해서는 선호이론과 계급이론의 설명이 모두 타당함을 보여주었다. 근로시간 선호와 실제 근로시간 간에는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실제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 개인의 근로시간 선호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숙련성이 낮고, 업무대체가능성이 높아, 시간제로 일하는 경향이 나타난 점은 계급이론의 타당성도 어느 정도 지지해준다.

앞서 요약한 연구결과를 보면 기존 연구에서와 다소 상이한 결과 뿐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간과한 특이성의 발견도 있었다. 연구 결과 중 일부는 이후 연구의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일부 연구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이 재고될 필요성을 보여준다. 사회정책 관련 의식에 대한 연구와 사회정책의 기획은 복지 의식의 범주, 집단별 의식의 상이성, 의식의 변화에 좀 더 민감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련 요인에 대한 이해도 과거와 달리 정교한 수준으로 발전되어 나가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정책적 함의

사회정책의 발전 기반으로 관련 의식의 현주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된 의식을 이해하고 사회정책 발전에 긍정적인 의식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하지만 의식의 기반을 견고하게 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사회정책 관련 의식의 구성이 다양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 국민의 집단별 의식도 상이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의식의 변화와 의식에 대한 관련 요인의 영향도 집단에 따라 상이하다. 특정 사회정책의 개선이나 신설에서 이와 관련된 의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지지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학술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의 함의를 본다면 사회정책 관련 의식의 구성이 다양하므로 의식을 지수화하는 과정은 체계적이고 정교하여야 한다. 특정 범주의 의식만으로 복지의식을 지수화하는 과거의 연구방법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수화에 앞서 신뢰도 등 필요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분석의 표본 집단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노인인지, 장애인인지, 또는 근로능력자인지, 아니면 전 성인을 대표하는지)도 고려하여 지수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정책 관련 의식 중 특정 의식의 단면을 대변하는 범주로 의식을 지수화하는 방법도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해볼만하다. 예를 들어 크게 두 가지로 복지의식을 재구성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에 대한 지지와 취약인구집단과 기초 욕구충족을 위한 지원에 대한 지지로 복지의식을 대별하여 구성, 지수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선택이 되었든 그 분석에서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러한 선택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하고, 또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학술적인 함의를 더하면, 사회정책 관련 의식 결정요인에 대하여 짚어

야 한다. 사회정책 관련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만 우리 사회에서 복지의식을 강화하는데 주목할 지점들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복지의식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 요인의 선정과 통제를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술 연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근로에 대한 의식을 분석할 적절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는 점은 연구의 큰 장애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근로에 대한 태도는 사회정책에의 구상과 집행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근로에 대한 태도 및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정보를 얻기도 힘든 실정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정리해보면, 우선 사회정책과 관련된 의식이 매우 다양하며 각 내용이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정책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해야한다. 복지의식을 정책설계에 반영할 때, 의식의 내용 중 무엇을 고려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선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는 복지국가의 발전 기반의 견고함을 가늠하는 중요한 정보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특정 정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그 정책과 관련성이 큰 집단에 대한 분석으로 한정하여 볼 필요도 있다. 집단에 따라 의식도 영향요인도 상이하므로 해당 정책의 지지기반을 제고하는 대안도 다를 것이다.

복지에 대한 지지가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고학력자의 지지가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반면 복지수급자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하면 복지의 지지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제도의 합리적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지의 수급 경험은 복지에 대한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복지의 확대가 결국 복지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이 된다. 하지만 단순히

복지의 확충으로 수급자의 규모가 증가한다고 지지 기반이 견고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서비스 수급경험이 오히려 복지의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질의 지원을 수급하는 경험은 오히려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유발할 위험이 작지 않다. 따라서 복지제도가 확충발전되어야 하는데, 합리적으로 높은 수준의 복지로 설계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과 장애인의 의식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각 집단의 이해관계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의 확충에서 우리사회의 각 집단의 이해관계가 상충갈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향후 사회정책의 확충과정에서 각 욕구집단 간 이해의 조정과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 등에서 납득과 공감의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 강신욱(2011). 한국의 사회통합 및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권승(2012). 보육서비스에 대한 복지태도 형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8집 4호.
- 김사현(2010).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 복지제도의 보편성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효과: 도구변수를 활용한 접근법, 사회복지연구, 41(3).
- 김사현(2012).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효과: 성향점수매칭을 활용한 이중차이분석, 한국사회정책, 제19집 제1호.
- 김상균·정원오(1995). 90년대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25호, 1-33.
- 김수완(2011). 복지국가의 정치적 균열에 관한 연구: 공적 노후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7(2).
- 김신영(2010). 한국인의 복지의식 결정요인 연구: 국가의 공적책임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조사연구학회, 11(1).
- 김신영(2008). 한국 청소년의 복지의식 결정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노후복지 책임주체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9(1).
- 김영미·안상훈(2010). 한국 사회 정책행위자들의 복지인식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세미나. 2010.12.
- 김영란(1995).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순·여유진(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91, 211-240.
- 김지선·이훈(2008). 삶의 지향성에 따른 일과 여가의 의미 분석, 관광연구논총. 20(1), 79-100.
- 김태일·최하정(2011). 복지에 대한 정부역할 인식의 비교분석, 사회보장연구. 27(2), 331-356.

- 김형관(2011). 한국 사회 복지태도 결정에 지역구조가 미치는 영향, 전북대 석사 학위 논문.
- 김희자(1999). 한국인의 복지태도분화, 사회복지정책. 제8집(한국사회복지정책 학회 논문집).
- 김희진·전희정(2010). 일반 국민들의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미치는 영향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복지욕구, 복지인식 및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장연구, 26(2), 95-121.
- 노대명 외(2011). 한국인의 복지인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만희·최영(2009).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 연구: 복지인식, 계층, 자기이해(self-interest)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1).
- 류진석(2004).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vol. 56, no. 4, 79-101.
- 모지환·김행열(2009). 한국인의 복지인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동북아연구, 24(1), 179-199.
- 박미옥(2005).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주민의식 분석: 이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4(1).
- 박지향(2012). 복지제도에 대한 영국인들의 태도 변화 1983-2010: 실업을 중심으로. 영국 연구, 제27호.
- 백정미·주은선·김은지(2008). 복지인식 구조의 국가간 비교: 사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복지국가와 한국. 사회복지연구, 37, 319-344.
- 안상훈(2009). 한국의 친복지태도 결정요인과 그 경로구조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정책.
- 안상훈(2012). 복지정치 활성화 과정에서의 국민인식 변화 연구, 재정포럼. 2012. 3.
- 안치민(1995).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과 계급. 고려사회학논집, 제9집, 211-227.
- 오단이·김사현(2012). 공공복지와 민간복지활동의 관계에 관한 소연구: 공공복지 인식이 개인의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

- 복지정책, 39(2).
- 우아영(2000). 복지의식에 관한 사회계층간 비교연구. 가톨릭대학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 유범상·이현숙(2008). 영국의 복지유형과 의식의 괴리: 그 기원과 시사점. 사회복지연구, 38: 325-352.
- 이광훈·김권식(2012). 복지인식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준(quasi) 실험설계를 활용한 복지 지출가치성(VFM) 측정방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43(1).
- 이성균(2002). 한국사회 복지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국가의 복지책임지지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6집 2호, 205-228.
- 이아름·김사현(2010). 한국인의 복지의식 특성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이인재(1998) IMF관리체제 이후 한국인의 사회복지 의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2, 88-110.
- 이중섭(200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6(4).
- 이하나·이미라(2010). 한국인의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0(2).
- 이현주·안서연·박경희(2009). 가난한 사람들의 일과 삶: 심리사회적 접근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훈희·김윤태·이원지(2011). 한국의 복지태도와 건강보험 인식의 결정요인. 사회보장연구, 27(2), 1-25.
- 이행봉(1999). 신보수주의의 복지국가 인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부산정치학보, 제4호, 129-150.
- 손경미(2006). 일에 대한 태도와 성별차이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16(1).
- 신광영 외(2003). 경제위기와 한국인의 복지의식. 집문당.
- 신광영·조돈문·이성균(2000). 경제위기시대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계급론의 관점에 대한 소개,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회대회 논문집.

- 장귀연(2013).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의 계급구조.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0권 제3호, 12-40.
- 정현태·오윤수(2009). 한국의 사회복지 현실과 한국인의 복지의식: 롤즈의 정의론 관점. 사회복지정책, 36(1).
- 조돈문(2001). 복지의식의 계급효과와 공사부문효과. 산업노동연구, 제7권 제1호, 157-191.
- 조인영·김태일(2008). 정부역할 인식과 정책산출의 국제 비교. 한국정책학회보, 제17권 2호.
- 주은선·백정미(2007). 한국의 복지인식 지형: 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 203-225.
- 최균(2012). 시대정신인가? 포퓰리즘인가? 국민들의 복지의식 분석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최균·류진석(2000). 복지의식의 경향과 특징: 이증성. 사회복지연구, 제16호.
- 최숙희(2008). 중고령자의 근로관(Work Orientations)에 관한 국제비교.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2008. 9. 11.
- 최유석(2010).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동질성과 이질성: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지식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최유석(2011). 한국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분산: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지식의 역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1), 57-83.
- 한국장애인인권포럼(2009). 서울시 거주 장애인 정치성향 및 유권자 의식조사.
- 홍세희(2009).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 자료집. S&M 리서치 그룹.
- 황선자(2011). 노동조합의 복지수요와 재정전략:복지태도와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Abner, Kristin S.(2011). Determinants of Welfare Policy attitude: a contextual level analysis. *Sociological Spectrum*, Vol. 31 Issue 4, 466-497.
- Ahmed, S. A. and Jackson, D. N. (1979). Psychographics of Social

- policy decisions: Welfare assistance. *Th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5, No.4.
- Andolsek, D. M. and Stebe, J.(2004). Multinational Perspectives on Work Values and Commi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ross Cultural Management*, 4(2): 181-209.
- Andreß, Hans-Jürgen and Heien, Thorsten(2001). Four Worlds of Welfare State Attitudes? A Comparison of Germany, Norway, and the United Stat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 17 Issue 4, 337-356.
- Baslevant, Cem and Kirmanoglu, Hasan(2011). Discerning self-interested behaviour in attitudes towards welfare state responsibilities across Europ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20 Issue 4.
- Bean, C. and Papadakis, A. (1998). A Comparison of Mass Attitudes towards the Welfare State in Different Institutional Regimes, 1985-1990.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vol.10 No.3.
- Blekesaune, Morten(2007). Economic Conditions and Public Attitudes to Welfare Polici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 23 Issue 3, 393-403.
- Blekesaune, M. and Quadagno, J. (2003). Public Attitudes toward Welfare State Polic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24 Nation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9(5): 415-427.
- Bonoli, G. and Hausermann, S.(2009). Who wants what from the welfare state?. *European Societies*, 11(2).
- Blomberg, Helena and Kroll, Christian(1999). Race, Class, and Attitudes toward Social Welfare Spending: An Ethclass Interpretation. *Child Welfare*, Vol. 78 Issue 3, 315-337.

- Brooks, Clem and Manza, Jeff(2004). *The Welfare State, Public Opinion, and Power Resources Theory: Social Rights Support and Welfare State Regimes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Conference Papers-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2004 Annual Meeting, San Francisco, 1-43.
- Bullock, Heather E. (2004). From the Front Lines of Welfare Reform: An Analysis of Social Worker and Welfare Recipient Attitud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144 Issue 6, 571-588.
- Crompton, R. (2002). Employment, flexible working and the famil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3(4): 537-558.
- Crompton, R. and Harris, F. (1998). Explaining women's employment patterns: 'orientations to work' revisited.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9(1): 118-136.
- Dallinger, Ursula(2010). Public support for redistribution: what explains cross-national differenc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0(4): 333-349.
- Duménil, G. and Lévy, D. (2001). Costs and Benefits of Neoliberalism, A Class Analysis.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8(4).
- Edlund, Jonas(2003). The Influence of the Class Situations of Husbands and Wives on Class Identity, Party Preference and Attitudes Towards Redistribution: Swede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Acta Sociologica (Sage Publications, Ltd.)*, Vol. 46 Issue 3, 195-214.
- Eger, Maureen A.(2007). *The Limits of Altruism: Demographic Change and Attitudes towards the Welfare State*. Conference Papers-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2007 Annual Meeting.
- Emerson, M. O. and Van Buren, M. E.(1992). Conceptualizing Public

-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State: A Comment on Hasenfeld and Rafferty. *Social Forces*, 71(2): 503-510.
- Epstein, William M.(2004). Cleavage in American Attitudes toward Social Welfare. *Journal of Sociology & Social Welfare*, Vol. 31 Issue 4, 177-201.
- Esser, I. (2005). *Why Work?*. Swedish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 Estévez-Abe, M. (2005). Gender bias in skills and social policies: The varieties of capitalism perspective on sex segregation. *Social Politics*, 12: 180-215.
- Evans, Geoffrey(1993a). *Class Conflict and Inequality in Understanding Change in Social Attitudes*. ed. by Taylor, Bridget et. al., SCPR.
- Evans, Geoffrey(1993b). *Cross-national differences in Support for Welfare and Redistribution: an Evaluation of Competition Theories*. in International Social Attitudes the 10th BSA report: 185-208.
- Fagan, C. (2001). Time, money and the gender order: work orientations and working-time preferences in Britain. *Gender, Work and Organization*, 8(3): 239-266.
- Foster, Carly Hayden(2008). The welfare queen: race, gender, class, and public opinion. *Race, Gender & Class*, Vol. 15 Issue 3/4, 162-179.
- Fullerton, A. S. and Jeffrey, C. D. (2009). Racialization, asymmetry, and the context of welfare attitudes in the American states. *Journal of Political & Military Sociology*, Vol. 37 Issue 1, 95-12.
- Gallie, D. (2007). Welfare Regimes, Employment Systems and Job Preference Orientation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3): 279-293.

- Gallie, D. and Zhou, Y. (2011), The changing job skills of female part-time workers in Britain 1992-2006. *Human Resource Management Journal*, 21: 28-44.
- Gash, V. (2008). Preference or constraint? Part-time workers' transitions in Denmark,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Work, Employment and Society*, 22(4): 655-674.
- Gelissen, John(2001). Old-age pensions: individual or collective responsibility? An investigation of public opinion across European welfare states. *European Societies*, Vol. 3 Issue 4, 495-523.
- Ginn, J., Arber, S., Brannen, J., Dale, A., Dex, S., Elias, P., Moss, P., Pahl, J., Roberts, C., and Rubery, J. (1996). Feminist fallacies: a reply to Hakim on women's employment.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9(1): 167-174.
- Goerres, Achim and Prinzen, Katrin(2012a). Using mixed methods for the analysis of individuals: a review of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and an application to welfare state attitudes. *Quality & Quantity*, 26: 415-450.
- Goerres, Achim and Prinzen, Katrin(2012b). Can We Improve the Measurement of Attitudes Towards the Welfare State? A Constructive Critique of Survey Instruments with Evidence from Focus Group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109 Issue 3, 515-534.
- Greenwell, L., Leibowitz, A. and Klerman, J. A.(1989). Do Structural Contexts Matter? Macro-sociological Factors and Popular Attitudes towards Public Welfare Services. *Acta Sociologica (Taylor & Francis Ltd)*, Vol. 42 Issue 4, 319-335.
- Hakim, C. (2000). *Work-lifestyle choices in the 21st century:*

- preference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kim, C. (2003). Public morality versus personal choice: the failure of social attitude survey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4: 339-345.
- Hakim, C. (2006). Women, careers, and work-life preferences.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34(3): 279-294.
- Halldén, K., Gallie, D. and Zhou, Y. (2012). The skills and autonomy of female part-time work in Britain and Sweden.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30: 187-201.
- Han, Chunping(2006). *Public Attitudes toward Redistribution in the Reform-era China: Structural Cleavages and Institutional Impacts*. Conference Papers-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2006 Annual Meeting, Montreal.
- Hasenfeld, Y. and Rafferty, J. A.(1989). The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State. *Social Forces*, 67: 1027-1048.
- Häusermann, S. and Schwander, H.(2009a). *Who are the Outsiders and What Do They Want? Welfare State Preferences in Dualized Societies*. Paper prepared for delivery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September 3-6, 2009, Toronto, Canada.
- Häusermann, S. and Schwander, H.(2009b). *Identifying Outsiders across Countri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Patterns of Dualisation*. RECOWE Working Paper 09/2009.
- Hjerm, Mikael and Schnabel, Annette(2011). How much heterogeneity can the welfare state endure? The influence of heterogeneity on attitudes to the welfare state. *Nations and Nationalism*, Vol. 18 Issue 2, 346-369.

- Hult, C. and Svallfors, S. (2002). Production Regimes and Work Orientations: A comparison of six western Countri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8(3):315-331.
- Ibanez, Z. (2010). Part-time: beyond second best? Access to part-time employment: The case of education and local government in the Netherlands and the United Kingdom. *Time & Society*, 20(2): 171-196.
- Jæger, Mads Meier(2006). Welfare Regimes and Attitudes Towards Redistribution: The Regime Hypothesis Revisited.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2(2): 157-170.
- Jakobsen, Tor(2011). Welfare Attitudes and Social Expenditure: Do Regimes Shape Public Opin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101 Issue 3, 323-340.
- Jonas Edlund(2003). The Influence of the Class Situations of Husbands and Wives on Class Identity, Party Preference and Attitudes Towards Redistribution: Sweden, Germany and the United. *Acta Sociologica*, 46: 195-214.
- Jonung, C. and Ståhlberg, A-C. (2008). Reaching the top: on gender balance in the economics profession. *Economic Journal Watch*, 5(2): 174-192.
- Jordan, Jason(2010). Institutional Feedback and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Online First)*, XX(X): 1-24.
- Juros, T. V. (2012). Cohort and Welfare Regime Differences in Attitudes on State: Multilevel Analysis of 29 Countries. *Revista de Sociologia e Política*, Vol. 46 Issue 2, 415-450.
- Kan, Â M. Y.(2005). *Work orientation and wives' employment careers: an evaluation of Hakim's preference theory*. SER Working Paper

- Series No 2005-27. 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 Kenworthy, Lane(2009). The effect of public opinion on social policy generosity. *Socio-Economic Review*, Vol. 7 Issue 4, 727-740.
- Kenworthy, Lane and McCall, Leslie(2008). Inequality, public opinion and redistribution. *Socio-Economic Review*, Vol. 6 Issue 1, 35-68.
- Kim, Kyong Dong and Lee, Hae Young(1977). The Meaning of Work and Labor Commitment in Korea. *한국사회학*, 11(1): 7-18.
- Kitschelt, H. and Rehm, P. (2005). *Work, Family and Politics. Foundations of Electoral Partisan Alignments in Postindustrial Democracies*. Paper prepared for delivery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September 1-4, 2005, Washington, DC.
- Kjeldstad, R. and Nymoer, E. H. (2012). Part-time work and gender: worker versus job explanation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51(1/2): 85-107.
- Leahy, M. and Doughney, J. (2006). Women, work and preference formation: a critique of Catherine Hakim's preference theory. *Journal of Business Systems, Governance and Ethics*, 1(1): 37-48.
- Levine, Judith A. (2005). *Were the Assumptions behind Welfare Reform Right?: Comparing Recipients' Attitudes and Experience Pre- and Post-PRWORA*. Conference Papers-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2005 Annual Meeting, Philadelphia.
- Lewin-Epstein, N., Kaplan, A., Levanon, A. (2003). Distributive Justice and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State. *Social Justice Research*, Vol. 16 Issue 1.
- Linos, Katerina and West, Martin(2003). Self-interest, Social Beliefs, and Attitudes to Redistributio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 19 Issue 4, 393-409.

- Ljunge, Martin(2011). Increasing Demands on the Welfare State? Trends in Behavior and Attitudes. *CESifo Economic Studies*, Vol. 57 Issue 4.
- Martin, Michelle E.(2012). Philosophical and religious influences on social welfare policy in the United States: The ongoing effect of Reformed theology and social Darwinism on attitudes toward the poor and social welfare policy and practice. *Journal of Social Work*, Vol. 12 Issue 1, 51-64.
- Matthews, J. Scott and Erickson, Lynda(2005). Public Opinion and Social Citizenship in Canada. *Canadian Review of Sociology & Anthropology*, Vol. 42 Issue 4, 373-401.
- Mauldon, J. G., London, R. A., Fein, D. J., Patterson, R., Sommer, H.(2004). Political Preferences and Attitudes Towards the Welfare State: Cross-National Comparison of Germany, Sweden, the U.S. and Japan. *Population Research & Policy Review*, Vol. 23 Issue 5/6, 595-640.
- McRae, S. (2003). Constraints and choices in mothers' employment careers: a consideration of Hakim's preference theor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4(3): 144-149.
- Monnickendam, Menachem and Gordon, David(2010). Poverty, Government Policy and Public Opinion in Britain and Israel: A Comparative Analysis.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Vol. 44 Issue 5, 554-574.
- Muuri, Anu(2010). The impact of the use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or social security benefits on attitudes to social welfare polici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19 Issue 2, 182-193.
- Oesch, D. (2003). Labour Market Trends and the Goldthorpe Class Schema: A Conceptual Reassessment. *Swiss Journal of*

- Sociology*, 29(2): 241-262.
- Oesch, D. (2006). *Redrawing the Class Map: Stratification and Institutions in Germany, Britain, Sweden and Switzerland*. London: Palgrave Macmillan.
- Peck, Laura R.(2007). Stereotypes and Statistics: An Essay on Public Opinion and Poverty Measurement. *Journal of Poverty*, Vol. 11 Issue 3, 15-28.
- Pfeifer, Michaela(2009). Public Opinion on State Responsibility for Minimum Income Protection: A Comparison of 14 European Countries. *Acta Sociologica (Sage Publications, Ltd.)*, Vol. 52 Issue 2, 117-134.
- Preston, Ian and Ridge, Michael(1995). Demand for local public spending: evidence from the British Social Attitudes Survey. *The Economic Journal*, Vol.105, No. 430.
- Procter, I. and Padfield, M. (1999). Work orientations and women's work: a critique of Hakim's theory of the heterogeneity of women. *Gender, Work and Organization*, 6(3): 152-162.
- Quigley, Fran(1995). Social welfare and ideological attitudes of United States nonvoters: assessing the potential impact of the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Journal of Political & Military Sociology*, Vol. 23 Issue 2, 213-229.
- Raven, J., Achterberg, P., Van Der Veen, R., Yerkes, M. (2011). An Institutional Embeddedness of Welfare Opinions? The Link between Public Opinion and Social Policy in the Netherlands (1970-2004). *Journal of Social Policy*, Vol. 40 Issue 2, 369-386.
- Rodgers, Harrell R.(2009). The Multidimensionality of Public Opinion About Poverty and Welfare Populations. *Social Science Quarterly*, Vol. 90 Issue 3, 765-769.

- Sabbagh, C. and Vanhuysse, P. (2006). Exploring Attitudes Towards the Welfare State: Students' Views in Eight Democracies. *Journal of Social Policy*, Vol. 35 Issue 4, 607-628.
- Schneider, K. Sandra and Jacoby, William G. (2007). Reconsidering the linkage between public assistance & public opinion in the American welfare stat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7, 555-566.
- Stier, H. & Lewin-Epstein, N. (2003). Time to Work: a comparative analysis of preferences for working hours. *Work and Occupations*, 30(3): 302-326.
- Svallfors, Stefan(1995). The End of Class Politics? Structural Cleavages and Attitudes to Swedish Welfare Policies. *Acta Sociologica (Taylor & Francis Ltd)*, Vol. 38 Issue 1, 53-74.
- Svallfors, Stefan(1997). Worlds of welfare and attitudes to redistribution: a Comparison of Eight Western Nation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 13, No. 3.
- Svallfors, Stefan(1999). Political trust and attitudes towards redistribution. *European Societies*, Vol. 1 Issue 2.
- Svallfors, Stefan(2004). Class, Attitudes and the Welfare State: Sweden in Comparative Perspective.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Vol. 38 Issue 2, 119-138.
- Svallfors, Stefan(2008). The generational contracts in Sweden: age-specific attitudes to age-related policies. *Policy & Politics*, 36(3), 381~396.
- Svallfors, Stefan(2011). A Bedrock of Support? Trends in Welfare State Attitudes in Sweden, 1981-2010.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Vol. 45, No. 7.
- Taylor-Gooby, P. (1985a). *Public Opinion, Ideology and State Welfare*.

- Routledge and Kegan Paul.
- Taylor-Gooby, P. (1985b). Attitudes of Welfare. *Journal of Social Policy*, 14(1): 73-81.
- Taylor-Gooby, P.(1993). *What Citizens want from the State, in Understanding Change in Social Attitudes*. ed. by Taylor, Bridget et. al., SCPR.
- Tomlinson, J. (2006). Routes to part-time management in UK service sector organizations: implications for women's skills, flexibility and progression. *Gender, Work and Organization*, 13(6): 585-605.
- Wald, Pamela(2005). *Explaining Welfare Attitudes among African-Americans, Latinos, and Whites*. Conference Papers-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Annual Meeting, Philadelphia.
- Walters, S. (2005). Making the best of a bad job? Female part-timers' orientations and attitudes to work. *Gender, Work and Organization*, 12(3): 193-216.
- Weber, Max(1972). *Wirtschaft und Gesellschaft: Grundriss der verstehenden Soziologie*, Aufl. 5. Tübingen: J. C. B. Mohr.
- Weiss-Gal, Idit and Gal, John(2007). Social workers' attitudes towards social welfare polic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16 Issue 4, 349-357.
- Williams, A. Paul(1989). Social origins and elite politics in Canada: The impact of background differences on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state. *Canadian Journal of Sociology*, Vol. 14 Issue 1.
- Wong, T. K., Wan, S. P. and Law, K. W.(2009). Immigration and Natives' Attitudes towards the Welfare State: Evidence from the European Social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18 Issue 2, 142-152.

Yu, Wai Kam(2006). The reforms of health care finance in Hong Kong and urban China: A mixed attitude to social welfare. *Critical Social Policy*, Vol. 26 Issue 4, 843-864.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판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회비납부

-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019-219956-01-014 (예금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3-01	근거중심보건의정확에 필요한 연구근거 현황 및 활용	김남순
연구 2013-02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3-03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구조 및 경영효율성에 관한 연구	김대중
연구 2013-04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위상과 권리	윤강재
연구 2013-05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정기혜
연구 2013-06	화장품 및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중심적 연구	김정선
연구 2013-07	보건의료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박은자
연구 2013-08	진료비지출 요인분석 및 거시적 관리방안	신현용
연구 2013-09	의약품 정책이 의사의 처방에 미친 영향 연구	박실비아
연구 2013-10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김동진
연구 2013-11	한국 의료의 질 평가와 정책과제 I: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 설계	강희정
연구 2013-12	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 정책수립	원종욱
연구 2013-13	소득분배 악화의 산업구조적 원인과 대응 방안	강신욱
연구 2013-14	소득계층별 순조세부담의 분포에 관한 연구	남상호
연구 2013-15	저소득층 현금 및 현금서비스 복지지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김태완
연구 2013-16	기회의 불평등 측정에 관한 연구: 성장배경을 중심으로	김문길
연구 2013-17	2013년 빈곤통계연보	임완섭/노대명
연구 2013-18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한중일의 최근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노대명
연구 2013-19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이현주
연구 2013-20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3차): 취약계층의 삶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3-21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지역단위 분석 연구	박세경
연구 2013-22	사회복지영역의 평가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정홍원
연구 2013-23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김성희
연구 2013-24	장애인지원서비스의 질과 공급특성 분석 연구	박수지
연구 2013-25	복지재정 DB구축과 지표 분석	박인화
연구 2013-26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재정 형평화 연구: 재정분단체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고제이
연구 2013-27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신화연
연구 2013-28	사회보장 재원조달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유근춘
연구 2013-29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현황과 대책	정영철
연구 2013-30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특성	정은희
연구 2013-31-01	한중일 인구동향과 국가 인구전략	이삼식
연구 2013-31-02	인구예측모형 국제비교 연구	이삼식
연구 2013-31-03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신윤정
연구 2013-31-04	보육서비스 공급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김은정
연구 2013-31-05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김미숙
연구 2013-31-06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여유진
연구 2013-31-07	출산·보육 통계생성 및 관리효율화 연구	도세록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3-31-08	가구·가족의 변동과 정책적 함의	김유경
연구 2013-31-09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 자질 향상 방안: 고령 임산부의 출산 실태와 정책 과제	이소영
연구 2013-31-10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일차의료기관 모형개발	황나미
연구 2013-31-11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분석을 위한 지역 추적조사: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오영희
연구 2013-31-12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한국 가족주의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외부위탁
연구 2013-31-13	남북한 통합 시 적정인구 연구	이삼식
연구 2013-31-14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정경희
연구 2013-31-15	고령화 대응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전망과 공급체계 개편연구	이윤경
연구 2013-31-16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점에서의 공적연금제도 개편 방안	윤석명
연구 2013-31-17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선우덕
연구 2013-31-18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정립방안연구: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김진수
연구 2013-31-19	효과적 만성질환 관리방안 연구	정영호
연구 2013-31-20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외부위탁
연구 2013-31-21	여성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외부위탁
연구 2013-31-22	농촌 노인일자리의 현황과 정책과제	외부위탁
연구 2013-31-23	평생교육관점에서 바라본 노년교육의 현황과 정책과제	이윤경
연구 2013-32-1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영향평가 및 지식포털운영	서미경
연구 2013-32-2	건강영향평가TWC성과평가 및 건강행태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격차감소를 위한 전략평가	최은진
연구 2013-33	아시아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건강보장	홍석표
연구 2013-34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구(4년차)	정은희
연구 2013-35	2013년 친서민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III: 사회서비스산업-제3섹터-고용창출 연계 모델	이철선
연구 2013-36	2013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오미애
연구 2013-37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빅 데이터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송태민
연구 2013-38	2013년 사회정신건강 연구센터 운영: 한국사회의 갈등 및 병리현상의 발생현황과 원인분석 연구	이상영
연구 2013-39	2013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센터 운영	김승권
연구 2013-40-1	2013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이현주
연구 2013-40-2	2013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신규 표본가구 통합DB(KOWEPS_Combined)을 중심으로	최현수
연구 2013-41	2011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II): 만성질환관리, 일반의약품이용, 임신출산, 부가조사	최정수
협동 2013-1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오영호
협동 2013-2	가임기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	이상림